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000890-01



생애주기별 융합형 보장정책 모델 개발

2022. 07.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학회

교육부

제 출 문

교육부 귀중

본 보고서를 「생애주기별 융합형 보장정책 모델 개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7.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상옥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제2장 신공공성 기반 사회정책 보장영역 및 내용	5
1. 신공공성 기반 사회정책 보장영역.....	5
1) 신공공성.....	5
2) 신공공성 기반 사회정책 보장영역의 의의.....	9
2. 신공공성 기반 생애주기별 보장영역 재정립의 배경.....	11
1) 디지털 네트워크사회 구조변화에 따른 위험·갈등관리 요구 증대.....	11
2) 뉴노멀 코로나 사회위기 선제대응형 국가·정부 역할 요구 확대.....	12
3) 뉴노멀·제4차 산업혁명시대 공정사회 가치 확산위한 사회정책 설계 필요.....	13
4) 뉴노멀 시대 신속 대응과 사회전반 역량 강화 통한 포용적 사회정책 구현.....	14
3. 생애주기별 보장영역 및 보장내용.....	16
1) OECD BLI(Better Life Index).....	16
2) 삶의 질 유사 지표.....	20
3) 사회정책의 보장영역.....	25
4) 생애주기별 사회 보장영역 재정립.....	29
제3장 한국형 정책조합 新 사회정책 모형 개발	47
1.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과 정책수단 및 조합.....	47
1) 정책수단의 연구 경향.....	48

2) 선행연구.....	49
3) 정책수단의 정의 및 유형.....	51
4) 정책수단 조합.....	58
5) 사회관계장관회의 분야별 정책수단 및 조합 현황.....	60
6) 사회관계장관회의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및 조합 현황.....	64
2.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과 신공공성.....	77
1)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의 신공공성 우선순위.....	77
2)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의 신공공성과 정책수단 및 조합.....	81
3. 사회정책 분야 및 영역별 추진체계 네트워크 분석.....	88
1) 사회관계장관회의 분야별 안건상정 연결망.....	88
2)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추진체계 연결망.....	99
4. 한국형 新 사회정책 모형.....	118
1)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	118
2) 新 사회정책 보장 모형 도출.....	124
 제4장 한국형 新 사회정책 구현 법·제도적 방안.....	129
1. 기본 방향.....	129
1) 한국형 新사회정책 구현 역할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사회관계장관회의.....	129
2) 사회부총리의 정책조율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132
3) 한국형 新 사회정책 정책조합 모형을 활용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135
4) 한국형 新 사회정책 정책조합 모형 범부처 확산 노력과 성과 도출.....	135
 참고문헌.....	137

그 림 차 례

<그림 1> 2022년 사회정책 방향	2
<그림 2> 연구 전략 및 방법	4
<그림 3> 소셜미디어의 영향	11
<그림 4> 사회불안 및 위기에 대한 국제간 비교분석 결과	13
<그림 5> 우리나라 OECD BLI 순위 (`11-`19)	16
<그림 6> 우리나라 OECD BLI 영역별 순위 현황 (`19)	18
<그림 7> 우리나라 OECD BLI 영역별 순위 현황 (`19)	19
<그림 8> 우리나라 OECD BLI 세부지표 순위 현황 (`19)	20
<그림 9> 사회정책 관련부처 안건상정 연결망	89
<그림 10> 포용 분야 사회정책 관련부처 안건상정 연결망	91
<그림 11> 안전 분야 사회정책 관련부처 안건상정 연결망	93
<그림 12> 혁신 분야 사회정책 관련부처 안건상정 연결망	95
<그림 13> 사회통합 분야 사회정책 관련부처 안건상정 연결망	97
<그림 14> 교육 영역 관련 부처 연결망	100
<그림 15> 안전 영역 관련 부처 연결망	102
<그림 16> 고용·임금영역 관련 부처 연결망	103
<그림 17> 돌봄 영역 관련 부처 연결망	105
<그림 18> 가족·공동체 영역 관련 부처 연결망	106
<그림 19> 환경 영역 관련 부처 연결망	108
<그림 20> 건강 영역 관련 부처 연결망	109
<그림 21> 행정서비스 개선 영역 관련 부처 연결망	111
<그림 22> 여가 영역 관련 부처 연결망	113
<그림 23> 공정사회 구현 영역 관련 부처 연결망	114
<그림 24> 사회정책 보장 모형 개요	124

표 차례

<표 1> 뉴노멀시대 신공공성	6
<표 2> 우리나라 OECD BLI 순위 (`11~`19)	16
<표 3> 우리나라 OECD BLI 세부영역 및 지표별 순위 (`19)	17
<표 4> 우리나라 OECD BLI 영역별 순위 현황 (`19)	19
<표 5> 우리나라 OECD BLI 세부지표 순위 (`19)	19
<표 6> 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지표 예시	22
<표 7> 2000년대 초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영역 구분	23
<표 8>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	24
<표 9> 통계청과 OECD 삶의 질 지표 비교	25
<표 10> 사회정책의 법적 개념	27
<표 11> 사회정책 관련 중앙 부처 주요 정책 계획	28
<표 12> 사회정책 영역별 주무부처 및 관련부처	29
<표 13> 각 삶의 질 지표와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비교	30
<표 14> 생애주기별 안건수	31
<표 15> 영유아기 관련 안건 현황	32
<표 16> 영유아기 안건 관련 부처	32
<표 17> 학령기 관련 안건 현황	33
<표 18> 학령기 안건 관련 부처	33
<표 19> 청년기 관련 안건 현황	34
<표 20> 청년기 안건 관련 부처	35
<표 21> 중장년기 관련 안건 현황	35
<표 22> 중장년기 안건 관련 부처	36
<표 23> 노년기 관련 안건 현황	37
<표 24> 노년기 안건 관련 부처	37
<표 25> 사회정책 보장영역과 생애주기별 보장 내용(안)	38

<표 26> 연구흐름도	48
<표 27> 정책수단 연구의 변화과정	49
<표 28> 정책수단 연구 - 이론중심	50
<표 29> 정책수단 연구 - 사례중심	50
<표 30> 정책수단의 정의	51
<표 31> 정책 수단의 유형	52
<표 32> Hood의 정책도구 분류	53
<표 33> 정책수단 분류를 위한 분석 틀	57
<표 34> 정책수단 혼합유형	59
<표 35> 사회관계장관회의 분야별 정책수단 현황	61
<표 36> 사회관계장관회의 분야별 정책수단 조합 현황	63
<표 37> 사회관계장관회의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현황	65
<표 38> 사회관계장관회의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조합 현황	68
<표 39> 교육 영역 정책조합 사례	70
<표 40> 안전 영역 정책조합 사례	71
<표 41> 고용·임금 영역 정책조합 사례	71
<표 42> 돌봄 영역 정책조합 사례	72
<표 43> 가족·공동체 영역 정책조합 사례	72
<표 44> 환경 영역 정책조합 사례	73
<표 45> 건강 영역 정책조합 사례	73
<표 46> 행정서비스 개선 영역 정책조합 사례	74
<표 47> 여가 영역 정책조합 사례	75
<표 48> 공정사회 구현 영역 정책조합 사례	75
<표 49> 주거 영역 정책조합 사례	76
<표 50> 사회관계장관회의 분야별 신공공성 핵심가치 중요도	77
<표 51> 사회관계장관회의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신공공성 핵심가치 중요도	79
<표 52>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의 신공공성과 정책수단 현황	82

<표 53>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의 신공공성과 정책수단 조합 현황	84
<표 54> 사회정책 보장영역에 대한 신공공성과 정책수단의 상관분석 결과	86
<표 55> 사회정책 보장영역에 대한 신공공성과 정책수단 조합의 상관분석 결과	87
<표 56> 사회정책 관련부처 안건상정 연결망 중심성(Centrality) 결과	89
<표 57> 포용 분야 사회정책 관련부처 안건상정 연결망 중심성(Centrality) 결과	92
<표 58> 안전 분야 사회정책 관련부처 안건상정 연결망 중심성(Centrality) 결과	93
<표 59> 혁신 분야 사회정책 관련부처 안건상정 연결망 중심성(Centrality) 결과	96
<표 60> 사회통합 분야 사회정책 관련부처 안건상정 연결망 중심성(Centrality) 결과	98
<표 61> 종합요약: 사회정책 분야별 고유벡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상위 부처	99
<표 62> 교육 영역 관련 부처 중심성	101
<표 63> 안전 영역 관련 부처 중심성	102
<표 64> 고용·임금 영역 관련 부처 중심성	104
<표 65> 돌봄 영역 관련 부처 중심성	105
<표 66> 가족·공동체 영역 관련 부처 중심성	106
<표 67> 환경 영역 관련 부처 중심성	108
<표 68> 건강 영역 관련 부처 중심성	110
<표 69> 행정서비스 개선 영역 관련 부처 중심성	111
<표 70> 여가 영역 관련 부처 중심성	113
<표 71> 공정사회 구현 영역 관련 부처 중심성	114
<표 72> 사회관계장관회의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주무 부처 및 관련 부처 비교	116
<표 73> 전문가 조사 결과: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유형 우선순위(평균)	118
<표 74> 전문가 의견: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세부 정책수단 활용 우선순위(평균)	120
<표 75>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유형 및 세부 정책수단 활용 우선순위(평균) 비교 ..	122
<표 76> 사회정책 보장 모형(안)	126
<표 77> 사회부총리제 도입 후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및 안건 현황	130
<표 78>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및 안건 현황	130
<표 79> 2015~2021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현황 분석('21.11.24 기준)	130

<표 80> 2015~2021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종류별 현황	131
<표 81> 2015~2021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 주관부처 현황	131
<표 82> 사회관계장관회의 세부 과제별 현황	132
<표 83> 사회관계장관회의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중심성 상위 부처	135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한국 사회는 많은 분야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뉴노멀(New-normal)이란 2000년대 이후 만연된 저성장, 저소비, 저 수익률,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과거 산업사회와 대비되는 사회 경제 현상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은 대면 위주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근거한 그동안의 개인과 조직의 행동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디지털기술이 전 영역에 확산되면서 기존의 탈근대화·탈산업화 시대의 변화 양태와 완전히 새로운 미래 사회의 모습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폭의 변화와 함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이제복 & 최상옥, 2018).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공공보건이나 감염·의료서비스의 대처와 개선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정치·문화 등 전 부문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최상옥, 2016).

AI, 로봇, 블록체인 등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제 영역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지만, 한편 디지털 양극화 및 정보 보안 등 병리 현상이 동반되는 새로운 고위험 디지털사회의 출현이 우려되고 있다. 새로운 고위험 디지털 사회의 출현은, 지금까지 발전주의적 성장패러다임에 익숙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저출산·고령화 이슈들과 디지털 사회의 복잡한 난제들의 문제해결자로서의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과거의 시각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뉴노멀 코로나 현상과 제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혁신의 결합은 경제, 기술, 노동,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측하기 어렵고 그 규모와 발생가능성도 높은 초위험(super risk)과 위기로 특징된다. 특히, 뉴노멀 코로나·제4차

산업혁명시대 복잡·다양·급변동성은 직면한 사회 전반적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위험관리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2022년도 1월 26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사회 정책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품격 높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 부를 비롯한 총 22개 사회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공정·혁신·포용 등 4개 분야 52개의 핵심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림 1> 2022년 사회정책 방향

더 견고하고 안전한 공정사회		더 따뜻한 혁신적 포용사회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역량 배양	
감염병 대응	의료 공공성과 마을 건강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혁신 인재	신산업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생활 안전	범죄·폭력·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일터와 살터를 마련합니다.	문화 강국	K-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 세계적 문화 강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합니다.
환경 안전	미세먼지, 폐기물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합니다.	데이터 사회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을 촉진해 증거기반 합리적인 신뢰사회를 구축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정 사회		지속 가능한 포용 사회	
출발선 공정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한 근로·사회 여건을 만들어갑니다.	아동 청소년	영유아기 지원을 확대하고 위기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투명한 행정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 안전망	사회적 약자 교육·문화·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총력을 경주합니다.
공정 사회 문화	공익신고자 보호 등 사회 내 공정 문화를 확산합니다.	균형 발전	소멸 위기 지역과 활력 넘치는 지역 간 상생 방안을 도출합니다.

*출처: 교육부 (2022), 2022년 사회정책 방향 보도자료(2022.1.26.).

종합하면, 뉴노멀 코로나·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 영역은 직면한 “사회현안 해결대책” 외에도 “모든 국민의 일상적 삶을 위한 보장적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실천적으로, 생애주기별 불확실성·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多)부처·정책의 효과적 융합모델 마련과 新 사회정책 모형 구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과 거버넌스 구축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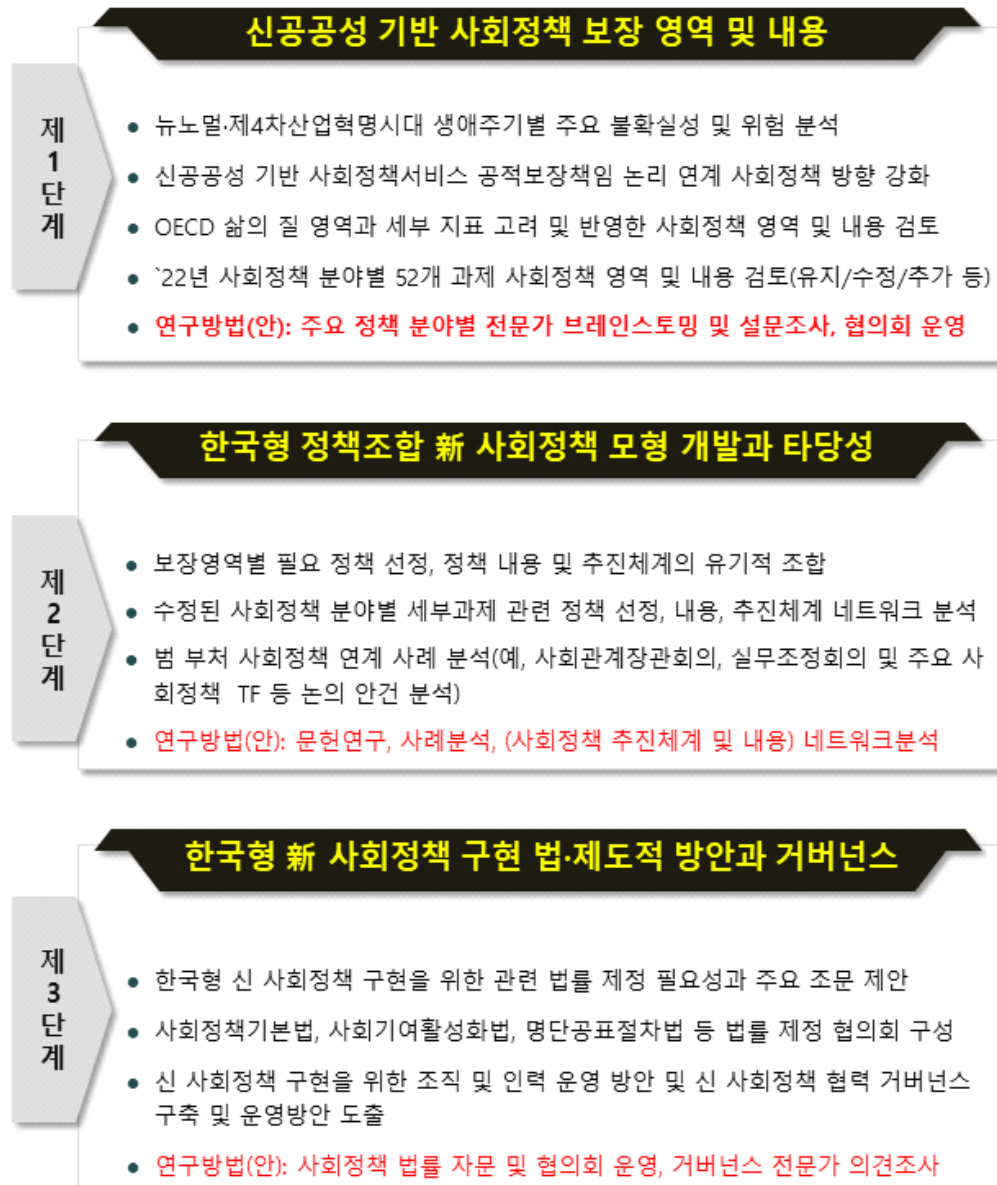
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사업은 뉴노멀·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급변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품격 높은 사회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생애주기별 사회정책의 보장영역과 내용을 재정립한다.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주요 불확실성·위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장영역 및 보장 필요 내용을 신공공성 가치(예, 인본적 보장성, 공유된 책임성, 민첩성, 포용적 공감성, 종합적 다양성, 적극적 중립성 등)와 연계하여 검토한다. 또한, OECD 삶의 질 11개 영역(주거, 소득, 노동,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삶의 균형)과 세부 지표 관련 정책 영역 검토와 사회정책과의 정책 내용 연관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22년도 4대 영역별 52개 중점추진과제와 ‘22년도 사회관계장관회의 상정안건 총 70개 과제에 대하여 신공공성 기반과 OECD 삶의 질 영역 및 세부지표를 고려한 뉴노멀시대 생애주기별 사회정책 보장 영역과 필요 보장 내용을 재정립한다.

둘째, 정책 조합을 통한 융합형 新 사회정책 모형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보장영역별 필요 정책과 내용 및 추진체계의 유기적 조합을 위하여 수정된 사회정책 분야별 세부과제 관련 내용 추진체계를 네트워크 분석한다. 분석을 위하여 범 부처 사회정책연계 사례(사회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 및 주요 사회정책 TF 등)의 안건을 활용한다. 또한, 정책도구론적 관점에서 정책의 유형을 도구적으로 분류하고 융합형 新 사회정책 모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新 사회정책 모형 구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과 거버넌스 구축·운영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조문 내용(예, 사회정책 기본법, 사회기여 활성화법, 명단공표 절차법)을 제안한다. 최종적으로 新 사회정책 구현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과 新 사회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도출한다.

<그림 2> 연구 전략 및 방법



제2장 신공공성 기반 사회정책 보장영역 및 내용

1. 신공공성 기반 사회정책 보장영역

1) 신공공성

행정학계에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60-70년대 과학적 관리주의와 논리적 실증주의에 대한 회의와 문제해결 학문으로서 적실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괴리로부터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80년대 Blacksburg Manifesto 선언을 통한 행정의 자기 성찰과 헌법적 가치 강조,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사고와 시장과 경쟁·효율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대두와 공공성 훼손, 2000년대 민주적 시민의식과 시민 봉사 강조의 공공성 회복 신공공서비스론과 뉴거버넌스론, 2010년대 이후 정부 및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분의 자원과 활동을 총 동원하여 국가경쟁력 제고를 강조하는 범정부적 접근의 공공성 강조로 이어져 왔다.

공공성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사회구성원이 다수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공평하게 함께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백완기, 2007). 그동안 공공성의 개념은 신자유주의적 정부 개혁 비판의 도구적 개념으로 활용되었고, 행정의 핵심 공공가치로의 논의로 확장하거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적실성(relevance)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뉴노멀시대에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가와 정부의 지향가치로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최상욱, 2016~2022). 그 중에서 기존의 공공성 논의와 뉴노멀시대 신공공성을 정부역할, 책임성 범위, 정부개입·규제, 정부혁신·관리, 생산·자원배분, 행정속도와 절차 등의 차원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뉴노멀시대 신공공성

공공성 차원	20세기 산업화시대 공공성	21세기 뉴노멀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AI시대 공공성
정부역할(지향목표)	도구적 효율성	인본적 보장성
책임성과 자율성 범위	개별적 자율성	공유적 자율성
정부개입 및 규제	수동적 중립성	적극적 중립성
정부혁신과 관리	제한적 다양성	종합적 다양성
생산 및 자원배분	경쟁적 효과성	포용적 공감성
행정속도와 절차	적법절차(Due Process)	민첩성(Agility)

*출처: 최상욱(2016) 뉴노멀시대 신공공성 탐색; 최상욱(2020)뉴노멀 코로나 위기관리 거버넌스 제작성.

(1) 인본적 보장성

인본적 보장성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주체나 전달방식에 상관없이 국가와 정부가 목표 수준의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장하는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의 수준은 도구적·선택적이 아닌 인본적·보편적인 것을 의미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증가하였는데, 서비스의 질 저하와 취약계층 소외 등 공공성의 훼손을 가져왔으며, 뉴노멀시대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의 증가와 사람·사물·기술의 초융합과 연결로 공공서비스 편중과 격차 심화로 (적정)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공공성의 심각한 침해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21세기 사회정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사회서비스 제공에 민간 참여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공공성도 높일 수 있는가이며, 독일 공법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된 보장국가는 공익 실현을 위해 민간의 동력을 활성화하고 적합한 보장 규율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이에, 범정부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를 통한 민간과의 협력자, 공익의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국가와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지향해야 할 사회정책의 목표와 상위 가치로 인본적 보장성이 제시된다.

(2) 공유적 책임성

공유적 책임성은 타인 혹은 타 조직으로부터 명령이나 구속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결정과 의지로 책임성과 자율성을 공유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부문이 다양화되고 경계가 모호해지는 뉴노멀시대에 시민사회의 주체로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문제나 사회적 의제를 토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적 가치이다. 뉴노멀시대의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s)에 대비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유된 자율성에 기반한 거버넌스의 운영은 과거의 행정의 수직적·단절적 기능분화에 서 수평적·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개인, 단일부서, 단일조직의 개별적 성과와 책임이 아닌 연계된 개인들과 협력 조직들의 총체적 공유된 성과와 책임의 공유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동안 시장주의에 대한 맹신과 경쟁 논리, 그리고 효율성에 경도된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성의 훼손을 가져왔는데, 정책과정에 있어서 시민 및 시민사회의 공유된 자율성과 책임성 공유는 시장자본주의의 폐해와 모순을 시정하고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뉴노멀시대에 사회정책 목표 설정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요구되는 핵심 가치이다.

(3) 적극적 중립성

적극적 중립성은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입장에서 사회서비스의 분배 및 집단 간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규범적 가치이다. 초위험 뉴노멀시대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약자나 특정 집단의 입장을 사회정책의 조정자로서 조율하는 적극적 역할이 기대되는데, 정부 개입을 통한 공정사회의 구현 원칙으로서 적극적 중립성은 변화된 시대가 요구하는 공적 가치 중의 하나이다. 수동적 중립성이 단순한 제3자적 관찰자나 게임의 운영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면, 적극적 중립성은 적극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힘의 불균형 심화로 인한 구조화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약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규범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적극적 중립성은 경제적, 정치적 힘의 불균형 심화로 인한 구조화된 불평등의 완화 및 극복

을 위한 사회정책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4) 종합적 다양성

종합적 다양성은 개인과 조직의 차이(difference)를 인식하고 차이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통해 가치와 의미를 부여 하는 것이다. 공공성 논의에서 다양성(diversity)은 이질적인 문화와 특성을 지닌 조직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된다(Pitts, 2010). 다양성의 근거도 과거에는 인종, 성별, 나이, 소득, 지역 등 신체적·물리적 측면에 제한적이었다면, 최근에는 믿음, 신념체계, 종교, 첨단기술수용 등 문화적·심리적·기술적 측면까지 확장하고 있다. 뉴노멀시대의 초연결사회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집단 간 상호작용과 불확실하고 고위험의 사회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들과 조직들 간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므로 다양하고 이질적 문화와 특성을 지닌 연합된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위한 사회정책 실현의 준칙으로 종합적 다양성에 주목해야 한다. 뉴노멀시대에 문화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과 조직을 통합시키고 유지하는 종합적 다양성은 신공공성의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5) 포용적 공감성

포용적 공감성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한 감정적 동조 현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연결고리 역할, 사회 정의의 구현, 공공 문제해결 등에 요구되는 공적 가치로서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정의와 같은 내용적 정당성을 경쟁적이 아닌 포용적인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회문제 해결과정이 기능적 접근이었다면, 뉴노멀시대에는 타인이 겪는 고통이나 불행이 자신의 겪는 고통과 불행이라고 감정이입을 통한 상호이해의 공감과 포용이 요구된다. 뉴노멀시대의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 내는 불평등과 경쟁에서 낙오된 사회적 소외계층 보호가 기대되는데, 공감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이들 소외그룹을 적극적으로 보듬어 안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포용적 공감적 사회정책을 펴야 한다. 포용적 공감성은 사회서비스의 생산과 자원배분 과정이 끝난 이후의 단계에서 요구되는 공

적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의 공공부문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의 개입이 요구된다.

(6) 민첩성(agility)

민첩성은 공공서비스 양적 질적 수준에 대한 국가의 최종적 보장·확증과 동시에 그 서비스를 신속하고도 기만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뉴노멀시대에 사회문제의 복잡성·불확실성·급변동성은 기존의 문제해결 방식이나 접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의 문제 진단·해결을 빠르게 요구하고 있다. 전통 관료제 국가에서 표준화된 업무수행 절차나 매뉴얼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의 준수는 코로나-19 상황 같이 불확실한 위기 상황이나 재난 현장에서 요구되는 시민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민첩성은 신속하고 기민한 행정절차와 속도를 지향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현장수요 및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고 규범화를 위한 혁신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디지털 혁신 기술 활용과 함께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정책 혁신체계 구축과 대응이 필요하다.

2) 신공공성 기반 사회정책 보장영역의 의의

앞서 논의한 신공공성에 기반한 사회정책 보장영역의 재정립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주요 불확실성·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장 영역과 보장 필요 내용 정립하기 위한 핵심 상위 가치로 신공공성의 인본적 보장성을 강조한다. 즉,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국가와 정부가 최종적으로 보장책임 역할을 수행하는 인본적 보장성은 사회정책 보장영역과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상위의 핵심 가치이다.

둘째, 보장영역별 필요한 정책 선정, 정책 내용, 그리고 추진체계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책임 공공가치로 공유된 책임성의 강조이다. 개별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정책 과정을 범정부적·전주기적 관점에서 개별적 책임성의 추구가 아닌 책임성과 자율

성을 함께 공유하고 총합적 성과 책임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공공가치의 강조이다.

셋째, 뉴노멀시대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보장영역과 보장 필요 내용을 신속하고 민첩하게 제공하거나 대응하는 핵심 공공가치인 민첩성이다. 최근 코로나-19 신속 대응과정에서 범정부적 신속 대응과 대처는 바로 이러한 민첩성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범정부적 노력과 성과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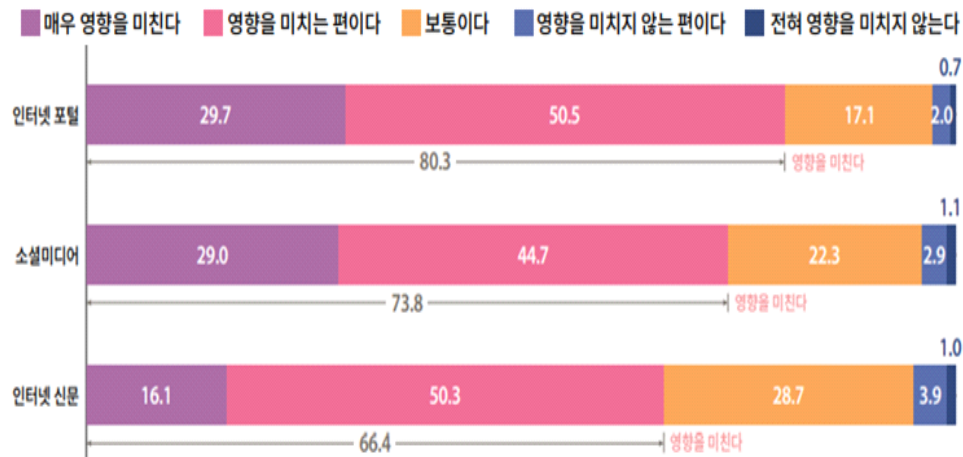
넷째, 뉴노멀시대 소외되거나 지역적 격차를 느낄 수 없도록 공정하고 포용적 사회정책 실현과 보장영역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핵심 공공가치인 포용적 공감성의 강조이다. 인본적 보장성과 공유된 책임성, 민첩성, 기타 핵심공공가치에 근거하여 사회 보장 필요 내용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배려를 위한 마지막 규범적 가치를 고려하는 포용적 공감성의 강조하는 것이 뉴노멀시대 사회정책의 목표와 방향이다.

2. 신공공성 기반 생애주기별 보장영역 재정립의 배경

1) 디지털 네트워크사회 구조변화에 따른 위험·갈등관리 요구 증대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와 효과적인 위험 및 갈등 관리에 대한 기대와 신속한 사회현안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사회 내 “디지털 사회”에 대한 개념이 공고화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SNS의 발달 등으로 인해 온라인 내 사회활동이 사회 일반을 주도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가 본격 도래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21.12)의 “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¹⁾”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셜미디어는 우리나라 성인의 76%가 이용²⁾할 정도로 일상화된 소통도구이며, 응답자의 73.5% 소셜미디어가 여론에 매우 또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림 3> 소셜미디어의 영향



*출처: 한국언론재단(2021.12), 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조사 & 동아일보(‘21.12.23).

- 1) <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는 만 19세 이상 소셜미디어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소셜 미디어 이용 행태를 조사하였음.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의 의견, 생각, 경험, 관점,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나 플랫폼으로 정의할 수 있음
- 2) 주로 정보·뉴스를 얻기 위하여(70.1%),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아서(61.6%), 소통·대화하기 위해서(58.2%)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네트워크 사회 디지털 공간은 사회현안 발굴 및 사회통합 기제로 활용 가능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인식 등 정보자원이 존재하나, 디지털 공간 익명성에 따른 이용자 도덕성 저하, 콜-아웃 켄처³⁾,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등 사회 갈등 증폭 요인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초위험 디지털 네트워크사회에서 사회정책에 대한 혁신은 구성원의 인식·행태·문화가 변화할 때 비로소 가능하므로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경주가 필요하다. 이에, 민-관 간 정책소통 강화,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지속성 높은 사회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탄력적 사회정책 거버넌스 또한 요구된다.

2) 뉴노멀 코로나 사회위기 선제대응형 국가·정부 역할 요구 확대

델타 및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감염병으로 인한 공공병원·인력 부족 등 공중보건위기⁴⁾에 근본적·포괄적 국민 건강안전망 확충 공감대 확산되었다. 국민 건강 및 공중보건 정책 방향을 사후관리가 아닌 예방적 건강관리와 시도별 건강 격차⁵⁾에 적극 대응한 사회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 회복과정에서 개인별 회복탄력성 차이가 계층격차 누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정한 정부의 선제적·적극적 역할 요구 역시 확대되고 있다. ‘20-’21기간 동안 사회불안 및 위기에 대한 국제간 비교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실업(4위), 코로나19(7위), 빈곤·불평등(11위)에 대한 불안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⁶⁾. 한편, 코로나-19 시대에 국가와 정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⁷⁾, 행정능력강화(79.2%), 격차해소(73.6%), 치안·질서유지(7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지침 위반자의 처벌(88.3%), 개인의 자유 제한

3) Call-out Culture는 디지털 공간 내 특정 유명인에 대한 집단적 적대행위 문화를 의미하며, 특히 소셜 미디어 사용자 중 약 77.2%가 허위정보 접촉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음(한국언론재단, '21.12)

4) 【공공병상 비중('18. 기준)】 한국 10.0% vs OECD 71.6% (복지부, '21.12)

5) 【시군구 건강격차('18)】 건강수명(기대수명-유병기간) 용인 수지구 75.3세 vs 부산 영도구 62.17세 (복지부,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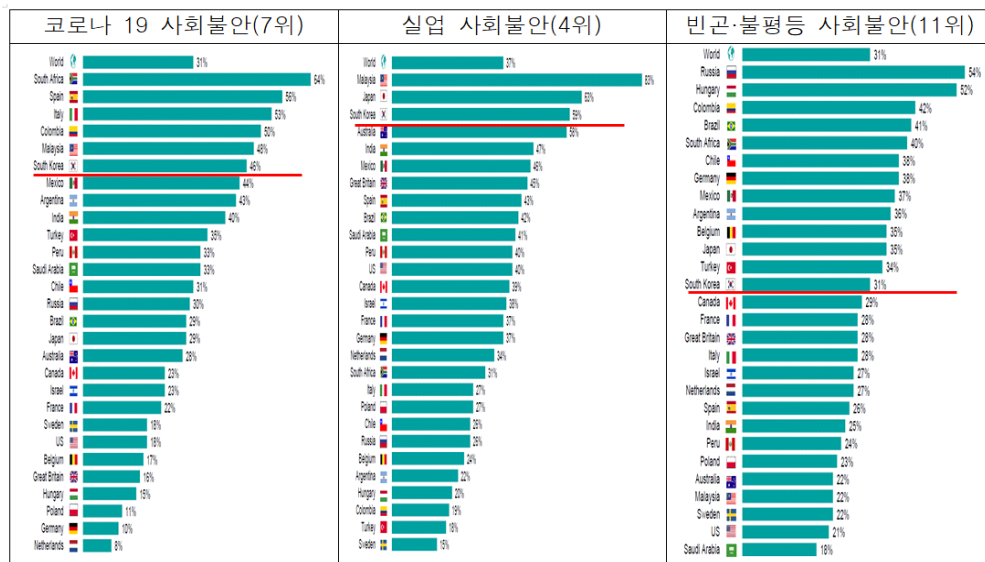
6) Ipsos(2021) 사회불안과 위기에 대한 국제간 비교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전체국가 27개국 중 '코로나 19' 7위, '실직' 4위, '빈곤과 불평등' 11위로 나타났다(Ipsos, 2021.What Worries the World('20.4~'21.6))

7) 코로나19 사회적 영향과 시민의식 패널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역할 확대와 개인의 자유와 생활의 제한을 용인하는 등의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통계청, 2021 보도자료, 한국의 사회동향 2021,p.36)

(82.1%), 정부권한 강화(76.4%), 경제성장 보다 코로나 대처 중요성(69.7%) 등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역할 확대와 개인의 자유 제한을 포함한 사회적 참여와 지지를 나타냈다.

2년간 지속된 코로나 상황 속 비대면 중심 사회전환은 디지털 성범죄,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한편, 인수공통감염병, 기후위기 등 만연한 위험요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제2의 코로나 변이 감염병 불안 해소, 사회재난대응 등 사회위기 선제대응형 국가와 정부역할은 물론 공공부문의 공적책임을 강화하여 일상생활 속의 환경·건강·안전을 확보하고 예측가능한 대규모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국가안전관리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 4> 사회불안 및 위기에 대한 국제간 비교분석 결과



*출처: Ipsos(2021) What Worries the World('20.4~'21.6).

3) 뉴노멀·제4차 산업혁명시대 공정사회 가치 확산위한 사회정책 설계 필요

뉴노멀 코로나-19 확산과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이 경제·사회·정치·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⁸⁾. 코로나-19와 디지털 네트워

크 사회의 급격한 진전은 전통적인 지역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으며, 이웃 간 교류 감소와 사회적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개인화된 공동체 경향이 심화되어 객관적·주관적 고립집단이 느끼는 외로움, 사회지지층 결여, 사회단체 비활동률 증가 추세에 있다(통계청, 2021)⁹⁾.

분절되고 고립된 개인화된 지역공동체를 함께하는 포용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요구되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을 함께 구축하고 공유·적용할 때, 사회 제 부분의 신뢰가 구축되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함께하는 포용사회와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확산하고 내재화하는 시민역량과 사회적 노력이 축적될 때 높은 수준의 신뢰사회가 구축되고 공정사회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한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과 성과를 유도하고 공정사회 가치 확산의 동반자로서 시민과 정부가 함께 새로운 사회정책 방향설정과 모형설계가 필요하다.

4) 뉴노멀 시대 신속 대응과 사회전반 역량 강화 통한 포용적 사회정책 구현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양극화, 지역소멸, 고용산업구조 급변 등 뉴노멀시대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비와 대응을 위한 사회전반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5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20%에 도달하는 초고령사회가 예상되고 있으며, 전국 261개 시군구 중 41.8%인 109개가 2020년에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되었다(국가통계포털, '21.12 기준). 이에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 양극화, 지역소멸 해소를 위한 신속하고도 범사회적 대응과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제4차산업혁명시대 신기술중심의 산업구조 및 고용형태의 다변화, 숙련직 채용선호 등 일자리 시장 급변에 따라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직무역량 함양 역시 신속하게 대비하는 사회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

8) Ipsos(2021)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사회가 특권층에 친화적인 경제구조라는 인식이 응답자의 85%로 조사대상 25국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념적 양극화와 갈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념갈등 87%, 젠더갈등 80%, 계층갈등 87%, 빈부갈등 91%). [참조, Ipsos(2021), Culture wars around the world, '21.7]

9) 통계청(2021) 한국의 사회동향 자료에 의하면, 타인·사회로부터 물리적 객관적 고립정도(고립집단 단체비활동률 53.6%)과 타인 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 고립 정도(고립집단 외로움경험 22.3%, 사회적지지 결핍 4.2%) 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되었음.

뉴노멀시대 교육·문화·복지 등의 양극화가 고용·소득 편차의 고착으로 연결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격차 해소의 어려움으로 지적된다. 객관적 경제지표와 상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주거, 건강, 교육, 삶의 질 등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어 미래에 대한 3不(불안, 불신, 불만)의 확산으로 사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래를 견인할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가족·개인에게 지워진 돌봄·교육·의료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의 포용적 사회정책에 대한 과감한 공적투자와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체제로 사회정책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함께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희망과 사회적 격차 해소를 통한 자존감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사회정책의 방향과 설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뉴노멀시대 사회현안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 및 여가활동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고민과 배려 또한 관련 사회정책의 설계와 집행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주요 불확실성·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장 영역과 보장 필요 내용을 검토·분석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뉴노멀·제4차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를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불확실성과 위험 증가”로 볼 수 있다. 뉴노멀시대 불확실성과 위험증가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의 보장과 최종적·확증적 공적 보장 책임의 강화가 새로운 뉴노멀시대 사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이것이 바로 최근 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뉴노멀시대 국가와 정부가 지향해야 할 공공가치(Public Values)인 “新공공성(New Publicness)”의 개념이다.

3. 생애주기별 보장영역 및 보장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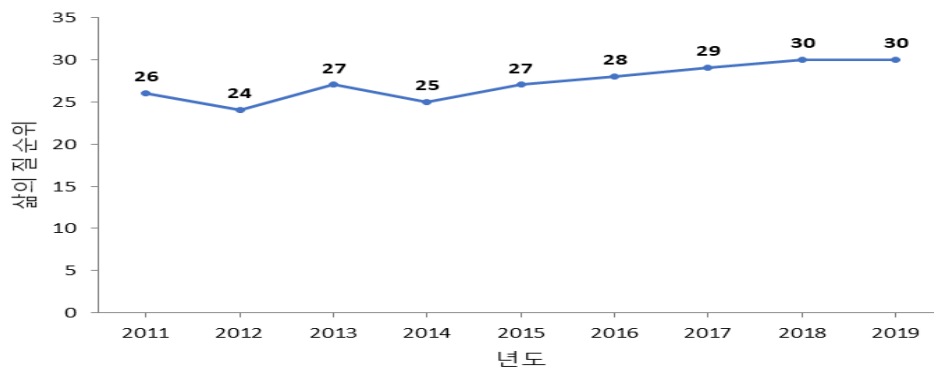
1) OECD BLI(Better Life Index)

OECD BLI 지수는 각국의 Well-being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삶의 질 등 비물질적 영역의 중요성 강조되면서 '11년부터 11개 영역 24개 지표에(19개 정량, 5개 정성) 대하여 국가별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Gallup World Poll 등)에 기초해 산출한다. <표 2>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1년 발표 이후 20위권 중·후반대를 유지해 오다가 2019년에는 30위로 조사되었다.

<표 2> 우리나라 OECD BLI 순위 ('11~'19)

년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순위	26위	24위	27위	25위	27위	28위	29위	30위	30위
전체	36개국(OECD회원국+러시아·브라질)					38개국 (+남아공·라트비아)		40개국 (+콜롬비아·리투아니아)	40개국

<그림 5> 우리나라 OECD BLI 순위 ('11~'19)



<표 3> 우리나라 OECD BLI 세부영역 및 지표별 순위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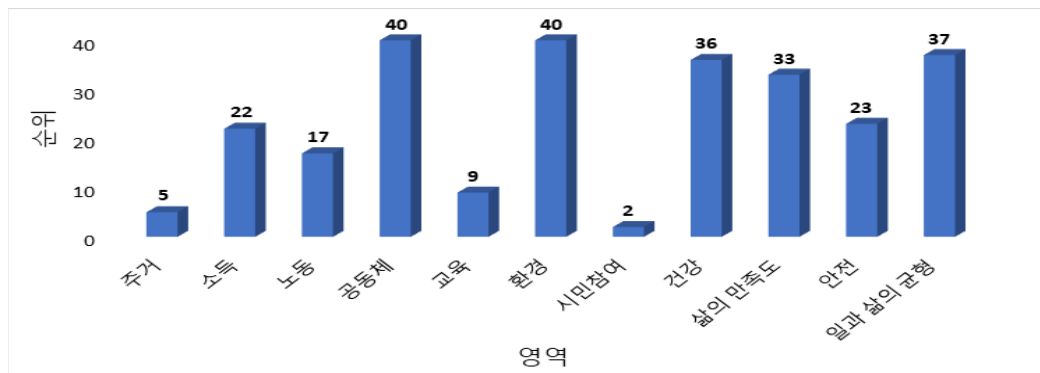
영역	지표명(단위)	순위 (40개국)	
1. 주거 Housing	주거관련지출(%) (Housing expenditure)	1	5
	기본시설이 없는 가구에 사는 인구비율(%) (Dwellings without basic facilities)	26	
	개인당 방수(%) (Rooms per person)	23	
2. 소득 Income	가계 금융순자산(US\$) (Household financial wealth)	14	22
	가계 순가처분소득(US\$) (Household net adjusted disposable income)	23	
3. 노동 Jobs	직업 안정성(%) (Job security)	5	17
	고용률(%) (Employment rate)	27	
	장기 실업률(%) (Long-term unemployment rate)	1	
	개인소득(US\$) (Personal earnings)	22	
4. 공동체 Community	정성지표 사회적 지원관계망의 질(%) (Quality of support network)	40	40
5. 교육 Education	기대교육기간(년) (Years in education)	25	9
	교육 성취(%) (Educational Attainment)	13	
	학생들의 역량(점) (Students skills)	5	
6. 환경 Environment	정성지표 수질 만족도(%) (Water quality)	29	40
	대기오염 (Air pollution)	40	
7.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규칙 제정에의 참여(점) (Stakeholder engagement for developing regulations)	6	2
	투표 참여율(%) (Voter turn-out)	13	
8. 건강 Health	정성지표 자기보고 건강상태(%) (Self-reported health) * WHO 설문 지표	40	36
	기대수명(세) (Life-expectancy)	10	
9.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정성지표 삶에 대한 만족도 (Life-Satisfaction)	33	33
10. 안전 Security	살인율(%) (Homicide rate)	22	23
	정성지표 야간보행 안전도(%) (Feeling safe walking alone at night)	25	
11.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Time devoted to leisure and personal care)	27	37
	장시간 근로자(%) (Employees working very long hours)	37	

*출처: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위의 <표 3>와 아래의 <그림 6>은 우리나라 OECD BLI 세부 영역 및 지표별 순위를 정리한 것으로 영역별 순위 현황을 보면, 시민참여(2위), 주거(5위), 교육(9위) 등 3개 영역이

OECD 10위권 내에 있고, 노동(17위) 영역 등 1개 영역이 20위권 내, 소득(22위), 안전(23위) 등 2개 영역이 30위권 내, 삶의 만족도(33위), 건강(36위), 일과 삶의 균형(37위), 공동체(40위), 환경(40위) 등 5개 영역이 30위권 밖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공동체 영역과 환경 영역은 OECD BLI 조사대상 40개국 중에서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특별한 관심과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그림 6> 우리나라 OECD BLI 영역별 순위 현황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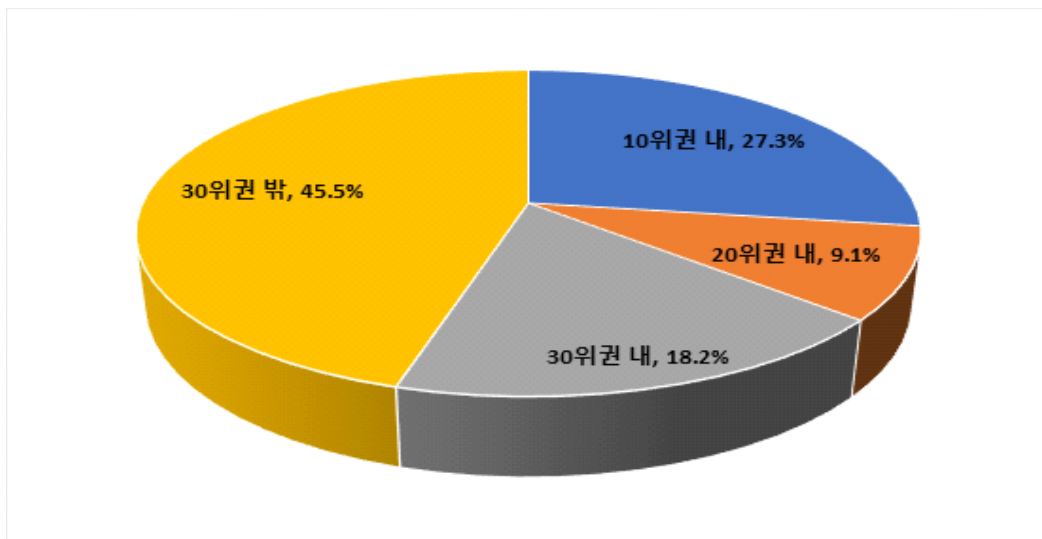


영역별 세부지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OECD BLI 순위를 보면, OECD 10위권 내에는 주거영역의 주거관련지출(1위), 직업(고용)영역 장기실업률(1위)과 직업안정성(5위), 교육영역 학생들의 역량(5위), 시민참여 영역 규칙 제정에의 참여(6위), 건강영역의 기대수명(10위) 등 총 24지표 중에서 6개(25%) 지표로 조사되었고, 20위권 내에는 소득영역의 가계 금융순자산(14위), 교육영역의 교육성취(13위), 시민참여 영역의 투표참여율(13위) 등 3개(12.5%) 지표로 나타났다. 30위권 내에는 주거영역의 개인당 방수(23위), 기본시설이 없는 가구비율(26위), 소득영역의 가계 순가처분소득(23위), 직업(고용)영역의 개인소득(22위)과 고용률(27위), 교육영역의 기대교육기간(25위), 환경영역의 수질만족도(29위), 안전영역의 살인율(22위)과 야간보행 안전도(25위), 일과 삶의 균형(27위) 등 10개(41.7%) 지표로 조사되었다. 30위권 밖으로 공동체 영역의 사적 지원관계망의 질(40위), 환경영역의 대기오염(40위), 건강영역의 자기보고 건강상태(40위), 삶의 만족도영역의 삶에 대한 만족도(33위), 일과 삶의 균형 영역의 장시간 근로자(37위) 등 5개(20.8%) 지표로 조사되었다.

<표 4> 우리나라 OECD BLI 영역별 순위 현황 ('19)

OECD BLI 순위	10위권 내	20위권 내	30위권 내	30위권 밖	소계
영역(수)	3	1	2	5	11
비율(%)	27.3	9.1	18.2	45.5	100

<그림 7> 우리나라 OECD BLI 영역별 순위 현황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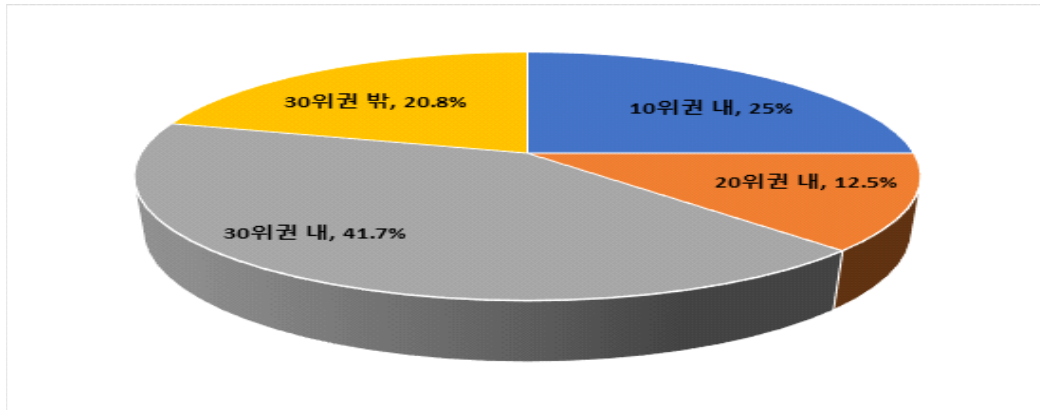


아래의 <표 5>와 <그림 8>은 우리나라 OECD BLI 세부지표 순위를 10위권에서 30위권으로 구분하여 파악한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30위권 내외의 지표가 총 24개 지표 중에서 15개(62.5%)에 이르고 있다는 결과는 전체적으로 OECD BLI 세부지표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향후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표 5> 우리나라 OECD BLI 세부지표 순위 ('19)

OECD BLI 순위	10위권 내	20위권 내	30위권 내	30위권 밖	소계
세부지표(수)	6	3	10	5	24
비율(%)	25	12.5	41.7	20.8	100

<그림 8> 우리나라 OECD BLI 세부지표 순위 현황 (‘19)



2) 삶의 질 유사 지표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대부분 GDP 등으로 대변되는 물질적 삶의 조건을 나타내는 삶의 양(quantity of lif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제적 결핍에서 벗어난 인간의 삶을 값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삶이 값지고 좋은 삶인가’에 대한 철학적이고 규범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며,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을 의미한다(한국사회학회, 2011). 실제 GDP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예: 건강, 환경, 불평등, 안전, 공동체 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GDP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은 편향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지표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 핵심은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이 논의될 수 있다. 자원 및 객관적 생활조건에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스칸디나비언 접근법은 객관적 사회지표에 대해 개인의 평가와 독립적인 사회적 사실을 제시하는 통계를 활용하는 접근법이며, 조건과 과정의 최종 결과물로서 개인의 주관적 웰빙을 강조하는 미국의 접근법은 주관적 사회지표로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인식 및 평가하는 접근법이다(한준 외, 2011).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에 대한 논쟁은 진행 중이지만, 유럽의 경우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 객관적 측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나 주관적 측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Trewin, 2001). 우리나라의 경우도 통계청에서 ‘사회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1) 객관적 삶의 질 측정과 주관적 삶의 질 측정

객관적 삶의 질은 외부의 물리적 기준이나 조건에 의해 정의되고, 일련의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해 측정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9년부터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간하고, 우리나라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민 삶과 관련한 전반적인 경제·사회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구·가구 및 가족·건강·교육 및 훈련·노동 및 여가·소득과 소비 및 자산·주거·생활환경·범죄 및 안전·사회통합 및 주관적웰빙 등 총 10개 부문에서 측정해 왔다(통계청, 2020). 이러한 사회지표는 국민생활의 수준을 측정하고, 사회상태의 종합적인 측정과 사회변화에 대한 예측, 그리고 사회개발정책의 성과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국제적인 지표는 1976년부터 시작한 “OECD 사회지표”가 대표적이며, 소득과 인구구조 변화 등을 포함하여 일반·자활·형평성·보건·사회통합 등 5개 영역의 25개 지표로 분석하고 있다(OECD, 2019). 이러한 객관적인 사회지표연구는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과, 가치나 목적과 같은 규범적 기준으로 실제 조건을 비교하여 삶의 조건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지만, 국민들이 일상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질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점이 남아있다.

주관적 삶의 질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중시하며,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가치보다는 삶에 대한 개인의 개별적인 기준에 근거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한준 외, 2011). 주관적 삶의 질은 행복이나 복지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행복보다는 덜 감상적이고 다소 구체적이며, 복지보다는 덜 임상적이고 처방적 측면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질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의해 인식되어야 하고, 그들에 의해 잘 평가될 수 있다는 가정을 갖는다.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은 직접적인 측정이 어렵지만,¹⁰⁾ 1981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한 “환경이 한국인의 삶의 질의 지각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10) Andrew(2001)는 삶의 질이란 특정 장소를 대상으로 거주자나 방문자, 개인이나 집단의 입장에서 느끼는 행복감, 성취감, 만족감 정도라 정의하며, 각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표 6> 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지표 예시

객관적 지표 : 개인적 평가와 독립적인 사회통계자료	주관적 지표 : 사회적 조건에 대한 개인적 평가
기대수명	공동체의식
범죄율	물질적 소유감
실업률	안전감
GDP	행복감
빈곤율	총체적 삶의 만족도

한준 외(2011)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접근과 주관적 접근의 주장을 통합적으로 수용하여 객관적 조건의 측면과 주관적 느낌과 만족이 삶의 질을 함께 구성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한국적 상황과 맥락에 맞는 삶의 질 측정의 틀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국민 삶의 질 측정’의 10개 영역과 OECD 사업 ‘Better Life Initiative’의 How’s Life 11개 영역을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경제적 조건, 교육, 건강, 환경, 안전, 여가, 사회관계(공동체) 등이 포함된다.

- 통계청의 삶의 질 지수: 소득/소비, 건강, 노동, 교육, 주거, 안전, 가족, 환경, 사회 통합, 문화/여가 등 10개 영역
- OECD How’s Life의 삶의 질 지수: 소득/소비, 건강, 노동, 교육, 주거, 안전, 환경, 사회통합, 일-생활 양립(work-life balance), 거버넌스(governance),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등 11개 영역

이러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들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예를 들면,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현대사회에서 주거는 사회적 지위, 공동체의 소속, 투자의 수단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Trewin, 2001). 주택의 소유는 거주공간의 확보 뿐 아니라 투자의 수단으로서 재산의 가치를 가지며,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 주거공간에 대한 비용(월세, 전세금 이자 등)이 수반됨으로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주택의 질이나 주거환경, 주택가격 등은 삶의 질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 영역의 경우 얼마나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으며 그 기반이 잘 갖춰졌는지가 중요하며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표 7> 2000년대 초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영역 구분

통계청 삶의 질 영역	OECD How's Life	한국사회학회 삶의 질 영역
-	life satisfaction	주관적 웰빙
주거/교통 소득/소비 노동	housing income jobs	물질적 조건
건강	health	건강
교육	education	교육
사회통합 가족	community	가족과 공동체
문화/여가	work-life balance	문화와 여가
	governance	시민사회와 민주적 참여
안전	safety	안전
환경	environment	환경

*출처: 한준 외(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최근 통계청 지표검토위원회에서는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영역 및 지표체계를 개편하여 총 12개 영역, 269개 지표를 포함하기로 확정하였다. 삶의 질은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구성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국가지표체계, 2020). 통계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회지표는 국민 삶의 질과 복지 정도 등을 양적·질적으로 파악하고 현 사회 상태를 종합적·체계적·균형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사회구조 변화나 관심 분야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의 계획수립이나 정책 결정 및 효과 측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한다. 특히 2020년 5차 사회지표 체계개편으로 ‘주관적 웰빙’ 영역을 포함하려는 계획을 가진다. 이는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 주관적 웰빙을 독립영역으로 포함하는 추세를 따르면서도 국내 지표체계와의 일관성 또한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한편 OECD의 BLI는 물질적 생활조건, 삶의 질, 지속가능성 등으로 구성된 지표로 전반적 웰빙 수준을 평가한

다. 특징적인 것은 Better Life Index의 경우 OECD 홈페이지(<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이용자들이 11개 웰빙 영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웰빙 지표를 작성하고 영역별 국제비교를 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다.

<표 8>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

구분	영역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물질 부문	소득·소비·자산	가계부채비율(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구 순자산, 가구중위소득, 상대적 빈곤율, 1인당 국민총소득	소득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고용·임금	고용률, 근로시간, 실업률, 월평균 임금(실질), 저임금근로자비율	일자리만족도
	주거	자가점유가구비율, 주택임대료비율(소득 대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통근시간, 1인당 주거면적	주거환경만족도
비물질 부문	건강	건강수명, 기대수명, 비만율, 신체활동실천율, 자살률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인지율
	교육	고등교육 이수율, 대학졸업자 취업률, 유아교육 취원율, 학교교육 효과	교육비 부담도, 학교생활만족도
	가족·공동체	독거노인비율, 사회단체참여율	가족관계만족도, 사회적 고립도, 지역사회 소속감
	여가	문화여가 지출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여가시간, 여가시간 충분도, 1인당 여행일수	여가생활만족도
	환경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미세먼지 농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기후변화 불안도, 녹지환경 만족도, 대기질 만족도, 소음 만족도, 수질 만족도, 토양환경 만족도
	안전	가해에 의한 사망률, 도로교통사망률, 범죄 피해율, 산재사망률,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야간보행안전도, 화재 사망자수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시민참여	선거투표율, 자원봉사참여율, 정치적 역량감	기관신뢰도, 대인신뢰도, 부패인식지수, 시민의식
	주관적 웰빙		긍정정서, 부정정서, 삶의 만족도

*출처: 국가지표체계(2020). <https://www.index.go.kr/unify/main.do?clasCd=10> 재구성.

<표 9> 통계청과 OECD 삶의 질 지표 비교

차원	통계청 삶의 질 영역	OECD BLI
물질적 생활조건	소득, 소비, 자산	소득(Income)
	고용, 임금	노동(Jobs)
	주거	주거(Housing)
비물질적 생활조건	건강	건강(Health)
	교육	교육(Education)
	가족, 공동체 ¹¹⁾	공동체(Community)
	여가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환경	환경(Environment)
	안전	안전(Safety)
	시민참여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3) 사회정책의 보장영역

사회정책의 보장성을 범부처 차원에서 논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사회정책은 경제시스템이 그 자체로 달성할 수 없는 결과를 이루어내고, 경제시스템의 작동을 초월 또는 수정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즉, 사회정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여 사회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재분배를 수행하려는 노력을 총칭한다는 것이다(Marshall, 1965; Titmuss, 1974; 박동, 2007).

Marshall(1965)은 사회정책을 시민들에게 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조치와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협의적 개념으로서 사회정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Titmuss(1974)는 국가가 소수의 빈곤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협의의 사회정

11) 통계청 삶의 질 영역 중 가족·공동체 영역 지역사회 소속감, 이웃 유대와 같은 네트워크로 개정될 예정이며, 신뢰(타인의 신뢰, 기관 신뢰), 호혜성 및 공정성(공정성 인식, 다문화 수용성, 사회갈등 인식, 자원봉사 참여 현황, 헌혈 횟수, 기부금 현황)의 지표가 추가될 예정이다.

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정한 사회정책은 광의의 사회정책이라고 설명한다. 즉, 광의의 사회정책에는 협의의 사회복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업복지와 조세감면과 같은 조세복지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Titmuss(1974)는 사회정책을 사회의 통합된 제도로 간주하고 시장 외부의 영역에서 보편주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회변동과 경제제도의 다양한 효과에 관한 이론과 사회평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정책 개념의 핵심이 시민의 경제적·비경제적 복지에 있다고 보고 최저 수준과 재분배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사회정책의 대상영역은 처음에 빈곤정책으로부터 시작하여 교육, 환경, 여성, 노동정책 등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상인구도 빈곤층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정책 개념도 소득이전 등 재분배적 기능만이 아니라 일자리창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정책 개념의 확장과 더불어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기존의 복지위주의 소극적 사회정책에서 탈피하여 평생학습 등 인적자원개발 정책, 직업교육 및 훈련 강화, 평생학습체제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으로 사회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박동, 2007).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남아 있고,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실업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표되는 불안정 고용 문제도 시급히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교육문제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외에도 여성문제, 노인문제, 이주민문제, 주거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뒤섞여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적 노력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강수택, 2011).

정리하면, 사회정책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해결하여 사회의 안녕과 복지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령에서 사회정책을 개념화하는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위의 개념적 논

의를 고려하였을 때 사회보장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같은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서 아래의 <표 10>과 같이 사회정책에 대한 법적 개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에서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항)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상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있기 전, 법률에서 사회서비스를 정의한 것은 2007년도에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의 제3호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따르는 서비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의미하며, 대통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에는 보육 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박세경 외, 2013).

<표 10> 사회정책의 법적 개념

관련 법령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정의) 3.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령 시행령)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보육 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사회보장 기본법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정의)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와 같은 사회정책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의 사회정책 영역은 아동 돌봄, 교육, 성인 돌봄, 일상생활 지원, 신체 건강, 정신건강, 가족 지원, 안전 및 권익 보장, 주거, 고용,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이용 지원으로 정의되어 이루어졌다(강혜규 외, 2007; 윤영진 외, 2011; 안수란 외, 2018). 사회정책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주요 정책 계획은 아래의 <표 11>과 같이 보건·복지(15개), 고용(5개), 교육(7개), 주거 및 환경(3개), 문화(2개), 기타(5개)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부처는 아래의 <표 12>와 같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나타났으며, 영역을 구분한경우에도 정책 계획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이 주요 부처로 나타났다.

<표 11> 사회정책 관련 중앙 부처 주요 정책 계획

관련 법령	내용
보건·복지	사회보장기본계획(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복지부), 아동정책기본계획(복지부), 중장기 보육기본계획(복지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복지부), 장기요양기본계획(복지부), 치매종합관리계획(복지부),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복지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복지부), 정신건강 종합대책(복지부),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복지부),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복지부), 건강가정기본계획(여가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여가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여가부)
고용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고용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기본계획(고용부), 직업능력 기본계획(고용부),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고용부),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고용부)
교육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교육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교육부), 다문화교육지원계획(교육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교육부),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교육부), 도서관발전종합계획(교육부)
주거 및 환경	산림기본계획(산림청), 산림복지진흥계획(산림청), 주거복지로드맵(국토부)
문화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문체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문체부)
기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국토부), 농업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농식품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산업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대검찰청),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기부)

<표 12> 사회정책 영역별 주무부처 및 관련부처

구분	주무부처	관련부처
아동 돌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	교육부	국가보훈처, 통일부, 보건복지부
성인 돌봄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일상생활 지원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신체건강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농림수산식품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정신건강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통신부, 교육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가족 지원	여성가족부	-
안전 및 권익 보장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주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고용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중소기업벤처부
문화 및 여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서비스 이용 지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출처: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방안 연구(안수란 외, 2018)

4) 생애주기별 사회 보장영역 재정립

(1) 삶의 질 지표와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비교

생애주기별 보장영역을 재정립하기 위해 사회보장 영역의 범위를 정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2022)의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성과 보고서」 128개 회의 안건을 앞서 논의한 각 지표를 기준으로 아래의 <표 13>와 같이 비교 분석하였다.

<표 13> 각 삶의 질 지표와 「사회관계장관회의」 안전 비교

구분	통계청 삶의 질	OECD 삶의 질	한국사회학회	안전 내용	빈도	비율(%)
1	교육	교육	교육	교육	31	24.2
2	안전	안전	안전	안전	29	22.7
3	고용, 임금	노동	물질적조건 ¹²⁾	고용, 임금	4	3.1
4	-	-	-	돌봄 (아동, 노인, 통합)	14	10.9
5	가족, 공동체	공동체	가족과 공동체	가족, 공동체	14	10.9
6	환경	환경	환경	환경	9	7.0
7	건강	건강	건강	건강	8	6.3
8	-	-	-	행정서비스 개선	7	5.5
9	여가	일과 삶의 균형	문화와 여가	여가	6	4.7
10	-	-	-	공정사회 구현	5	3.9
11	주거	주거	물질적 조건	주거	1	0.8
12	소득, 소비, 자산	소득	-	소득(불평등 관련)		
13	시민참여	시민참여	시민사회와 민주적 참여	시민참여		
14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	-	삶의 만족		
					계: 128	100

우선 회의 안전과 통계청, OECD, 한국사회학회 삶의 질 지표를 비교하면 교육, 안전 고용·임금, 가족·공동체, 환경, 건강, 여가, 주거의 지표가 안전 내용과 일치한다. 하지만, 통계청과 OECD, 한국사회학회 삶의 질 지표에는 소득·소비·자산,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이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사회·문화·교육과 관련된 안전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회보장 영역에 추가해야 하는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득의 개념을 확장하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것이 아닌 남녀 간의 소득 격차, 소득 양극화 등 현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 영역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각 삶의 질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회관계장관회의 안전에는 돌봄, 행정 서비스 개선, 공정 사회 구현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는 앞서 논의한 사회적

12) 한국사회학회의 ‘물질적 조건’에는 주거, 교통, 소득, 소비, 노동이 포함됨

기업 육성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등 관련 법령으로 보장되는 영역이므로 유지되어야 할 사회보장 영역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주거, 공정사회 구현, 여가 등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안전에 대한 생애주기별 보장영역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생애주기별 사회관계장관회의 안전 분석

생애주기별 사회 보장영역을 재정립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현재 사회관계장관회의 안전 현황을 파악하여 상대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영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의 128개 안전 중 생애주기와 관련된 안전은 영유아기 43건, 학령기 46건, 청년기 44건, 중장년기 32건, 노년기 32건이 있다. 안전분야 생활환경 안전 17건의 경우 전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안전으로 이를 제외하면 생애주기와 관련된 안전은 생애주기별로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한편, 생애주기와 관련 없는 안전은 총 34건으로 특정 연령대가 아닌 결혼이주여성이나 장애인과 같이 정책 대상이 특정되어 있거나, 제도개선, 대책 마련, 특정 분야 산업 육성 등 회의 안전이 사람이 대상이 아닌 안전이 여기 포함된다.

<표 14> 생애주기별 안전수

구분	영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관련 없음
관련 안전 수	43	46	44	32	32	34

우선 생애주기 중 영유아에 해당하는 안전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5>와 같다. 전체 43개의 안전 중 생활환경 안전 17건을 제외하면 아동 돌봄, 아동학대 예방 근절과 관련된 안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확대, 영유아의 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안전이 각각 1~2건씩 확인되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육아 지원, 재택 근무 문화개선 등의 내용이 추가로 논의되어야 한다.

<표 15> 영유아기 관련 안전 현황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빈도	비율(%)
포용 분야	취약계층돌봄	아동	8	18.6
		통합돌봄	2	4.7
	가족지원	한부모가족포용	4	9.3
		일가정양립	1	2.3
		여성고용확대	1	2.3
안전 분야	아동·청소년 보호 지원	아동 학대 예방 근절	6	14.0
		위기 청소년 지원	2	4.7
		이주 배경 청소년	1	2.3
	생활환경안전	전안전	17	39.5
통합 분야	공정사회 구현	엄정한 법집행	1	2.3
계			43	100

영유아에 해당하는 안전의 관련 부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16>과 같다. 주관부처의 경우 교육부(10건), 보건복지부(10건), 환경부(10건), 여성가족부(9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부처의 경우 보건복지부(17건), 교육부(16건), 행정안전부(13건), 법무부(12건), 여성가족부(9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6> 영유아기 안전 관련 부처

구분	주관	빈도	비율(%)	참여	빈도	비율(%)
1	교육부	10	23.3	보건복지부	17	12.7
2	보건복지부	10	23.3	교육부	16	11.9
3	환경부	10	23.3	행정안전부	13	9.7
4	여성가족부	9	20.9	법무부	12	9.0
5	고용노동부	1	2.3	여성가족부	9	6.7
6	법무부	1	2.3	기재부	8	6.0
7	행정안전부	1	2.3	문화체육관광부	8	6.0
8	교육부·복지부(공동)	1	2.3	고용노동부	8	6.0
9	-			국토교통부	5	3.7
10	-			중소벤처기업부	4	3.0
		43	100		134	74.6

다음으로 학령기에 해당하는 안전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7>과 같다. 역시, 생활 환경안전분야의 안전을 제외하면 직업·진로 교육 개선, 위기 청소년 지원, 학교폭력과 관련된 안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혁신 분야의 신기술 인재, 디지털 사회 선도 등의 안전 비율은 낮게 나타났으며, 뉴노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관련 분야 보장영역을 발굴·지원해야 한다.

<표 17> 학령기 관련 안전 현황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빈도	비율(%)
포용 분야	취약계층돌봄	통합돌봄	1	2.2
	가족지원	한부모가정포용	2	4.3
안전 분야	아동·청소년 보호 지원	아동 학대 예방 근절	1	2.2
		위기 청소년 지원	7	15.2
		이주 배경 청소년	1	2.2
	폭력근절	성폭력	2	4.3
		학교폭력	5	10.9
		스포츠	2	4.3
	생활환경안전	전안전	17	37.0
혁신 분야	인재양성	신기술 인재	1	2.2
		직업·진로 교육 개선	6	13.0
	비대면사회 선도	디지털 사회 선도	1	2.2
계			46	100

학령기에 해당하는 안전의 관련 부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18>과 같다. 주관부처의 경우 교육부(20건), 여성가족부(10건), 환경부(10건), 보건복지부(5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부처의 경우 고용노동부(18건), 교육부(17건), 보건복지부(17건), 법무부(17건), 문화체육관광부(17건), 여성가족부(16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8> 학령기 안전 관련 부처

구분	주관	빈도	비율	참여	빈도	비율
1	교육부	20	43.5	고용노동부	18	7.9
2	여성가족부	10	21.7	교육부	17	7.5

구분	주관	빈도	비율	참여	빈도	비율
3	환경부	10	21.7	보건복지부	17	7.5
4	보건복지부	5	10.9	법무부	17	7.5
5	문화체육관광부	1	2.2	문화체육관광부	17	7.5
6				여성가족부	16	7.0
7				행정안전부	12	5.3
8				기획재정부	12	5.3
9	-			중소벤처기업부	11	4.8
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4.4
		46	100		228	64.5

청년기에 해당되는 안건은 아래의 <표 19>와 같이 총 44건으로, 혁신분야 신기술인재, 직업·진로교육 개선 등의 안건의 비중이 높았지만, 돌봄과 관련된 안건은 없었다. 따라서 앞서 정의한 삶의 만족 부분에서 청년기 신체적·정신적 건강 돌봄을 지원해주는 등의 사회보장 영역이 고려되어야 한다.

<표 19> 청년기 관련 안건 현황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빈도	비율(%)
포용 분야	가족지원	한부모가족포용	2	4.5
안전 분야	폭력근절	성폭력	1	2.3
		스포츠	2	4.5
	생활안전	전안건	17	38.6
혁신 분야	인재양성	신기술인재	9	20.5
		평생교육훈련 확대	2	4.5
		직업·진로교육 개선	5	11.4
	비대면사회 선도	디지털 사회 선도	2	4.5
통합 분야	인구급변대응	학령인구 감소대비	1	2.3
		지역균형발전	1	2.3
	공정사회 구현	직무중심 사회 구축	2	4.5
계			44	100.0

청년기에 해당하는 안건의 관련 부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20>과 같다. 주관부처의 경우 교육부(24건), 환경부(10건), 보건복지부(5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부

처의 경우 고용노동부(22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9건), 중소벤처기업부(19건), 산업통상자원부(15건), 기획재정부(14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0> 청년기 안전 관련 부처

구분	주관	빈도	비율	참여	빈도	비율
1	교육부	24	53.3	고용노동부	22	9.6
2	환경부	10	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	8.3
3	보건복지부	5	11.1	중소벤처기업부	19	8.3
4	여성가족부	3	6.7	산업통상자원부	15	6.6
5	문화체육관광부	1	2.2	기획재정부	14	6.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2	보건복지부	13	5.7
7	교육부·고용노동부	1	2.2	문화체육관광부	12	5.3
8				여성가족부	11	4.8
9				교육부	10	4.4
10				행정안전부	9	3.9
		45			213	63.2

<표 21> 중장년기 관련 안전 현황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빈도	비율(%)
포용 분야	취약계층돌봄	통합돌봄	1	3.1
		한부모가정포용	2	6.3
	가족지원	일가정양립	1	3.1
		여성고용확대	1	3.1
안전 분야	생활환경안전	전안전	17	53.1
혁신 분야	인재양성	평생교육훈련 확대	2	6.3
		직업·진로 교육 개선	4	12.5
	비대면사회 선도	디지털 사회 선도	1	3.1
		디지털 격차 해소	1	3.1
통합 분야	공정사회 구현	직무중심 사회 구축	2	6.3
계			32	100

중장년기에 해당하는 안전은 위의 <표 21>과 같이 총 32건으로 직업·진로교육 개선, 평생교육훈련 확대와 관련된 안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 연령대를 대상으

로 하는 안전분야의 생활환경 안전영역의 17건을 제외하면 중장년기 관련 안전은 분야별 1~2건으로 중장년기의 사회보장 영역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장영역을 정립해야 한다. 현재 큰 폭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중장년층이 겪는 어려움은 학령기 또는 청년기에서 겪는 어려움보다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재 혁신분야의 디지털 격차 해소는 중장년기의 모바일을 통한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마주하는 키오스크 사용법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년기에 해당하는 안전의 관련 부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22>와 같다. 주관부처의 경우 환경부(10건), 교육부(9건), 보건복지부(6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부처의 경우 고용노동부(13건), 교육부(12건), 기획재정부(12건), 여성가족부(12건), 문화체육관광부(11건), 중소벤처기업부(11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2> 중장년기 안전 관련 부처

구분	주관	빈도	비율	참여	빈도	비율
1	환경부	10	31.3	고용노동부	13	7.8
2	교육부	9	28.1	교육부	12	7.2
3	보건복지부	6	18.8	기획재정부	12	7.2
4	여성가족부	3	9.4	여성가족부	12	7.2
5	고용노동부	2	6.3	문화체육관광부	11	6.6
6	교육부·고용노동부	1	3.1	중소벤처기업부	11	6.6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6.0
8				국토교통부	9	5.4
9				보건복지부	9	5.4
10				산업통상자원부	8	4.8
		32	100		166	64.5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해당하는 안전은 아래의 <표 23>과 같이 총 32건으로, 포용 분야의 노인 돌봄, 통합돌봄, 통합분야의 고령화 사회영역과 관련된 안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경우 안전 분야의 국민건강 보호와, 포용분야의 노인돌봄, 통합돌봄 등의 세부안전을 통해 치매와 같은 노년층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으로부터 사회적

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독거노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립역량역시 인본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노년층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과 서비스전달 체계 구축등의 노력이 추가로 요구된다.

<표 23> 노년기 관련 안전 현황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빈도	비율(%)
포용 분야	취약계층돌봄	노인	3	9.4
		통합돌봄	3	9.4
안전 분야	생활환경안전	전안전	17	53.1
혁신 분야	인재양성	평생교육훈련 확대	2	6.3
		직업·진로교육 개선	1	3.1
	비대면사회 선도	디지털 사회 선도	1	3.1
		디지털 격차 해소	1	3.1
통합 분야	인구급변 대응	고령화 사회	3	9.4
	공정사회 구현	직무중심 사회 구축	1	3.1
계			32	100.0

<표 24> 노년기 안전 관련 부처

구분	주관	빈도	비율	참여	빈도	비율
1	보건복지부	10	31.3	교육부	12	8.3
2	환경부	10	31.3	문화체육관광부	11	6.6
3	교육부	7	21.9	보건복지부	10	6.0
4	국토교통부	2	6.3	여성가족부	10	6.0
5	여성가족부	1	3.1	고용노동부	9	5.4
6	교육부·고용노동부	1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5.4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3.1	행정안전부	9	5.4
8				국토교통부	8	4.8
9				기획재정부	7	4.2
10				중소벤처기업부	7	4.2
		32	100.0		144	56.5

노년기에 해당하는 안전의 관련 부처를 살펴보면 위의 <표 24>와 같다. 주관부처의 경

우 보건복지부(10건), 환경부(10건), 교육부(7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부처의 경우 교육부(12건), 문화체육관광부(11건), 보건복지부(10건), 여성가족부(10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생애주기별 사회정책 보장영역 재정립(안)

앞서 논의한 신공공성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현재 안전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사회정책 보장영역과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사회정책 보장영역과 생애주기별 보장 내용(안)

구분	영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래 인재 교육<ul style="list-style-type: none">SW 교육, 인공지능, 디지털 신기술, 이공계 인재 지원고졸 취업자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실용적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지원고령자 디지털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진로계획 지원신기술 인재교육(프로그래밍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직업교육<ul style="list-style-type: none">창업교육, 평생교육군필자 경력단절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코로나 19 및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비대면 평생교육 체계 구축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아동학대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청소년학대 근절위기 청소년(가출) 지원청소년 폭행 근절<ul style="list-style-type: none">성폭력, 디지털 범죄학생선수 인권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노인학대 예방
고용,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졸취업자 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직무중심 경력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경력단절 예방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평생교육과 재취업 연계 지원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영유아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ul style="list-style-type: none">어린이집 관리 감독 강화아이돌보미 검증 절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독거노인 돌봄치매노인 지원
가족,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불임부부 지원결혼이주 여성 및 다문화 가정 체류안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부모 가정, 청소년 미혼모 가정 지원이혼가정 양육비 불이행 단속 강화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세먼지 관리 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1회용품 사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구분	영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 범정부 학생 건강 지원 			
행정 서비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민 건강검진 지원 - 건강생활(정신건강 포함) 실천 가이드라인 - 감염성, 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 코로나 블루(blue) 지원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 문화환경 개선 •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문화 제공 참여를 통한 평일 문화향유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 기회 확대 • 대로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
공정 사회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 활성화 •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 - 개선과제 발굴, 불공정행위 예방,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고령자 임대주택 지원
소득 불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불평등 해소 		
시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 참여단체별 욕구 반영한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수렴제도 운영 및 확산 - 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삶의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정신적 돌봄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향유 프로그램 구축

사회정책의 목적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장영역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즉, 각 보장영역이 사회정책의 목적인 사회문제 해결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 안전, 고용·임금, 돌봄, 가족·공동체, 환경, 건강, 행정서비스 개선, 여가, 공정사회 구현, 주거, 소득불평등, 시민참여, 삶의 만족과 같은 보장영역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교육

교육수준은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이 단조롭지 않으며, 외부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자신을 개발하고 기술을 습득하며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은 증진될 것이다

(김정화, 1999). 무엇보다도 교육을 통해 습득된 지식이나 기술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더 높은 사회경제적 보상을 받게 된다. 교육수준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이나 여가시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경근, 2016).

또한 교육수준은 개인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증진시켜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삶의 대한 통제는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자신의 삶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otter, 1966). 삶의 대한 통제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력감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무력감이 증가하면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하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주관적 소외감은 증가하고 삶의 질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Seeman, 1983).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삶에 대한 통제력이 증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관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② 안전

안전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죄 피해 및 경험은 높은 수준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는 개인의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저하시킬 수 있을 것이다(김성언, 2018; Hanson et al., 2010; Janoff-Bulman and Frieze, 1983).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국가적인 문맥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는 개인의 주관적인 웰빙 및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김성언 2018). 또한 개인 수준의 범죄 경험뿐만 아니라 지역의 범죄율 역시 개인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Powdthavee, 2005; Romero, 2014). 더 나아가 자신도 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긴장감과 불안감을 상승시키고 외부활동을 줄임으로써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 웰빙과도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언, 2018; Cornaglia et al., 2014; Lorenc et al., 2012; Stafford et al., 2007).

③ 고용·임금

일자리 또는 고용의 질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요소들은 고용의 기회, 부적절한 노동, 노동의 보장과 안정성, 노동과 가정생활의 조화,

고용에서의 공평한 처우, 안전한 노동, 사회보호 등으로 측정되거나 연결된다(석재은 외, 2005).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고용 관련 요인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재규, 2001; 박재규·박순영, 2005; 이인숙·배화숙, 2008; Bardasi & Francesconi, 2004 등). 고용안정성 및 고용관련 만족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이 중에서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고용조건이나 고용관련 만족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인숙·배화숙, 2008). 또한 노동의 수량적 유연성과 노동 강도의 강화는 노동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이상의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재규, 2001). 고용유형 역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박재규, 2001; 박재규·박순영, 2005; Bardasi & Francesconi, 2004) 제시되었으며, 고용형태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손신영, 2015).

④ 돌봄(아동·노인·통합)

돌봄에 대한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Fisher & Tronto(1990)는 “돌봄(caring)은 우리의 세계를 유지하고, 지속하고 개선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여기에서 세계는 우리의 몸, 자아, 환경을 포함하며, 복잡한 삶의 그물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였다. 또한 Brandsen(2009)은 기본적으로 Fisher & Tronto(1990)의 돌봄의 정의를 수용하면서 “돌봄은 단지 기저귀를 갈아주고, 집을 청소하고 노인을 돌봐주는 것만이 아니라, 욕구에 대한 이해가 중심이 되는 활동이다” 라고 하였다. Held(2006) 역시 “돌봄은 먹이기, 씻기기, 환경정리 등 기능적 돌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 및 배려와 같은 ‘관계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돌봄은 관계적이고, 기계로 대체될 수 없다. 돌봄을 받는 대상이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였다.

이처럼 돌봄은 총체적인 삶의 질의 유지를 돕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신체적·기능적 욕구충족과 안전보장은 필수적 요소이지만 잔존능력 유지를 돕고 개인별 취향을 존중받는 인간다운 삶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돌봄

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석재은, 2014).

⑤ 가족·공동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 간 공동체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는 지역성과 공동성을 기초로 하는 사회로서 장소적 특징(지리적 공간)과 비장소적 특징(소속감, 안정성과 집단정체성에 대한 감정 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Murphy & Kuhn, 2006). 그리고 공동체는 지리적 영역, 구성원 간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과 같이 세 가지 공통적인 구성요소로 구분될 수 있다(Hillery, 1955).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일상에서 타인으로부터 상호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다. 공동체 인식이 증가할 때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통합이 증가하여 지역주민들은 소외되지 않는다. 지역주민들 간 공동체 관계가 활성화되면 타인에 대한 관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과 연민이 형성되어 사회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손웅비, 2017).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그들의 공동체 의식이 증가할 때 삶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손웅비, 2017).

이처럼 지역사회의 공동체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촌지역의 주요 인구집단인 중년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인식과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은 높게 나타났다(이현경 외, 2014). 즉, 귀속성, 체류성, 애착성 등의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되며, 이는 결국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⑥ 환경

환경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기오염이 발생할 경우 천식 질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건강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난다. 안전하지 않은 음용수 및 오·폐수 등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수천 명의 생명이 잃었으며, 대부분은 아동들이 그 피해를 받았다(OECD, 2008).

이처럼 지역 생활환경 질은 시민들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염되지 않은 환경은 시민들의 만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며, 정신적 건강과 동시에 육체적 건강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다(OECD, 2019).

⑦ 건강

건강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intrinsic value)로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일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 가장 높게 평가되는 가치 중 하나이다. 또한 건강상태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노동시장 참가, 좋은 사회적 관계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이기도 하다. 각 사회 단위로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사회는 높은 소득과 부, 높은 고용률, 높은 정치 참여, 높은 사회네트워크 지지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OECD, 2011). 이는 삶의 질의 한 요소로서 건강함이 다른 삶의 질 요소인 소득, 고용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향요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⑧ 행정서비스 개선

시민은 곧 정부의 고객이라는 시각에서, 정부 역시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고객(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질을 혁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의 선호를 반영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 개선 및 만족도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즉, 시민들의 선호 및 의견을 반영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해 부진한 사항이나 시행상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시정함으로서 효율적 자원배분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행정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통합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명철, 2013).

⑨ 여가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노동의 양과 질 등 근로조건이 개인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한 한국의 경우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계층간 갈등과 노동중심의 사회구조 등 문제가 한국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낮추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과 삶 간 균형과 개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 간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일과 삶 간 균형은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정선, 2018; 이재완·강혜진, 2018). 반면, 근로시간이 길어지고 여가생활의 비중이 낮아질수록 삶의 질이 낮아진 경우도 확인하였다(김현정·최서희, 2018; 박세윤, 2018).

⑩ 공정사회 구현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는 개인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결과라고 이해되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질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정책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유두호 외, 2021). 분배적 정의는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절차적 정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Weiss et. al., 1999). 사회복지,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교육과 취업 기회 등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개인의 행복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은 행복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정영아, 2018).

⑪ 주거

주거 여건 내지 주거만족도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거만족이 주민들의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Evans et al., 2002), 거주지의 소음, 밀집도, 녹지, 편의시설 등이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Guite et al., 2006).

그리고 주택 소유 형태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박희봉·이희창, 2005). 주택 소유 형태에서는 자가에 비해서 전월세의 경우에는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영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⑫ 소득불평등

소득과 자산은 개인의 안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대리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제적 자원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넓힌다는 점과 경제적·개인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경제적 자원은 교육, 건강, 안전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OECD, 2011).

⑬ 시민참여

시민참여는 여러 연구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민참여는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여러 활동들 즉, 투표, 자원봉사, 협회 멤버십, 정치적이고 공동체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삶에 대한 만족, 삶의 질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시민참여를 가져오는 영향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요인은 “참여보장 법제도, 신뢰, 자주 만남”(유재원, 2003), “리더십, 정보, 파트너십”(강인성, 2007), “참여보장 법제도”(강재규, 2012; 김미 외, 2004; 김희송 외, 2010; 염재호, 2002) 등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시민참여를 끌어내는 인식의 요소나 지방정부별 참여의 여건, 지역별 참여의 제도화 정도(예: 참여예산, 정책 참여 방식 등)를 추가 영향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⑭ 삶의 만족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관적, 심리적 요인과 같은 주관적 웰빙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시되었다.

즉,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 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건강 상태, 주거 수준, 경제 수준 등 객관적인 삶의 질 지표에 대해 일반가구의 인식도 및 만족도 수준이 저소득층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김선아·박성민, 2014).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개인적 편차도 존재한다. 심리적-육체적 안정(건강), 개인 간 관계, 지역사회와 관계, 정부와의 관계,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정부신뢰 등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연구되었다. 정부의 질(서비스의 질, 신뢰 등)이 시민의 삶의 만족도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으며, 시민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조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제3장 한국형 정책조합 新 사회정책 모형 개발

1. 사회관계장관회의 안전과 정책수단 및 조합

교육부는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 장관회의 규정」에 따라 안전·공정·혁신·포용 등 사회적 가치와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4개 분야 52개의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는 정책의 최종 결과에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중시했던 과거와 달리 형평성과 사회적 가치를 더 강조한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안전과 포용, 통합 분야의 정책목표는 특정 정책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안전에 관한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공공성에 기반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행정영역과 환경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연구 영역의 변화 역시 요구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 정책 연구는 그 결과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책수단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우선, 한 국가 행위의 복잡성을 설명하며, 유사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가 선택하는 정책수단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정책 목적과 수단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정책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

최근 정책수단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책수단의 선택과 혼합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민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사회관계장관회의」 안전과 그 세부 추진 내용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우선 문헌

검토를 통하여 정책수단을 정의하고 유형화하여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시된 분석 틀을 통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된 정책의 정책수단과 조합을 분석하고 정책조합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연구진 5명과 외부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26> 연구흐름도

연구 내용	연구방법
1)정책수단 및 정책조합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정책수단 관련 선행연구 -> 분석의 타당성 확보 ·정책수단 및 유형화 -> 분석틀 제시	문헌연구
2)사회관계장관회의의 정책수단 및 조합 분석 · 분야별 - 안전, 통합, 포용, 혁신 · 영역별 - 2장에서 정의한 보장 영역	분야별 사례 분석
3) 함의 도출	전문가 조사

1) 정책수단의 연구 경향

정부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책수단이 다양해지며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전영한 · 이경희, 2010). 과거 정책연구는 정책의 효과성과 정책 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정책수단의 개념은 정부가 활용하는 방법으로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정책과 연관된 이익당사자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책수단의 선택과 조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요구되었다. Howlett & Rayner(2007)는 이러한 정책수단 연구의 변화를 구분하여 정리했다.

우선, 1세대 정책수단 연구는 정부와 시장, 규제정책 등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책수단 선택에 집중되었다. 비록 정책수단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했지만, 시장 친화적 정책과 반시장적 정책으로 단순화하여 구분하였다. 2세대 정책수단 연구는 정책 수단 혼합에 대한 고민과 함께 최적의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과정에서 정책수단 선택 영향요인과 정책 맥락이 중요한 연구주제로 확장되었다. 3세대 정책수단연구

는 2세대 연구에서 조금더 진일보하여 각 정책 수단 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대부분의 정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절한 정책 수단이 요구되고, 그 들을 채택하며 변화한다. 따라서 단일 정책도구의 효과보다 기존 정책에 새롭게 조합되어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목하였다(Ganghof, 2006). 정리하면, 3세대 정책수단 연구는 정책 수단의 적절성과 복잡한 정책환경과 맥락을 고려한 최적의 정책 도구 설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표 27> 정책수단 연구의 변화과정

구분	세부내용
1세대	<단일> 단일 정책수단(친시장 반시장)
2세대	<복합> 다양화된 정책 수단 분류 단일 정책 수단의 선택에 중점
3세대	<조합> 정책 수단과 조합의 중요성과 그 영향요인 맥락을 고려한 정책 수단 조합의 효과성 제고

2) 선행연구

우리나라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책수단을 유형화하고 그 특징을 기술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우선 이론 중심적 연구 중 조성한(2006)의 연구는, 행정 환경이 정책 프로그램이나 조직 관리에서 집행 수단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규제를 정책수단으로 정의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책임성, 지속성, 전문성, 절차의 공정성, 포괄성 등을 제시했다. 전영한(2007a)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책수단의 강제성과 직접성의 차원을 적용하여 직접규제, 간접규제, 직접유인, 간접유인으로 이루어진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권혁주(2009)는 사례 연구를 통하여 정책수단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며, 효율성에 기반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조합됨에 따라 정치적 성격이 명확해진다고 주장하였다. 전영한·이경희(2010)의 연구는 정책 수단 선택 영향요인을 검증을 위한 이론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표 28> 정책수단 연구 - 이론중심

저자(연도)	연구 내용
조성한 (2006)	정책 수단으로서 규제를 정의하고, 평가 기준으로 책임성, 지속성, 전문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등을 제시함
전영한 (2007a)	정책도구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강제성과 직접성 활용하여 직접규제, 간접규제, 직접유인, 간접유인으로 이루어진 모델 제시
권혁주 (2009)	문헌 및 사례 연구를 통하여 정책 수단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하고, 효율성에 기초해야 하지만, 여러 정책 수단이 조합되며 정치적 성격이 분명해짐
전영한 · 이경희 (2010)	문헌연구를 통해 정책 수단연구의 발전과정과 정책 수단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책 수단 선택영향 요인에 대한 이론 개발 필요성을 주장함

<표 29> 정책수단 연구 - 사례중심

저자(연도)	연구 내용
김해란 (2010)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정보와 재정이 혼합된 정책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보 수단의 효과성은 미비함
류숙원 · 김상윤 (2010)	중소기업정책은 재정적 수단(기술개발조세감면)이 중소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보수단은(기술정보제공-긍정적, 기술지원-부정적) 세부 정책 수단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 함
김윤희 (2011)	녹색성장을 위해 농업관련 정책을 유형화하고,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최적의 정책조합을 제시함
박상원 (2016)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다문화 가족 복지 정책 수단을 비교하여 정책 수단이 정부가 설정한 정책 목표에따라 수단의 선택과 조합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남
최예나 (201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 수단과 정책성과 관계를 분석하여, 매개 수단은 형평성, 민주성, 신뢰성 제고에 긍정적이며 규제 수단은 민주성과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수단에 관한 사례 연구는 정책수단과 정책 결과의 정량적 분석의 어려움이 있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선, 김해란(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정보 수단과 재정수단이 혼합된 형태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었지만, 정보 수단의 경우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숙원·김상윤(2010)은 중소기업정책을 구분하여 재정적 수단(조세감면)이 중소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보 수단 중 기술정보 제공은 기업혁신에 긍정적이지만, 기술지원

수단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형(2011)은 녹색성장을 위해 농업 관련 정책을 유형화하고,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규제강화와 재정지원 등 최적의 정책 조합을 순차적으로 조합할 것을 제시하였다. 박상원(2016)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 가족 복지 정책수단을 비교하여 사용되는 정책수단이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변동하여 정책수단이 정치적 성격이 강함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예나(2017)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 정책수단과 정책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매개(정보)수단이 주민의 형평성, 민주성, 신뢰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규제(권위)수단의 경우 민주성과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존 연구는 정책수단 연구의 이론적 함의, 정책수단의 유형화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수단 선택과 조합, 그 정책 성과간의 관계 및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역시, 정책수단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정책수단을 유형화하여 주요 정책 분야의 정책문제 해결 및 목표달성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정책수단의 정의 및 유형

정책수단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방법, 장치, 기법, 기술과 같이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수단”으로 귀결된다. 정책수단을 연구한 학자들의 정책수단에 대한 정의는 다음 <표 30>과 같다.

<표 30> 정책수단의 정의

구분	정의
Schneider and Ingram (1990, 1997)	개인과 집단이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의도적인 개입수단
Howlett(1991)	정부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Howlett and Ramesh (1995, 2003)	정부가 정책집행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 또는 장치
Salamon(2002)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구분 가능한 방법

구분	정의
Howlett(2005)	의도적 국가권위를 통한 거버넌스 기법
Vedung(2007)	정부가 국가의 안녕을 위해 행사하는 일련의 권력 기법

초기 정책수단의 분류는 비교적 단순하였으나 최근 정책수단의 종류는 세분화되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일 정책수단이 아닌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초기 학자들은 정책수단의 유형을 규제, 정보, 경제적 수단으로 구분하였다(Vedung, 2007). 규제(Sticks) 수단은 규칙, 규범, 명령, 법령 등이 해당되며, 경제적 (Carrots) 수단은 현금이나 현물과 같은 물질적 지원 또는 징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보(Sermons) 수단은 권고, 훈계, 지식전달 등이 해당된다. 전통적으로 논의되는 정책수단의 유형은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정책 수단의 유형

구분	내용
Hood(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개/정보(nodalidty/information) · 재정(treasure/finance) · 권위(authority) · 조직(organization)
Doren & Phidd(1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설득(exhortaion) · 정부지출(expenditure) · 규제(regulation) · 공적소유(public ownership)
Peters & Van Nispen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수단(legal instrument) · 재정적 유인(financial incentives) · 정보전달(information transfer)
Vedung(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sticks), 경제(Carrots), 정보(sermons)

최근에는 위와 같은 전통적 정책 수단의 유형뿐만 아니라 다면적 수단 들(multi-faceted instruments), 유인(incentives), 지표 또는 가이드라인 (indicators), 사람중심 수단들 (instruments focused on persons), 의사소통 수단(communicative instruments), 계약 수단 (contracts)(de Bruijn and Hufen, 1998) 그리고 민주성을 강조한 다양한 집행 거버넌스 구조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박석희 · 조강주, 201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수단은 학자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Hood(1986)의 “NATO”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 기준을 구성하였다. Hood(1986)의 정책도구는 도구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governing resources)의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여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위한 정부의 정책도구 선택을 설명한다. 그는 정책도구의 효능(effector)과 탐지(detector)를 목적으로 네 가지 자원(resource)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아래의 <표 32>와 같이 여덟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네 가지 자원은 정보형(nodality), 권위형(authority), 재정형(treasure), 조직형(organization)으로 구분된다.

<표 32> Hood의 정책도구 분류

구분		운영 자원			
		정보형	권위형	재정형	조직형
방법	효10(effector)	정보제공 정책홍보, 가이드라인, 캠페인	제공 자격부여(자격증), 승인, 인증제, 권한부여(바우처, 쿠폰 등), 법·제도적 제한·통제, 조건적 권위(위협), 권고, 할당제 등	지원 무상보조금 또는 지원금(원조형태), 장려금, 공공근로임금 또는 지불금, 대출, 융자, 과세, 벌금, 과태료, 복권, 푸드스탬프, 바우처	정부직접서비스 관료제, 공기업설립, 준정부기관,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 등 새로운 조직신설 및 전환, 하부조직 신설, 정부조직 통폐합, 직간접적 조직 등
	탐지(detector)	정보수집 실태조사, 등록제, 신청제	요청 정보공개(등록제), 보고(재정지출, 수입 등), 심문, 검사(검문)	보상 신고포상, 세제혜택(세금 면제), (신청 및 등록 형태의)보조금 또는 지원금	설문, 공공감시카메라(CCT V), 감사원 등 정보수집차원의 조직기구

*출처: Hood(1986) pp.124-125, Hood, C. C., & Margetts, H. Z.(2007) 재구성

정보형 자원에서는 중심형 정책도구가 활용된다(김연수·강민아, 2016). 중심형 정책도구는 정부가 정보 혹은 사회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로, 여기서 중심(‘nodality’)의 ‘node’는 정보 채널의 교차점을 뜻한다(Hood, 1986). 정부는 이러한 매개적 성격을 활용하여 정보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며, 정부 내의 내부 정보를 외부의 사회나 개인들에게 전

달하고 반대로 외부의 정보를 수집하여 정부의 내부로 끌어들인다. 이러한 정보 흐름의 교차점에서 정부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다른 조직들이나 개인들은 열람할 수 없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도 하는 등 정부가 다른 주체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전략적 위치를 점한다. 이는 곧 정보통신기술이 정부의 매개적 자원 활용에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됨을 뜻하며, 더 나아가 민간-정부 간 소통 및 상호작용의 근본적인 패턴을 재형성하게 될 것을 내포한다(Margetts, 2012). 정부가 정보 자원을 소비하는 방법은 정부가 다른 주체들과 주고받는 ‘메시지’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 때 정부에 대한 외부 주체들의 신뢰가 떨어지거나 부재한 경우 정부가 전달하는 정보 혹은 메시지의 효력 역시 약화되어 매개 혹은 연계의 효과성이 감소하게 된다(Hood & Margetts, 2007). 정보 자원에 기초한 중심형 정책도구의 사례로는 안보 분야의 공공 부문 행위자들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정보를 공유 및 교환하는 것(Jennings & Lodge, 2009), 또는 중앙 통계청에서 관심을 둔 개인 혹은 집단을 대상으로 관련 통계를 수집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Hardiman & Scott, 2009).

정보형에서 효능형은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정책으로서 정책홍보, 가이드라인, 캠페인 등을 말한다. 반면에 탐지형은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의 정책이며, 실태조사, 정책혜택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정보를 기입하는 등록제, 신청제 등이다.

권위형 자원에서는 권위형 정책도구가 활용된다(김연수·강민아, 2016). 권위형 정책도구는 정부가 가진 공식적인 법적 위력이 활용되는 도구를 일컫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정부가 가지는 특유의 권위를 행사하여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사회와 개인에게 공식적인 요구 혹은 금지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어떠한 대상을 보장하거나 그에 대한 판정을 내리기도 한다. 정부가 가지는 권위적 자원은 그것의 근거와 수준 및 정도가 국가마다 다를지라도, 정부라는 조직을 전통적으로 가장 잘 정의하는 특징 중 하나이다. 정부가 강제적 자원을 소요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권위에 기반을 둔 메커니즘이지만 정부가 갖는 강제성 또는 권위 역시 결국 법의 지배 하에 있으므로, 정부의 권위가 법에 근거한 형태와 과정으로 구축되지 않아 법적권위가 미약할 경우 권위의 법적 근거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Hood & Margetts, 2007). Howlett & Shivatoki(2014)는 강제적 자원에 바탕을 둔 권위형 정책도구의 예시로 어떤 법률이나 규제에 대해서 일정 기

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없어지게 함을 명시하는 법 조항인 일몰조항(sunset clause)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정부가 정부의 권위와 권력을 기반으로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을 도입한 후, 정책의 효력이 다했거나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될 때 미리 종료일을 제시하여 추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몰조항을 정부가 사용하는 권위형 정책도구의 일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권위형의 효능형에는 자격증과 같은 자격부여, 승인, 인증제, 바우처나 쿠폰과 같은 권한부여 정책, 법과 제도적으로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정책, 조건적으로 권위를 사용하는 정책, 권고, 할당제 등이 있다. 반면에 탐지형에는 정보공개, 재정지출이나 수입 등에 대한 보고, 심문, 검사나 검문 등이 있다.

재정형 자원에서는 재원형 정책도구가 활용된다(김연수·강민아, 2016). 재원형 정책도구는 정부가 금전 또는 화폐 특유의 대체가능성으로 인해 자유롭게 교환이 가능한 자산을 소요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부는 재정적 자원과 재원형 정책도구를 통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또 다른 가치를 지닌 여타 자산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다. 따라서 금전 및 화폐와 같은 자산은 정부가 재정적 자원을 소요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매개체이며, 정부가 보유한 자산의 대체가능성이 떨어질 경우 교환이 불가해져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이는 재원형 정책도구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Hood & Margetts, 2007). 재원형 정책도구 역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는데, 안보 및 위기관리의 분야의 재원형 정책도구로 안보를 위한 직접적인 지출 내역이나 보험 또는 보증 서비스의 간접적인 제공을 예로 들 수 있다(Jennings & Lodge, 2011). 기부금 세제 혜택 역시 재원형 정책도구의 한 형태로, 기부의 긍정적 외부효과의 맥락에서 국민들이 기부를 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당근” 이라고 할 수 있다(Howlett & Shivatoki, 2014).

재정형은 대부분 정부의 재정수입과 지출과 관련되며 구체적으로 효능형에는 무상보조금이나 원조형태의 지원금, 장려금, 공공근로임금, 대출, 융자, 과세, 벌금, 과태료, 복권, 푸드스탬프, 바우처 등이 포함되는 반면에 탐지형에는 보상형태의 정책으로서 신고포상, 세제혜택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형 자원에서는 조직형 정책도구가 활용된다(김연수·강민아, 2016).

조직형 정책도구는 다양한 기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동일한 조직 내에 보유하는 정부의 성격 그 자체를 말한다. 여기서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는 인력이란 사무직, 관료, 군인, 특정 분야의 전문가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며, 이러한 인력들이 소유한 기술 또는 역량 역시 경영, 회계, 조직 및 인력 관리부터 건설, 토지 관리, 컴퓨터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광범위하다. 조직적 자원은 정부가 자체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또 다른 주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물리적 역량을 제공하며, 비금전적인 힘의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Hood & Margetts, 2007).

조직적 자원은 앞서 설명한 세 종류의 자원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어 다른 자원들의 파생 개념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다른 세 가지 자원 없이 정부가 조직적 자원만을 활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개념들과 동일한 수준을 지닌 정부의 기본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특정 공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정책적 역량을 가진 정부 조직의 인력들이 맞춤 투입되어 수행하는 물리적 행위(treatment)를 통해 조직형 자원을 소요하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해당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기술이 부족하거나 부적합할 경우, 조직형 정책도구의 효과성이 떨어지게 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Hood & Margetts, 2007). Howlett & Shivatoki(2014)는 조직형 정책도구의 한 예로 민관 협동 파트너십을 제시하였는데, 민간과의 협업 네트워크 역시 공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적 권력 혹은 영향력의 연장선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조직형 정책도구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조직형의 효능형에는 정부의 직접서비스 기관 방식의 관료제, 공기업, 준정부기관,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 등의 새로운 조직이나 하부조직 신설, 조직의 통폐합 등이 있고, 탐지형에는 감사원 등의 정보수집차원의 조직기구나 설문이나 통계조사를 위한 기구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NATO” 모형은 매개·정보(Nodality), 재정(Treasure), 권위(Authority), 조직(Organization)과 같은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이 분석 기준을 통하여 아래의 <표 33>과 같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추진된 정책을 유형화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33> 정책수단 분류를 위한 분석 틀

구분	세부 정책수단	
정보 (Nodality)	정보수집	실태조사, 연구개발, 기술개발, 데이터 구축·개발·운영·관리
	정보제공	홍보, 우수사례 소개, 정보공개, 캠페인
	정보활용	교육·훈련,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서비스제공, 교육자료 배포
권위 (Authority)	권한 및 자격부여	자격부여, 승인, 인증, 권한부여
	공적 규제·관리	법·제도적 제한·통제, 권고, 할당제
	점검 및 평가	모니터링, 보고, 심문, 검사, 성과평가
재정 (Tresure)	현금지원	보조금, 지원금, 장려금
	현물지원	시설확대, 장비 지원, 인프라 구축, 포상
	징수	과세, 벌금, 과태료
조직 (Organization)	기존조직(유지)	인력 확보, 조직 전문성 강화
	조직신설·변화	조직신설(책임운영기관, 공기업 설립, 민간위탁 등), 조직 통폐합
	협업	민-관/ 관-관 협력

정보형 정책수단은 외부의 정보를 내부로 끌어들이거나(정보수집), 내부의 정보를 외부로 전달하거나(정보제공), 매개적 특성을 활용하여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는(정보활용)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정보수집은 실태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 데이터 구축·개발·운영·관리 등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은 홍보, 우수사례 소개, 정보공개, 캠페인 등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정보활용은 교육·훈련,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서비스제공, 교육자료 배포 등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보제공의 경우 관련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는 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보활용의 경우 특정 정보를 활용(매개)하여 자원화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권위형 정책수단에서는 공식적인 법·제도적 수단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참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권한 및 자격부여), 법·제도적인 통제를 하거나(공적 규제·관리),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평가(점검 및 평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권한 및 자격부여는 자격부여, 승인, 인증, 권한부여 등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공적 규제·관리는 법·제도적 제한·통제, 권고, 할당제 등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점검 및 평가는 모니터링, 보고, 심문, 검사, 성과평가 등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보공시의 경우 정보를 알려주는 데 그치는 것이라면 정보형 정책수단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모니터링 규제의 관점에서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데 편익이 발생한다면 권위형 정책수단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형 정책수단은 정부의 재정수입 및 지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금지원, 현물지원, 징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현금지원은 보조금, 지원금, 장려금 지급 등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현물지원은 시설확대, 장비 지원, 인프라 구축, 포상 등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징수는 과세, 벌금,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조직형 정책수단은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들의 인력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기존조직(유지), 조직신설·변화, 협업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기존조직(유지)은 인력 확보, 조직 전문성 강화 등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조직신설·변화는 책임운영기관, 공기업 설립, 민간위탁 등의 조직신설, 조직 통폐합 등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협업은 민-관, 관-관 협력 등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4) 정책수단 조합

정책수단의 조합(Policy mix)은 어떤 정책수단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에 관한 기술적 문제이다. 이는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시간순서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의 집합을 의미한다. 정책수단의 조합은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며, 정책결정자의 의도에 의한 조합은 정부 수준, 이데올로기, 정책 기조 등에 영향을 받는다. 정부 수준에 따른 정책수단 조합은 일반적으로 중앙-지방, 각 지방정부, 각 정부 기관 및 부처와 같이 조직의 형태와 단위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정책의 매개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유사하거나 같은 정책 문제에 대해서 정책수단 선택을 달리한다.

한편, 정책수단 조합의 유형은 정책목표의 일관성(Consistency)과 정책수단의 계속성

(Coherence)을 기준으로 표류(Drift), 전환(Conversion), 층화(Layering), 대체(Replacement)로 구분되며, 이는 정책의 내생적 변화를 설명하는 분석 틀이 된다(Kern & Howlett, 2009). 층화는 기존 정책수단의 폐기 없이 새로운 정책 목적과 수단이 더해지는 경우로, 정책 목적의 비일관성과 정책수단의 비계속성의 문제가 있다. 전환은 기존 정책 목적은 일관되게 유지하며 정책수단을 새롭게 바꾸는 형태로 정책 목적과 연계되지 않은 정책수단의 문제가 발생한다. 표류는 기존 정책수단의 변화 없이 기존의 정책 목적이 새로운 정책 목적으로 대체되며 이로 인한 정책수단의 결과가 비효과적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대체는 정책 목적과 수단을 일치하기 위해 기존 정책수단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34> 정책수단 혼합유형

구분		정책수단	
		계속적 (Consistent)	비계속적 (Inconsistent)
정책 목적	일관적 (Coherent)	대체 (Replacement)	전환 (Conversion)
	비일관적 (Incoherent)	표류 (Drift)	층화 (Layering)

*출처: Kern & Howlett(2009)

대부분의 정부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단일의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통 그것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이 조합된 정책도구를 활용한다. 이 경우 어떤 정책을 조합하여 실행하는지에 따라서 정책 목표 달성 정도와 그 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오민수·김재일, 2009).

실제 현실에서 발견되는 정책도구는 기초적 원형 그대로 사용되기 보다는 여러 도구가 조합되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도구조합은 병렬적으로 혹은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병렬적 조합은 여러 정책도구를 한 가지 정책목적을 위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병렬적 조합은 도구묶음 혹은 도구포트폴리오라고도 불린다. Howlett(2005)은 이러한 복수도구의 동시사용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의 인식이 이른바 “2세대 도구 이론”의 특징이라고 지적한다. 순차적 도구조합은 정책효과를 발생시키는 정

책인과관계가 시간을 두고 진행됨에 따라 정책도구의 성격이 단계적으로 변화하면서 발생한다(Howlett, 2005).

Salamon(2002)에 의하면 정부활동에서 각기 다른 도구는 자기만의 고유한 역학관계와 정치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정부는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하나의 도구만을 사용하기보다 복수의 다양한 도구를 동시에 사용한다. 개별 정책도구에 국한되었던 분석의 대상을 정책도구의 혼합적 사용으로 확장하면 상호보완적 정책도구 조합을 설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 사회관계장관회의 분야별 정책수단 및 조합 현황

(1) 분야별 정책수단 현황

Hood(1986)의 “NATO” 모델을 적용하여 제시한 정책수단 분석 틀을 통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의 128개 안건을 분석하였다. 각 안건 주제 및 내용에서 분석의 틀로 제시하였던 세부 정책수단이 활용되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에 따라 정보형(N), 권위형(A), 재정형(T), 조직형(O)과 같은 정책수단은 세부 정책수단(각 정책수단별 3개씩)의 해당 여부에 따라 최소 0개부터 최대 3개까지의 범위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5>와 같다. 총 128개의 안건 및 407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빈도를 살펴보면 권위형(43.0%), 재정형(22.6%), 정보형(17.9%), 조직형(16.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25.6%), 재정형의 현물지원(13.8%), 정보형의 정보활용(10.1%), 권위형의 점검 및 평가(9.6%), 조직형의 협업(8.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제 2조를 보면, 관련 분야의 중장기 대책 및 계획수립, 법령의 제·개정 그리고 규제·규범·지침 마련 등이 회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권위형 수단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 사회관계장관회의 분야별 정책수단 현황

구분	정보(N)				권위(A)				재정(T)				조직(O)				계
	정보 수집	정보 제공	정보 활용	소계	권한· 자격	규제· 관리	점검· 평가	소계	현금 지원	현물 지원	징수	소계	기존 조직	조직 변화	협업	소계	
포용 분야 (안전: 30)	3 (3.6)	5 (6.0)	6 (7.1)	14 (16.7)	20 (23.8)	5 (6.0)	7 (8.3)	32 (38.1)	9 (10.7)	12 (14.3)	3 (3.6)	24 (28.6)	5 (6.0)	2 (2.4)	7 (8.3)	14 (16.7)	84 (100)
안전 분야 (안전: 46)	5 (3.0)	9 (5.4)	20 (12.0)	34 (20.5)	43 (25.9)	19 (11.4)	12 (7.2)	74 (44.6)	2 (1.2)	20 (12.0)	9 (5.4)	31 (18.7)	10 (6.0)	2 (1.2)	15 (9.0)	27 (16.3)	166 (100)
혁신 분야 (안전: 31)	4 (4.3)	2 (2.2)	9 (9.7)	15 (16.1)	24 (25.8)	2 (2.2)	12 (12.9)	38 (40.9)	10 (10.8)	14 (15.1)	0 (0)	24 (25.8)	3 (3.2)	4 (4.3)	9 (9.7)	16 (17.2)	93 (100)
통합 분야 (안전: 21)	3 (4.7)	1 (1.6)	6 (9.4)	10 (15.6)	17 (26.6)	6 (9.4)	8 (12.5)	31 (48.4)	1 (1.6)	10 (15.6)	2 (3.1)	13 (20.3)	4 (6.3)	2 (3.1)	4 (6.3)	10 (15.6)	64 (100)
계 (안전: 128)	15 (3.7)	17 (4.2)	41 (10.1)	73 (17.9)	104 (25.6)	32 (7.9)	39 (9.6)	175 (43.0)	22 (5.4)	56 (13.8)	14 (3.4)	92 (22.6)	22 (5.4)	10 (2.5)	35 (8.6)	67 (16.5)	407 (100)

각 분야별 정책수단 현황을 살펴보면, 포용 분야의 30개 안전 및 84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빈도는 권위형(38.1%), 재정형(28.6%), 정보형(16.7%)·조직형(16.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23.8%), 재정형의 현물지원(14.3%), 재정형의 현금지원(10.7%), 권위형의 점검 및 평가(8.3%)·조직형의 협업(8.3%), 정보형의 정보활용(7.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안전 분야의 46개 안전 및 166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빈도는 권위형(44.6%), 정보형(20.5%), 재정형(18.7%), 조직형(16.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25.9%), 정보형의 정보활용(12.0%)·재정형의 현물지원(12.0%), 권위형의 공적 규제·관리(11.4%), 조직형의 협업(9.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혁신 분야의 31개 안전 및 93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빈도는 권위형(40.9%), 재정형(25.8%), 조직형(17.2%), 정보형(16.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25.8%), 재정형의 현물지원(15.1%), 권위형의 점검 및 평가(12.9%), 재정형의 현금지원(10.8%), 조직형의 협업(9.7%)·정보형의 정보활용(9.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합 분야의 21개 안전 및 64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빈도는 권위형(48.4%), 재정형(20.3%), 정보형(15.6%)·조직형(15.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26.6%), 재정형의 현물지원(15.6%), 권위형의 점검 및 평가(12.5%), 권위형의 공적 규제·관리(9.4%)·정보형의 정보활용(9.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포용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하여 재정형, 조직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서비스 확보의 관점에서 현금 및 현물의 직·간접적인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협업체계 구축 등이 보다 강조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안전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하여 정보형, 권위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안전 확보의 관점에서 범죄 및 피해 예방 교육, 제도 운영 및 규제 등이 보다 강조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혁신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하여 재정형, 조직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행정환경 및 서비스 개선의 관점에서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 부처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협업체계 구축 등이 보다 강조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통합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하여 권위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평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및 규제 등이 보다 강조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분야별 정책수단 조합 현황

NATO 모델에서의 정책수단의 조합은 단일 조합(4개), 2개 조합(6개), 3개 조합(4개), 4개 조합(1개)과 같이 총 15개의 정책조합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사회관계장관회의」의 분야별 정책수단 조합 현황은 다음의 <표 36>과 같다. 총 128개의 안전 및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별 빈도를 살펴보면 3개 조합(39.8%), 2개

조합(37.5%), 단일 조합(16.4%), 4개 조합(6.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단일 정책수단보다는 조합된 정책수단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AT(17.2%), A(14.8%), NAT(13.3%) · ATO(13.3%), NAO(12.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권위형(A) 수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권위형에 재정형(T) 또는 정보형(N) 또는 조직형(O)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6> 사회관계장관회의 분야별 정책수단 조합 현황

구분	1개					2개						3개					4개	계	
	N	A	T	O	소계	NA	NT	NO	AT	AO	TO	소계	NAT	NAO	NTO	ATO	소계		NATO
포용 분야	0 (0)	5 (16.7)	0 (0)	1 (3.3)	6 (20.0)	0 (0)	3 (10.0)	0 (0)	7 (23.3)	2 (6.7)	0 (0)	12 (40.0)	3 (10.0)	4 (13.3)	0 (0)	4 (13.3)	11 (36.7)	1 (3.3)	30 (100)
안전 분야	0 (0)	4 (8.7)	0 (0)	0 (0)	4 (8.7)	6 (13.0)	0 (0)	0 (0)	6 (13.0)	4 (8.7)	0 (0)	16 (34.8)	7 (15.2)	6 (13.0)	1 (2.2)	7 (15.2)	21 (45.7)	5 (10.9)	46 (100)
혁신 분야	0 (0)	6 (19.4)	0 (0)	1 (3.2)	7 (22.6)	4 (12.9)	1 (3.2)	0 (0)	5 (16.1)	2 (6.5)	1 (3.2)	13 (41.9)	3 (9.7)	4 (12.9)	0 (0)	4 (12.9)	11 (35.5)	0 (0)	31 (100)
통합 분야	0 (0)	4 (19.0)	0 (0)	0 (0)	4 (19.0)	0 (0)	0 (0)	0 (0)	4 (19.0)	3 (14.3)	0 (0)	7 (33.3)	4 (19.0)	2 (9.5)	0 (0)	2 (9.5)	8 (38.1)	2 (9.5)	21 (100)
계	0 (0)	19 (14.8)	0 (0)	2 (1.6)	21 (16.4)	10 (7.8)	4 (3.1)	0 (0)	22 (17.2)	11 (8.6)	1 (0.8)	48 (37.5)	17 (13.3)	16 (12.5)	1 (0.8)	17 (13.3)	51 (39.8)	8 (6.3)	128 (100)

각 분야별 정책수단 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포용 분야의 30개 안전 및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별 빈도는 2개 조합(40.0%), 3개 조합(36.7%), 단일 조합(20.0%), 4개 조합(3.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 조합의 경우 AT(23.3%), A(16.7%), NAO(13.3%) · ATO(13.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안전 분야의 46개 안전 및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별 빈도는 3개 조합(45.7%), 2개 조합(34.8%), 4개 조합(10.9%), 단일 조합(8.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 조합의 경우 NAT(15.2%) · ATO(15.2%), NA(13.0%) · AT(13.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혁신 분야의 31개 안전 및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별 빈도는 2개 조합

(41.9%), 3개 조합(35.5%), 단일 조합(22.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 조합의 경우 A(19.4%), AT(16.1%), NA(12.9%) · NAO(12.9%) · ATO(12.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합 분야의 21개 안전 및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별 빈도는 3개 조합(38.1%), 2개 조합(33.3%), 단일 조합(19.0%), 4개 조합(9.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 조합의 경우 A(19.0%) · AT(19.0%) · NAT(19.0%), AO(14.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포용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하여 단일 조합과 2개 조합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권위형(A)이 단독으로 활용되거나, 권위형(A)에 재정형(T) 또는 조직형(O)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안전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하여 3개 조합과 4개 조합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권위형(A)에 재정형(T) 또는 정보형(N)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는 3개 이상의 정책수단 조합의 비율(56.6%)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조합된 정책수단이 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혁신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하여 단일 조합과 2개 조합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권위형(A)이 단독으로 활용되거나, 권위형(A)에 정보형(N) 또는 재정형(T) 또는 조직형(O)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통합 분야의 경우 단일 조합, 3개 조합, 4개 조합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권위형(A)이 단독으로 활용되거나, 권위형(A)에 재정형(T)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통합 분야에서는 3개 이상의 정책수단 조합의 비율(47.6%)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조합된 정책수단이 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6)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및 조합 현황

(1)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현황

「사회관계장관회의」의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현황은 다음의 <표 37>과 같다. 각 보장

영역별 정책수단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영역의 31개 안건 및 90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빈도는 권위형(44.4%), 재정형(24.4%), 조직형(17.8%), 정보형(13.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26.7%), 재정형의 현물지원(14.4%), 권위형의 점검 및 평가(14.4%), 재정형의 현금지원(10.0%)·조직형의 협업(10.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7> 사회관계장관회의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현황

구분	정보(N)				권위(A)				재정(T)				조직(O)				계
	정보 수집	정보 제공	정보 활용	소계	권한·자격	규제·관리	점검·평가	소계	현금 지원	현물 지원	징수	소계	기존 조직	조직 변화	협업	소계	
교육 (안건: 31)	2 (2.2)	2 (2.2)	8 (8.9)	12 (13.3)	24 (26.7)	3 (3.3)	13 (14.4)	40 (44.4)	9 (10.0)	13 (14.4)	0 (0)	22 (24.4)	3 (3.3)	4 (4.4)	9 (10.0)	16 (17.8)	90 (100)
안전 (안건: 29)	4 (3.4)	6 (5.1)	15 (12.8)	25 (21.4)	28 (23.9)	15 (12.8)	5 (4.3)	48 (41.0)	1 (0.9)	14 (12.0)	8 (6.8)	23 (19.7)	6 (5.1)	2 (1.7)	13 (11.1)	21 (17.9)	117 (100)
고용, 임금 (안건: 4)	0 (0)	0 (0)	0 (0)	0 (0)	3 (27.3)	1 (9.1)	0 (0)	4 (36.4)	2 (18.2)	3 (27.3)	0 (0)	5 (45.5)	2 (18.2)	0 (0)	0 (0)	2 (18.2)	11 (100)
돌봄 (안건: 14)	1 (2.6)	2 (5.1)	4 (10.3)	7 (17.9)	7 (17.9)	2 (5.1)	7 (17.9)	16 (41.0)	2 (5.1)	5 (12.8)	1 (2.6)	8 (20.5)	2 (5.1)	1 (2.6)	5 (12.8)	8 (20.5)	39 (100)
가족, 공동체 (안건: 14)	3 (6.8)	1 (2.3)	2 (4.5)	6 (13.6)	13 (29.5)	4 (9.1)	2 (4.5)	19 (43.2)	4 (9.1)	7 (15.9)	2 (4.5)	13 (29.5)	3 (6.8)	1 (2.3)	2 (4.5)	6 (13.6)	44 (100)
환경 (안건: 9)	1 (4.2)	1 (4.2)	1 (4.2)	3 (12.5)	7 (29.2)	2 (8.3)	5 (20.8)	14 (58.3)	1 (4.2)	2 (8.3)	0 (0)	3 (12.5)	3 (12.5)	0 (0)	1 (4.2)	4 (16.7)	24 (100)
건강 (안건: 8)	0 (0)	2 (8.0)	4 (16.0)	6 (24.0)	8 (32.0)	2 (8.0)	2 (8.0)	12 (48.0)	0 (0)	4 (16.0)	1 (4.0)	5 (20.0)	1 (4.0)	0 (0)	1 (4.0)	2 (8.0)	25 (100)
행정서비스 개선 (안건: 7)	2 (9.1)	0 (0)	3 (13.6)	5 (22.7)	7 (31.8)	0 (0)	1 (4.5)	8 (36.4)	2 (9.1)	3 (13.6)	0 (0)	5 (22.7)	2 (9.1)	1 (4.5)	1 (4.5)	4 (18.2)	22 (100)
여가 (안건: 6)	0 (0)	2 (16.7)	1 (8.3)	3 (25.0)	4 (33.3)	0 (0)	0 (0)	4 (33.3)	1 (8.3)	3 (25.0)	0 (0)	4 (33.3)	0 (0)	0 (0)	1 (8.3)	1 (8.3)	12 (100)
공정사회 구현 (안건: 5)	2 (10.0)	1 (5.0)	2 (10.0)	5 (25.0)	2 (10.0)	3 (15.0)	4 (20.0)	9 (45.0)	0 (0)	1 (5.0)	2 (10.0)	3 (15.0)	0 (0)	1 (5.0)	2 (10.0)	3 (15.0)	20 (100)
주거 (안건: 1)	0 (0)	0 (0)	1 (33.3)	1 (33.3)	1 (33.3)	0 (0)	0 (0)	1 (33.3)	0 (0)	1 (33.3)	0 (0)	1 (33.3)	0 (0)	0 (0)	0 (0)	0 (0)	3 (100)
계 (안건: 128)	15 (3.7)	17 (4.2)	41 (10.1)	73 (17.9)	104 (25.6)	32 (7.9)	39 (9.6)	175 (43.0)	22 (5.4)	56 (13.8)	14 (3.4)	92 (22.6)	22 (5.4)	10 (2.5)	35 (8.6)	67 (16.5)	407 (100)

안전 영역의 29개 안건 및 117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빈도는 권위형(41.0%),

정보형(21.4%), 재정형(19.7%)·조직형(17.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23.9%), 정보형의 정보활용(12.8%), 권위형의 공적 규제·관리(12.8%), 재정형의 현물지원(12.0%), 조직형의 협업(11.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임금 영역의 4개 안전 및 11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빈도는 재정형(45.5%), 권위형(36.4%), 조직형(18.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재정형의 현물지원(27.3%),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27.3%), 재정형의 현금지원(18.2%), 조직형의 기존조직(18.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돌봄 영역의 14개 안전 및 39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빈도는 권위형(41.0%), 재정형(20.5%)·조직형(20.5%), 정보형(17.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17.9%)·점검 및 평가(17.9%), 재정형의 현물지원(12.8%)·조직형의 협업(12.8%), 정보형의 정보활용(10.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공동체 영역의 14개 안전 및 44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빈도는 권위형(43.2%), 재정형(29.5%), 정보형(13.6%)·조직형(13.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29.5%), 재정형의 현물지원(15.9%), 재정형의 현금지원(9.1%)·권위형의 공적 규제·관리(9.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 영역의 9개 안전 및 24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빈도는 권위형(58.3%), 조직형(16.7%), 정보형(12.5%)·재정형(12.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29.2%), 권위형의 점검 및 평가(20.8%), 조직형의 기존조직(12.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 영역의 8개 안전 및 25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빈도는 권위형(48.0%), 정보형(24.0%), 재정형(20.0%), 조직형(8.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32.0%), 정보형의 정보활용(16.0%), 재정형의 현물지원(1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행정서비스 개선 영역의 7개 안전 및 22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빈도는 권위형(36.4%), 정보형(22.7%)·재정형(22.7%), 조직형(18.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31.8%), 정보형의 정보활용(13.6%)·재정형의

현물지원(13.6%), 정보형의 정보수집(9.1%)·재정형의 현금지원(9.1%)·조직형의 기존조직(9.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가 영역의 6개 안전 및 12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빈도는 권위형(33.3%)·재정형(33.3%), 정보형(25.0%), 조직형(8.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33.3%), 재정형의 현물지원(25.0%), 정보형의 정보제공(16.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사회 구현 영역의 5개 안전 및 20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빈도는 권위형(45.0%), 정보형(25.0%), 재정형(15.0%)·조직형(15.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권위형의 점검 및 평가(20.0%), 권위형의 공적 규제·관리(15.0%),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10.0%), 정보형의 정보수집(10.0%)·정보활용(10.0%)·재정형의 징수(10.0%)·조직형의 협업(10.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거 영역의 1개 안전 및 3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빈도는 정보형(33.3%)·권위형(33.3%)·재정형(33.3%)으로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정보형의 정보활용(33.3%)·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33.3%)·재정형의 현물지원(33.3%)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교육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권위형, 재정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안전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정보형, 조직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고용·임금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재정형, 조직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돌봄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조직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가족·공동체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권위형, 재정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환경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권위형, 조직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건강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정보형, 권위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행정서비스 개선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정보형, 재정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여가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정보형, 재정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정사회 구현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정보형, 권위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주거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정보형, 재정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조합 현황

「사회관계장관회의」의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조합 현황은 다음의 <표 38>과 같다. 각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영역의 31개 안전 및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별 빈도는 3개 조합(38.7%), 2개 조합(32.3%), 단일 조합(29.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 조합의 경우 A(25.8%), AT(16.1%)·NAO(16.1%), ATO(12.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8> 사회관계장관회의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조합 현황

구분	1개					2개							3개					4개	계
	N	A	T	O	소계	NA	NT	NO	AT	AO	TO	소계	NAT	NAO	NTO	ATO	소계	NATO	
교육	0 (0)	8 (25.8)	0 (0)	1 (3.2)	9 (29.0)	2 (6.5)	1 (3.2)	0 (0)	5 (16.1)	2 (6.5)	0 (0)	10 (32.3)	3 (9.7)	5 (16.1)	0 (0)	4 (12.9)	12 (38.7)	0 (0)	31 (100)
안전	0 (0)	0 (0)	0 (0)	0 (0)	0 (0)	4 (13.8)	0 (0)	0 (0)	3 (10.3)	3 (10.3)	0 (0)	10 (34.5)	4 (13.8)	3 (10.3)	1 (3.4)	6 (20.7)	14 (48.3)	5 (17.2)	29 (100)
고용, 임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50.0)	1 (25.0)	1 (25.0)	4 (100)	0 (0)	0 (0)	0 (0)	0 (0)	0 (0)	0 (0)	4 (100)
돌봄	0 (0)	2 (14.3)	0 (0)	1 (7.1)	3 (21.4)	0 (0)	1 (7.1)	0 (0)	3 (21.4)	2 (14.3)	0 (0)	6 (42.9)	1 (7.1)	2 (14.3)	0 (0)	1 (7.1)	4 (28.6)	1 (7.1)	14 (100)
가족, 공동체	0 (0)	1 (7.1)	0 (0)	0 (0)	1 (7.1)	0 (0)	0 (0)	0 (0)	3 (21.4)	2 (14.3)	0 (0)	5 (35.7)	4 (28.6)	0 (0)	0 (0)	3 (21.4)	7 (50.0)	1 (7.1)	14 (100)
환경	0 (0)	3 (33.3)	0 (0)	0 (0)	3 (33.3)	2 (22.2)	0 (0)	0 (0)	1 (11.1)	1 (11.1)	0 (0)	4 (44.4)	0 (0)	1 (11.1)	0 (0)	1 (11.1)	2 (22.2)	0 (0)	9 (100)
건강	0 (0)	1 (12.5)	0 (0)	0 (0)	1 (12.5)	0 (0)	0 (0)	0 (0)	2 (25.0)	0 (0)	0 (0)	2 (25.0)	3 (37.5)	2 (25.0)	0 (0)	0 (0)	5 (62.5)	0 (0)	8 (100)
행정서비 스개선	0 (0)	1 (14.3)	0 (0)	0 (0)	1 (14.3)	2 (28.6)	0 (0)	0 (0)	1 (14.3)	0 (0)	0 (0)	3 (42.9)	0 (0)	1 (14.3)	0 (0)	2 (28.6)	3 (42.9)	0 (0)	7 (100)
여가	0 (0)	2 (33.3)	0 (0)	0 (0)	2 (33.3)	0 (0)	2 (33.3)	0 (0)	1 (16.7)	0 (0)	0 (0)	3 (50.0)	0 (0)	1 (16.7)	0 (0)	0 (0)	1 (16.7)	0 (0)	6 (100)
공정사 회구현	0 (0)	1 (20.0)	0 (0)	0 (0)	1 (20.0)	0 (0)	0 (0)	0 (0)	1 (20.0)	0 (0)	0 (0)	1 (20.0)	1 (20.0)	1 (20.0)	0 (0)	0 (0)	2 (40.0)	1 (20.0)	5 (100)
주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1 (100)	0 (0)	1 (100)
계	0 (0)	19 (14.8)	0 (0)	2 (1.6)	21 (16.4)	10 (7.8)	4 (3.1)	0 (0)	22 (17.2)	11 (8.6)	1 (0.8)	48 (37.5)	17 (13.3)	16 (12.5)	1 (0.8)	17 (13.3)	51 (39.8)	8 (6.3)	128 (100)

안전 영역의 29개 안전 및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별 빈도는 3개 조합(48.3%), 2개 조합(34.5%), 4개 조합(17.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 조합의 경우

ATO(20.7%), NATO(17.2%), NA(13.8%) · NAT(13.8%), AT(10.3%) · AO(10.3%) · NAO(10.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임금 영역의 4개 안전 및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별 빈도는 2개 조합(100%)으로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 조합의 경우 AT(50.0%), AO(25.0%) · TO(25.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돌봄 영역의 14개 안전 및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별 빈도는 2개 조합(42.9%), 3개 조합(28.6%), 단일 조합(21.4%), 4개 조합(7.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 조합의 경우 AT(21.4%), A(14.3%) · AO(14.3%) · NAO(14.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공동체 영역의 14개 안전 및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별 빈도는 3개 조합(50.0%), 2개 조합(35.7%), 단일 조합(7.1%), 4개 조합(7.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 조합의 경우 NAT(28.6%), AT(21.4%) · ATO(21.4%), AO(14.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 영역의 9개 안전 및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별 빈도는 2개 조합(44.4%), 단일 조합(33.3%), 3개 조합(22.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 조합의 경우 A(33.3%), NA(22.2%), AT(11.1%) · AO(11.1%), NAO(11.1%) · ATO(11.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 영역의 8개 안전 및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별 빈도는 3개 조합(62.5%), 2개 조합(25.0%), 단일 조합(12.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 조합의 경우 NAT(37.5%), AT(25.0%) · NAO(25.0%), A(12.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행정서비스 개선 영역의 7개 안전 및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별 빈도는 2개 조합(42.9%) · 3개 조합(42.9%), 단일 조합(14.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 조합의 경우 NA(28.6%) · ATO(28.6%), A(14.3%) · AT(14.3%) · NAO(14.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가 영역의 6개 안전 및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별 빈도는 2개 조합(50.0%), 1개 조합(33.3%), 3개 조합(16.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 조합의 경우 A(33.3%) · NT(33.3%), AT(16.7%) · NAO(16.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사회 구현 영역의 5개 안전 및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별 빈도는 3개 조합(40.0%), 단일 조합(20.0%) · 2개 조합(20.0%) · 4개 조합(20.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 조합의 경우 A(20.0%) · AT(20.0%) · NAT(20.0%) · NAO(20.0%) · NATO(20.0%)으로 나타났다.

주거 영역의 1개 안전 및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별 빈도는 3개 조합(100%)으로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 조합의 경우 NAT(100%)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교육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단일개 조합과 3개 조합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아래의 <표 39>와 같이 권위형(A)이 단독으로 활용되거나, 권위형(A)에 정보형(N) 또는 재정형(T) 또는 조직형(O)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39> 교육 영역 정책조합 사례

정책 조합	안전명	세부내용
A	첨단분야 인재양성 추진상황 및 계획('20.4)	미래사회에 대비한 첨단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과 개편·정원조정 등 제도개선 ※ 「미래사회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향」('19.11) 추진현황 점검
AT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18.2)	전국민 평생학습권 보장 및 소외계층 평생학습 사다리 마련,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
ATO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16.12)	민간 자생 신직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정부 부처간 이견 조정 및 협의 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위원회' 운영
NAO	2020년 사람투자 10대 과제 관리계획('20.3)	「사람투자 10대과제」 발표('19.4) 후 48개 세부과제에 대한 성과 점검 및 브랜드 홍보 강화, 신규과제 발굴 협의회 활성화 등 향후 보완 방안

안전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3개 조합과 4개 조합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아래의 <표 40>과 같이 권위형(A)에 정보형(N) 또는 재정형(T) 또는 조직형(O)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안전 영역에서는 3개 이상의 정책수단 조합의 비율(65.5%)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조합된 정책수단이 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0> 안전 영역 정책조합 사례

정책 조합	안전명	세부내용
ATO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20.7)	아동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 및 인프라 확충, 학대조사업무 공공화, 친권자 징계권 조항 개정 등 범부처 개선안 마련
NATO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21.1)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협업 강화,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및 인력 확충, 처벌강화 및 인식개선 등 대응 체계 강화 ※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20.10) 중심
NA	사회 부처별 단기대응 현안과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4)	가해학생 파악·조치, 피해학생 조사·보호, (예비)교원 관련 조사·조치,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등
NAT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안)(‘18.3)	특별점검 및 각 분야 실태조사, 피해자 상담 지원, 가해자 제재 및 처벌 강화, 예방 및 인식개선 등

고용·임금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2개 조합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아래의 <표 41>과 같이 권위형(A) 또는 재정형(T) 또는 조직형(O)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41> 고용·임금 영역 정책조합 사례

정책 조합	안전명	세부내용
AT	여성 고용 확대 및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 방안('21.7)	여성의 취업지원, 신분야 진출 지원 등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돌봄 부담 완화 등 노동공급 감소 대비 여성 고용 확대 도모
TO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방안('20.5)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 및 기업 인센티브·실습환경 개선 등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AO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20.11)	직무 중심의 교육과정 고도화(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전문기술석사) 및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 도입·활용으로 산업현장 친화적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 경로 마련

돌봄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단일 조합, 2개 조합, 4개 조합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아래의 <표 42>와 같이 권위형(A)이 단독으로 활용되거나, 권위형(A)에 정보형(N) 또는 재정형(T) 또는 조직형(O)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42> 돌봄 영역 정책조합 사례

정책 조합	안전명	세부내용
AT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16.12)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14.10)」 시행성과 점검 및 인식개선, 인프라 확충 등 보완대책
A	온종일돌봄 확대 위한 주민공동시설 활용('20.3)	아파트 신규 단지 돌봄공간 설치 의무화, 기존단지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등 아파트 활용 온종일돌봄 공간 확보 제도개선
AO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 및 계획('19.7)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발표('18.11) 후 노인·장애인·정신질환별 지자체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부처·지자체 협조사항 등 논의
NAO	온종일돌봄 추진현황 및 과제('19.6)	온종일 돌봄체계 선도사업 1차년도 완료('19.6월)에 따라 학교돌봄·마을돌봄·지자체·교육청 협력모델 우수사례와 특별법 제정, 수요조사 등 향후 과제 제시

가족·공동체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3개 조합, 4개 조합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아래의 <표 43>과 같이 권위형(A)에 정보형(N) 또는 재정형(T) 또는 조직형(O)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족·공동체 영역에서는 3개 이상의 정책수단 조합의 비율(57.1%)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조합된 정책수단이 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3> 가족·공동체 영역 정책조합 사례

정책 조합	안전명	세부내용
NAT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17.1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확대(중위소득 60%), 아동양육비 인상 및 지원연령 상향(16세), 청소년미혼모 사이트 구축 등 미혼모가족에 대한 포용적 사회분위기 조성
AT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19.11)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강화 등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 지원 등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
ATO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21.5)	영유아 건강관리를 통한 조기발견·치료 지원, 기관의 양질의 보육서비스 및 가정 돌봄 강화,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 등 장애아동 지원 국가책임 강화
AO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분야 정책 방향('20.7)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 및 혐오차별 반대 범정부 선언 채택 등 논의

환경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단일 조합과 2개 조합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

났다. 아래의 <표 44>와 같이 권위형(A)이 단독으로 활용되거나, 권위형(A)에 정보형(N) 또는 재정형(T) 또는 조직형(O)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44> 환경 영역 정책조합 사례

정책 조합	안전명	세부내용
A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20.9)	폐기물의 발생-배출수거-재활용-처리-이행점검 등 각 단계별 핵심과제 이행을 통한 녹색 전환 실현
NA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환경역량 제고방안('20.5)	학교환경교육 강화, 사회환경교육 확대,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 강화, 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AT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19.11)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단계적 확대, 플라스틱 포장재 등 줄이기, 생산업체 이행 지원 등 이행 기반 강화
AO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1.1)	생활화학제품 관리 고도화, 사전예방적 살생물제 관리제도 정착 추진, 제품 안전관리 이행체계 마련 등
NAO	미세먼지 관리 대책 및 부처 협조사항('15.12)	국내 배출원 관리, 대기분야 한·중 협력 강화, 예·경보 고도화 및 국민홍보 강화 등
ATO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운영 기본계획('21.6)	전국 권역별 공공처리대상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추진하여 폐기물로부터 국민 보호, 신재생에너지 생산, 탄소중립 이행, 지역 상생 모델 실현 등

건강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3개 조합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아래의 <표 45>와 같이 권위형(A)에 정보형(N) 또는 재정형(T) 또는 조직형(O)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건강 영역에서는 3개 이상의 정책수단 조합의 비율(62.5%)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조합된 정책수단이 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5> 건강 영역 정책조합 사례

정책 조합	안전명	세부내용
NAT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안)('18.6)	올바른 미디어 이용습관을 위한 예방교육 강화, 상담·치유서비스 제공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과의존 예방 법·제도 및 홍보 강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체계 강화 추진

정책 조합	안전명	세부내용
AT	환경보건 종합계획('11~'20) 수정안('15.12)	2020년까지 환경보건 선도국가 진입을 위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내 실화, 국민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 환경보건기반 개선 등
NAO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21.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 증가로 마음 치유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어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안전망 체계 구축, 일상 속 학생 마음건 강 증진 프로그램 확대, 고위험군 학생 '선별-선별 후 관리' 체계 마련 등 방안 마련
A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1.6)	「건강검진기본법(제11조)」에 의거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 향을 제시하는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함에 따라 제3차('21~'25) 종합계획 마련

행정서비스 개선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2개 조합과 3개 조합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아래의 <표 46>과 같이 권위형(A)에 정보형(N) 또는 재정형(T) 또는 조직형(O)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46> 행정서비스 개선 영역 정책조합 사례

정책 조합	안전명	세부내용
NA	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21.7)	소득·교육·주거 등 격차와 사회이동성 등을 보여주고 각종 데이터 간 연 계·결합 분석을 활성화하는 사회통계지표 개발 추진
ATO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20.12)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 스 분야 진출 지원 및 연계 확대, 생태계조성 및 정책기반 구축 등
A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20.11)	복지대상자 유형군 설정(4유형) 및 유형군에 따라 표준화된 조사방식·기 준 마련함으로써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및 건보료 기준 대체 방식 보완하 는 방안
AT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추진계획('21.8)	노후화된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면 개편하여, 복지멤버십 도입, 다 양한 사회서비스 분야별 플랫폼 지원, 온라인 신청 대상 확대하는 등 복 지로 개편 등 포함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추진
NAO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혁신 추진방향('20.8)	인구구조 변화, 코로나19 확산 등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변화, 사회서비 스 정책의 한계 등으로 혁신 추진 필요(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및 위기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여가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단일 조합과 2개 조합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
났다. 아래의 <표 47>과 같이 권위형(A)이 단독으로 활용되거나, 정보형(N) 또는 권위형

(A)에 재정형(T)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47> 여가 영역 정책조합 사례

정책 조합	안전명	세부내용
A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1.5)	문화의 다양성 보호와 확대, 소수자의 문화참여와 접근성 보장 등 다양 성과 포용성의 문화생태계 조성
NT	독서문화 확산 범부처 협력방안('16.8)	지역 독서공동체 조성, 맞춤형 독서교육 및 프로그램 보급 등을 통해 지 역과 계층, 장애와 관계없이 손쉽게 독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AT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21.5)	생활밀착형 미디어·디지털 교육 확대 등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자원봉 사·사회공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

공정사회 구현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단일 조합, 3개 조합, 4개 조합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아래의 <표 48>과 같이 권위형(A)이 단독으로 활용되거나, 권위형
(A)에 정보형(N) 또는 재정형(T) 또는 조직형(O)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정사회 구현 영역에서는 3개 이상의 정책수단 조합의 비율(60.0%)이 높게 나타났
다는 점에서 조합된 정책수단이 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8> 공정사회 구현 영역 정책조합 사례

정책 조합	안전명	세부내용
A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20.9)	부정청탁 대상직무 확대, 신고활성화 기반 공고화, 위반사실 미통보 시 권익위 등에 통보 권한 부여 등
AT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방안('20.5)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논의, 특정강력범죄법상 소년 에 대한 처벌 특례 규정 강화,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소년법상 임시조치 활성화 관련 비공개 토의 진행
NAT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20.10)	취약분야에 대한 진단·조사로 개선과제 선제적 발굴, 불공정행위 사전 예 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 국민 삶 속 불공정 해소 등
NAO	청탁금지법 시행 추진상황 및 관계부처 협조사항('16.11)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구성·운영, 대국민 홍보 실시, 분 야별 맞춤형 교육 추진 등
NATO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 신뢰성 제고방안('21.7)	행정기관 공모전 통합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공모전 통합관리 플랫폼 구 축, 심사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등

주거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3개 조합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아래의 <표 49>와 같이 권위형(A) 또는 정보형(N) 또는 재정형(T)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49> 주거 영역 정책조합 사례

정책 조합	안전명	세부내용
NAT	고령사회를 대비한 주거지원방안('15.9)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주택 내 고령자 안전사고 방지 및 편의성 제고,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정보 지원 등 고령자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생활 도모

2.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과 신공공성

1)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의 신공공성 우선순위

교육부(2022) 「사회관계 장관회의 운영성과 보고서」의 128개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통하여 분야별 신공공성 핵심가치의 우선순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의 <표 50>과 같다. 각 세부안건에 대한 신공공성 핵심가치의 우선순위를 상·중·하로 구분한 뒤 3점 척도로 환산하였다. 인본적 보장성, 민첩성, 포용적 공감성, 적극적 중립성, 종합적 다양성은 세부안건 내용에 따라 그 중요도를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성격이 비슷한 건강과 관련된 안건 중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지원에 관한 안건은 인본적 보장성, 민첩성이 다른 신공공성 가치보다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은 적극적 중립성과 종합적 다양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유된 책임성은 한 안건에 참여한 부처의 수를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구분하였다. 128개의 안건에 대해 평균적으로 6.43개의 부처가 관여하고 있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8개 이상의 부처가 관여하면 상, 4~7의 부처가 관여하면 중, 3개 이하의 부처가 관여되어 있으면 하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종합된 점수는 분야별 비교를 위해 안건 수에 대한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표 50> 사회관계장관회의 분야별 신공공성 핵심가치 중요도

구분	인본적 보장성	공유된 책임성	민첩성	포용적 공감성	적극적 중립성	종합적 다양성	안건 수
포용 분야	1.50	1.80	1.20	1.33	1.00	1.40	30
안전 분야	1.93	1.93	1.91	1.46	1.00	1.09	46
혁신 분야	1.29	2.10	1.00	1.00	1.00	1.19	31
통합 분야	1.95	2.05	1.19	1.67	1.38	1.95	21

위와 같은 기준으로 포용 분야의 신공공성 핵심가치의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공유된 책임성, 인본적 보장성, 종합적 다양성, 포용적 공감성, 민첩성, 적극적 중립성의 순서로

중요도가 확인되었다. 포용 분야의 경우 아동 돌봄, 노인 돌봄, 가족 지원 등의 안전 주를 이루고 있어 민첩성이나 적극적 중립성보다 인본적 보장성과 종합적 다양성의 가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 분야의 경우 인본적 보장성, 공유된 책임성, 민첩성, 포용적 공감성, 종합적 다양성, 적극적 중립성의 순서로 중요도가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등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안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혁신 분야는 공유된 책임성, 인본적 보장성, 종합적 다양성, 민첩성, 포용적 공감성, 적극적 중립성의 순서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혁신 분야의 세부안전을 살펴보면 평생교육, 직업·진로 교육 등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노령인구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인본적 보장성이 다른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통합 분야는 공유된 책임성, 종합적 다양성, 인본적 보장성, 포용적 공감성, 적극적 중립성, 민첩성의 순서로 중요도가 확인되었다. 통합 분야의 세부안전은 다문화 지원, 장애인 지원, 고령사회 지원 등 사회 소수자 지원에 관한 안전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종합적 다양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야에서 공유된 책임성이 가장 높은 가치로 나타난 것은 한국 정부가 이미 다부처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지만, 정책 대상, 추진 체계 등의 중복이나 유사사업으로 인한 비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128개 안전에 대한 보장영역별 신공공성 핵심가치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표 51>과 같다. 교육 영역에서는 공유된 책임성, 인본적 보장성, 종합적 다양성, 민첩성·포용적 공감성·적극적 중립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 영역의 경우 교육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대상자들의 자율적·자발적인 참여가 수반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이는 관계된 행위자 및 조직들이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환경에서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리부처, 일선 교육기관, 학생, 학부모 등 관련된 조직 및 개인 간에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유된 책임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 영역에서는 민첩성, 공유된 책임성, 인본적 보장성, 포용적 공감성, 종합적 다양성, 적극적 중립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안전 영역의 경우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현장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민첩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1>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신공공성 핵심가치 중요도

구분	인본적 보장성	공유된 책임성	민첩성	포용적 공감성	적극적 중립성	종합적 다양성	안전
교육	1.26	1.97	1.00	1.00	1.00	1.16	31
안전	1.69	2.03	2.45	1.48	1.00	1.07	29
고용, 임금	1.50	2.75	1.00	1.50	1.00	1.75	4
돌봄	1.57	1.64	1.43	1.50	1.00	1.00	14
가족, 공동체	1.93	1.86	1.00	2.14	1.00	2.86	14
환경	3.00	1.44	1.00	1.00	1.00	1.00	9
건강	1.75	2.13	1.00	1.63	1.00	1.25	8
행정서비스 개선	1.71	2.29	1.00	1.00	1.00	1.00	7
여가	1.67	2.00	1.00	1.17	1.00	1.33	6
공정사회 구현	1.20	2.20	1.80	1.00	2.60	1.00	5
주거	3.00	2.00	1.00	1.00	1.00	3.00	1
계	-	-	-	-	-	-	128

*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안전에 해당하지 않은 소득불평등 영역은 포용적 공감성, 시민참여 영역은 공유된 책임성, 삶의 만족 영역은 공유된 책임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판단함.

고용·임금 영역에서는 공유된 책임성, 종합적 다양성, 인본적 보장성·포용적 공감성, 민첩성·적극적 중립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임금 영역의 경우 양극화, 노사 갈등 등 사회 갈등 및 대립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보다 용이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 및 구성원들로 하여금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여 서로 발전하고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공유된 책임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돌봄 영역에서는 공유된 책임성, 인본적 보장성, 포용적 공감성, 민첩성, 적극적 중립성·종합적 다양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돌봄 영역의 경우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중요할 것이며, 이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논의를 통하여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된 책임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인본적 보장성도 강조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공동체 영역에서는 종합적 다양성, 포용적 공감성, 인본적 보장성, 공유된 책임성, 민첩성·적극적 중립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공동체 영역의 경우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사회적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이에 대한 상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적 다양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영역에서는 인본적 보장성, 공유된 책임성, 민첩성·포용적 공감성·적극적 중립성·종합적 다양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 영역의 경우 공유제의 성격을 내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 훼손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보편적인 관점에서 관련 제도 및 서비스의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인본적 보장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 영역에서는 공유된 책임성, 인본적 보장성, 포용적 공감성, 종합적 다양성, 민첩성·적극적 중립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 영역의 경우 돌봄 영역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수요 및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유된 책임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서비스 개선 영역에서는 공유된 책임성, 인본적 보장성, 민첩성·포용적 공감성·적극적 중립성·종합적 다양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행정서비스 개선 영역의 경우 제도 및 사회시스템의 혁신과 관련되어 있으며, 혁신성과를 공유하여 시스템의 개선 및 확산을 유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유된 책임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가 영역에서는 공유된 책임성, 인본적 보장성, 종합적 다양성, 포용적 공감성, 민첩성·적극적 중립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가는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수요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문화를 정착 및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자발적인 참여 및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유된 책임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사회 구현 영역에서는 적극적 중립성, 공유된 책임성, 민첩성, 인본적 보장성, 포용적 공감성·종합적 다양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사회 구현 영역의 경우 공정

성에 입각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중립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 영역에서는 인본적 보장성·종합적 다양성, 공유된 책임성, 민첩성·포용적 공감성·적극적 중립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거 영역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기반으로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일정수준의 양과 질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인본적 보장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 다양성 보장성도 강조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에 해당되지 않는 보장영역에 대한 신공공성의 핵심가치 우선순위 또한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득불평등 영역은 포용적 공감성, 시민참여 영역은 공유된 책임성, 삶의 만족 영역은 공유된 책임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불평등 영역의 경우 사회서비스의 생산과 자원배분 과정이 끝난 이후의 단계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불평등과 경쟁에서 낙오된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포용적 공감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참여 영역의 경우 시민사회의 주체로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와 관련 논의 및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유된 책임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만족 영역의 경우 주관적 웰빙과 같은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가 영역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수요의 파악, 관련된 문화의 정착 및 확산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하여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유된 책임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의 신공공성과 정책수단 및 조합

앞서 사회정책 도출한 보장영역은 신공공성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각 보장

영역에 대한 정책수단 및 조합 현황을 분석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공공성 가치에 대한 정책수단 및 조합을 분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이에 신공공성 가치별로 중요도가 높게(‘상’) 나타나는 안건들을 대상으로 정책수단 및 조합 현황을 분석하였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에서 도출된 신공공성 가치와 정책수단 현황은 다음의 <표 52>와 같다. 121개의 안건 및 381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빈도를 살펴보면 권위형(43.6%), 재정형(22.8%), 조직형(17.6%), 정보형(16.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26.2%), 재정형의 현물지원(14.7%), 정보형의 정보활용(10.5%)·권위형의 점검 및 평가(10.5%), 조직형의 협업(9.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2>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의 신공공성과 정책수단 현황

구분	정보(N)				권위(A)				재정(T)				조직(O)				계
	정보 수집	정보 제공	정보 활용	소계	권한·자격	규제·관리	점검·평가	소계	현금 지원	현물 지원	징수	소계	기존 조직	조직 변화	협업	소계	
인본적 보장성 (안건: 28)	1 (1.1)	3 (3.2)	4 (4.3)	8 (8.6)	23 (24.7)	7 (7.5)	11 (11.8)	41 (44.1)	7 (7.5)	13 (14.0)	2 (2.2)	22 (23.7)	4 (4.3)	5 (5.4)	13 (14.0)	22 (23.7)	93 (100)
공유된 책임성 (안건: 33)	7 (7.1)	1 (1.0)	11 (11.1)	19 (19.2)	27 (27.3)	7 (7.1)	12 (12.1)	46 (46.5)	4 (4.0)	14 (14.1)	2 (2.0)	20 (20.2)	6 (6.1)	2 (2.0)	6 (6.1)	14 (14.1)	99 (100)
민첩성 (안건: 24)	2 (2.7)	4 (5.3)	9 (12.0)	15 (20.0)	17 (22.7)	4 (5.3)	9 (12.0)	30 (40.0)	3 (4.0)	11 (14.7)	1 (1.3)	15 (20.0)	4 (5.3)	2 (2.7)	9 (12.0)	15 (20.0)	75 (100)
포용적 공감성 (안건: 14)	0 (0)	0 (0)	4 (9.1)	4 (9.1)	13 (29.5)	4 (9.1)	4 (9.1)	21 (47.7)	3 (6.8)	7 (15.9)	2 (4.5)	12 (27.3)	2 (4.5)	1 (2.3)	4 (9.1)	7 (15.9)	44 (100)
적극적 중립성 (안건: 4)	0 (0)	0 (0)	3 (30.0)	3 (30.0)	3 (30.0)	0 (0)	0 (0)	3 (30.0)	0 (0)	3 (30.0)	0 (0)	3 (30.0)	1 (10.0)	0 (0)	0 (0)	1 (10.0)	10 (100)
종합적 다양성 (안건: 18)	1 (1.7)	2 (3.3)	9 (15.0)	12 (20.0)	17 (28.3)	4 (6.7)	4 (6.7)	25 (41.7)	5 (8.3)	8 (13.3)	2 (3.3)	15 (25.0)	1 (1.7)	2 (3.3)	5 (8.3)	8 (13.3)	60 (100)
계 (안건: 121)	11 (2.9)	10 (2.6)	40 (10.5)	61 (16.0)	100 (26.2)	26 (6.8)	40 (10.5)	166 (43.6)	22 (5.8)	56 (14.7)	9 (2.4)	87 (22.8)	18 (4.7)	12 (3.1)	37 (9.7)	67 (17.6)	381 (100)

*참조: 각 신공공성 가치의 ‘상’에 해당하는 안건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각 신공공성 가치별 정책수단 현황을 살펴보면, 인본적 보장성의 28개 안건 및 93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빈도는 권위형(44.1%), 재정형(23.7%)·조직형(23.7%), 정보형(8.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24.7%), 재정형의 현물지원(14.0%)·조직형의 협업(14.0%), 권위형의 점검 및 평가(11.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유된 책임성의 33개 안전 및 99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빈도는 권위형(46.5%), 재정형(20.2%), 정보형(19.2%), 조직형(14.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27.3%), 재정형의 현물지원(14.1%), 권위형의 점검 및 평가(12.1%), 정보형의 정보활용(11.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민첩성의 24개 안전 및 75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빈도는 권위형(40.0%), 정보형(20.0%), 재정형(20.0%)·조직형(20.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22.7%), 재정형의 현물지원(14.7%), 정보형의 정보활용(12.0%)·권위형의 점검 및 평가(12.0%)·조직형의 협업(12.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포용적 공감성의 14개 안전 및 44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빈도는 권위형(47.7%), 재정형(27.3%), 조직형(15.9%), 정보형(9.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29.5%), 재정형의 현물지원(15.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적극적 중립성의 4개 안전 및 10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빈도는 정보형(30.0%)·권위형(30.0%)·재정형(30.0%), 조직형(10.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정보형의 정보활용(30.0%)·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30.0%)·재정형의 현물지원(30.0%) 등으로 나타났다.

종합적 다양성의 18개 안전 및 60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빈도는 권위형(41.7%), 재정형(25.0%), 정보형(20.0%), 조직형(13.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28.3%), 정보형의 정보활용(15.0%), 재정형의 현물지원(13.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인본적 보장성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하여 권위형, 재정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유된 책임성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하여 정보형, 권위형이 두드러

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민첩성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하여 정보형, 조직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포용적 공감성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하여 권위형, 재정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 중립성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하여 정보형, 재정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종합적 다양성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하여 정보형, 재정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사회관계장관회의」 안전에서 도출된 신공공성 가치와 정책수단 조합 현황은 다음의 <표 53>과 같다. 총 121개의 안전 및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별 빈도를 살펴보면 3개 조합(40.5%), 2개 조합(39.7%), 단일 조합(15.7%), 4개 조합(4.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단일 정책수단보다는 조합된 정책수단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AT(15.7%)·NAT(15.7%), A(14.9%), ATO(14.0%), AO(13.2%)·NAO(13.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권위형(A) 수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권위형에 재정형(T) 또는 조직형(O) 또는 정보형(N)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3> 사회관계장관회의 안전의 신공공성과 정책수단 조합 현황

구분	1개					2개							3개					4개	계
	N	A	T	O	소계	NA	NT	NO	AT	AO	TO	소계	NAT	NAO	NTO	ATO	소계	NATO	
인본적 보장성	0 (0)	5 (17.9)	0 (0)	1 (3.6)	6 (21.4)	1 (3.6)	0 (0)	0 (0)	4 (14.3)	4 (14.3)	0 (0)	9 (32.1)	2 (7.1)	3 (10.7)	0 (0)	7 (25.0)	12 (42.9)	1 (3.6)	28 (100)
공유된 책임성	0 (0)	5 (15.2)	0 (0)	0 (0)	5 (15.2)	4 (12.1)	1 (3.0)	0 (0)	6 (18.2)	5 (15.2)	1 (3.0)	17 (51.5)	4 (12.1)	3 (9.1)	0 (0)	2 (6.1)	9 (27.3)	2 (6.1)	33 (100)
민첩성	0 (0)	3 (12.5)	0 (0)	0 (0)	3 (12.5)	1 (4.2)	1 (4.2)	0 (0)	3 (12.5)	4 (16.7)	1 (4.2)	10 (41.7)	4 (16.7)	3 (12.5)	0 (0)	2 (8.3)	9 (37.5)	2 (8.3)	24 (100)
포용적 공감성	0 (0)	2 (14.3)	0 (0)	0 (0)	2 (14.3)	0 (0)	0 (0)	0 (0)	3 (21.4)	2 (14.3)	0 (0)	5 (35.7)	3 (21.4)	1 (7.1)	0 (0)	3 (21.4)	7 (50.0)	0 (0)	14 (100)
적극적 중립성	0 (0)	0 (0)	0 (0)	0 (0)	0 (0)	0 (0)	1 (25.0)	0 (0)	1 (25.0)	0 (0)	0 (0)	2 (50.0)	1 (25.0)	1 (25.0)	0 (0)	0 (0)	2 (50.0)	0 (0)	4 (100)
종합적 다양성	0 (0)	3 (16.7)	0 (0)	0 (0)	3 (16.7)	2 (11.1)	0 (0)	0 (0)	2 (11.1)	1 (5.6)	0 (0)	5 (27.8)	5 (27.8)	2 (11.1)	0 (0)	3 (16.7)	10 (55.6)	0 (0)	18 (100)
계	0 (0)	18 (14.9)	0 (0)	1 (0.8)	19 (15.7)	8 (6.6)	3 (2.5)	0 (0)	19 (15.7)	16 (13.2)	2 (1.7)	48 (39.7)	19 (15.7)	13 (10.7)	0 (0)	17 (14.0)	49 (40.5)	5 (4.1)	121 (100)

*참조: 각 신공공성 가치의 '상'에 해당하는 안전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각 신공공성 가치별 정책수단 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인본적 보장성의 28개 안전 및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별 빈도는 3개 조합(42.9%), 2개 조합(32.1%), 단일 조합(21.4%), 4개 조합(3.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 조합의 경우 ATO(25.0%), A(17.9%), AT(14.3%)·AO(14.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유된 책임성의 33개 안전 및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별 빈도는 2개 조합(51.5%), 3개 조합(27.3%), 단일 조합(15.2%), 4개 조합(6.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 조합의 경우 AT(18.2%), A(15.2%)·AO(15.2%), NA(12.1%)·NAT(12.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민첩성의 24개 안전 및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별 빈도는 2개 조합(41.7%), 3개 조합(37.5%), 단일 조합(12.5%), 4개 조합(8.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 조합의 경우 AO(16.7%)·NAT(16.7%), A(12.5%)·AT(12.5%)·NAO(12.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포용적 공감성의 14개 안전 및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별 빈도는 3개 조합(50.0%), 2개 조합(35.7%), 단일 조합(14.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 조합의 경우 AT(21.4%)·NAT(21.4%)·ATO(21.4%), A(14.3%)·AO(14.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적극적 중립성의 4개 안전 및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별 빈도는 2개 조합(50.0%), 3개 조합(50.0%)으로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 조합의 경우 NT(25.0%), AT(25.0%), NAT(25.0%), NAO(25.0%)으로 나타났다.

종합적 다양성의 18개 안전 및 정책수단 조합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별 빈도는 3개 조합(55.6%), 2개 조합(27.8%), 단일 조합(16.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 조합의 경우 NAT(27.8%), A(16.7%)·ATO(16.7%), NA(11.1%)·AT(11.1%)·NAO(11.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인본적 보장성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하여 단일 조합과 3개 조합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권위형(A)이 단독으로 활용되거나, 권위형(A)에 재정형(T) 또는 조직형(O)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공유된 책임성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하여 2개 조합과 4개 조합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권위형(A)에 정보형(N) 또는 재정형(T)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민첩성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하여 2개 조합과 4개 조합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권위형(A)에 정보형(N) 또는 재정형(T) 또는 조직형(O)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포용적 공감성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하여 3개 조합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권위형(A)에 재정형(T) 또는 조직형(O)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 중립성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하여 2개 조합과 3개 조합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정보형(N) 또는 권위형(A) 또는 재정형(T)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종합적 다양성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하여 단일 조합과 3개 조합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권위형(A)이 단독으로 활용되거나, 권위형(A)에 정보형(N) 또는 재정형(T) 또는 조직형(O)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신공공성 가치에 연계된 정책수단 및 조합을 도출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대상은 11개의 보장영역이고, 신공공성 가치는 각 영역별로 ‘상’에 해당하는 개수를 측정하였으며, 정책수단 및 조합 또한 각 영역별로 해당하는 정책수단 및 조합의 개수를 측정하였다. 이는 각 보장영역별 신공공성 중요도(우선순위)와 연계하여 보장영역에 대한 정책수단 조합을 제시하는 기준 및 근거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4> 사회정책 보장영역에 대한 신공공성과 정책수단의 상관분석 결과

구분	보장성	책임성	민첩성	공감성	중립성	다양성	정보형	권위형	재정형	조직형
보장성	1									
책임성	-.186	1								
민첩성	.386	.459	1							
공감성	.173	-.307	-.139	1						
중립성	-.290	.000	-.115	-.172	1					
다양성	.255	-.151	-.076	.880**	-.143	1				
정보형	.283	.715*	.901**	-.113	-.076	-.046	1			
권위형	.302	.785**	.725*	-.007	-.151	.079	.922**	1		
재정형	.162	.816**	.665*	.094	-.228	.207	.868**	.962**	1	
조직형	.256	.778**	.763**	-.045	-.155	.033	.929**	.982**	.961**	1

*p<.05, **p<.01

보장영역에 대한 신공공성과 정책수단의 상관분석 결과는 위의 <표 54>와 같다. 공유된 책임성과 정보형(0.715), 권위형(0.785), 재정형(0.816), 조직형(0.778)이 유의미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첩성과 정보형(0.901), 권위형(0.725), 재정형(0.665), 조직형(0.763)이 유의미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인 정책수단 조합을 도출하고자 보장영역에 대한 신공공성과 정책수단 조합 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5>와 같다. 공유된 책임성과 NA(0.730), NAO(0.740), NTO(0.700), ATO(0.783), NATO(0.679)가 유의미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첩성과 A(0.827), O(0.652), AT(0.620), TO(0.990)가 유의미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종합적 다양성과 O(0.698)가 유의미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공유된 책임성에서는 NA, NAO, NTO, ATO, NATO 조합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민첩성에서는 A, O, AT, TO 조합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종합적 다양성에서는 O 조합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5> 사회정책 보장영역에 대한 신공공성과 정책수단 조합의 상관분석 결과

구분	보장성	책임성	민첩성	공감성	중립성	다양성	A	O	NA	NT	AT	AO	TO	NAT	NAO	NTO	ATO	NATO
보장성	1																	
책임성	-.186	1																
민첩성	.386	.459	1															
공감성	.173	-.307	-.139	1														
중립성	-.290	.000	-.115	-.172	1													
다양성	.255	-.151	-.076	.880**	-.143	1												
A	.395	.403	.827**	.109	-.134	.028	1											
O	.502	.224	.652*	.550	-.149	.698*	.626*	1										
NA	-.035	.730*	.517	-.190	-.209	-.152	.414	.202	1									
NT	-.149	-.239	-.274	.397	.418	.389	-.211	.134	-.361	1								
AT	.490	.561	.620*	.152	-.206	.245	.484	.613*	.686*	-.246	1							
AO	.470	.413	.304	.186	-.303	.336	.254	.451	.631*	-.362	.793**	1						
TO	.394	.500	.990**	-.172	-.100	-.056	.790**	.671*	.480	-.239	.617*	.303	1					
NAT	.018	.573	.405	-.079	-.375	-.073	.311	.164	.887**	-.461	.680*	.534	.353	1				
NAO	.075	.740**	.580	.152	-.320	.154	.642*	.507	.847**	-.108	.699*	.606*	.560	.692*	1			
NTO	-.290	.700*	-.115	-.172	-.100	-.056	-.134	-.149	.709*	-.239	.411	.606*	-.100	.595	.560	1		
ATO	.157	.783**	.467	-.160	.089	-.090	.416	.278	.757**	-.138	.768**	.700*	.480	.506	.754**	.676*	1	
NATO	-.251	.679*	-.178	-.057	-.155	.083	-.029	-.072	.566	-.243	.279	.528	-.155	.500	.527	.911**	.517	1

*p<.10, **p<.05, ***p<.01

3. 사회정책 분야 및 영역별 추진체계 네트워크 분석

사회정책 분야별 세부정책 선정과 정책 내용을 그동안 사회정책 성과자료집이나 관련 사회정책 추진 과제나 회의 과제명 등을 통하여 어떠한 사회정책 영역별 정책이 선정되었고 정책 내용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관계 장관회의 운영 성과 보고서』(교육부, ' 21.11)의 부처별 안전상정 현황을 통한 사회정책 분야별 정책추진 체계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사회정책은 크게 포용, 안전, 혁신, 통합분야로 구분되며, 각각의 분야는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성된다. 포용 분야는 취약계층 돌봄, 사회적 기본권보장, 가족 지원으로 구성되며, 안전분야는 아동·청소년 보호, 폭력 근절, 생활환경 안전으로 구성되며, 혁신 분야는 인재양성, 비대면사회화 선도, 인구급변 대응으로 구성되며, 통합분야는 공정 사회 구현과 소수집단 지원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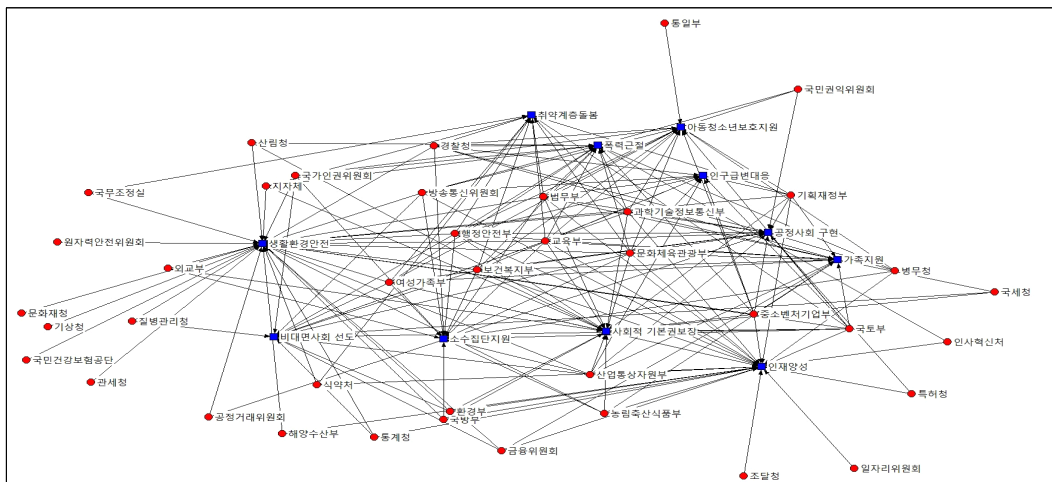
분석을 위하여 한 안전(event)에 공동으로 참여한 정부 부처(node)를 행위자(node)와 사건(event)으로 이루어진 이원 형태(2-mode)의 데이터를 구축 후, 중심성 분석을 위하여 행위자(node)와 행위자(node)로 이루어진 일원 형태(1-mode)의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분석결과 각 중심성 중 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협력 기관의 수를 의미하며,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협력 기관과 연결 거리를 의미하며, 고유벡터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은 주요협력 기관의 연결 수, 그리고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협력 기관 간 중간 매개역할 수준을 의미한다.

1) 사회관계장관회의 분야별 안전상정 연결망

각 사회정책 분야 관련 부처 안전상정 연결망의 중심성(Centrality) 분석결과 정도 중심성은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위 부처가 각 사회정책 분야에서 다른 부처들보다 더 많은 안전을 상정함을 의미한다. 매개 중심성은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5.59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부처와 비교하여 다양한 부처와 공동으로 안전을 상징하는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근접 중심성은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40으로 근접 중심성이 높았으며, 이는 다른 부처와 비교하여 다양한 사회정책 사안에 안전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유벡터 중심성은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높았으며 이는 위 부처들이 각 사회정책 사안에서 중심역할을 하는 다른 부처들과 공동으로 안전을 상징하는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9> 사회정책 관련부처 안전상징 연결망



<표 56> 사회정책 관련부처 안전상징 연결망 중심성(Centrality) 결과

구분	부처	Degree (정도중심성)	Closeness (근접중심성)	Eigenvector (고유벡터중심성)	Betweenness (매개중심성)
1	교육부	8311	40	0.552	5.59
2	고용노동부	5298	40	0.331	5.59
3	보건복지부	5175	40	0.33	5.59
4	여성가족부	4992	40	0.319	5.59
5	중소벤처기업부	4077	40	0.249	5.59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94	40	0.248	5.59
7	행정안전부	3786	40	0.228	5.59

구분	부처	Degree (정도중심성)	Closeness (근접중심성)	Eigenvector (고유벡터중심성)	Betweenness (매개중심성)
8	문화체육관광부	3351	40	0.201	5.59
9	산업통상자원부	3249	41	0.191	3.952
10	기획재정부	3215	40	0.187	5.59
11	법무부	2349	40	0.148	5.59
12	경찰청	2281	42	0.145	3.954
13	환경부	1955	42	0.102	2.993
14	국토부	1736	40	0.096	5.59
15	방송통신위원회	1541	40	0.087	5.59
16	농림축산식품부	1283	42	0.067	2.993
17	병무청	990	48	0.058	2.364
18	식약처	733	43	0.038	2.365
19	지자체	706	44	0.036	1.936
20	조달청	688	56	0.04	0
21	국방부	653	42	0.036	2.993
22	특허청	550	53	0.032	0.673
23	금융위원회	532	42	0.029	2.993
24	국가인권위원회	433	43	0.024	3.353
25	외교부	415	46	0.019	0.688
26	산림청	355	44	0.017	1.936
27	통계청	353	42	0.019	2.993
28	일자리위원회	348	56	0.02	0
29	인사혁신처	337	51	0.02	0.938
30	해양수산부	285	43	0.015	2.365
31	국민권익위원회	232	58	0.014	0.536
32	질병관리청	178	47	0.009	0.375
33	국무조정실	171	48	0.009	0
34	공정거래위원회	141	45	0.006	1.526
35	국세청	129	56	0.007	0
36	관세청	110	48	0.005	0
37	국민건강보험공단	110	48	0.005	0
38	기상청	110	48	0.005	0
39	문화재청	110	48	0.005	0
40	원자력안전위원회	110	48	0.005	0
41	통일부	90	64	0.006	0

포용 분야의 안전은 취약계층 돌봄, 사회적기본권 보장, 가족 지원으로 구성되며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취약계층 돌봄의 세부안전은 아이 돌봄 확대, 노인 돌봄 확대, 통합 돌봄 정착으로 구성된다. 사회적기본권 보장의 세부안전은 공공부조확대, 사회서비스 강화, 문화복지 확대로 구성되며, 가족 지원의 세부안전은 한부모가족 포용, 일가정양립, 여성고용 확대로 구성된다. 각 세부과제에 대한 부처별 안전상정 연결망 중심성 분석결과, 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 모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는 위 부처가 포용 분야 사회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포용 분야의 세부과제가 여성, 아이, 노인, 일자리, 복지 등의 내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부처 외로 국토부의 매개 중심성이 높았던 이유는 아이 돌봄을 위한 시설 확충 및 노인 복지센터와 주거 환경 개선이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illegible]

<표 57> 포용 분야 사회정책 관련부처 안전상정 연결망 중심성(Centrality)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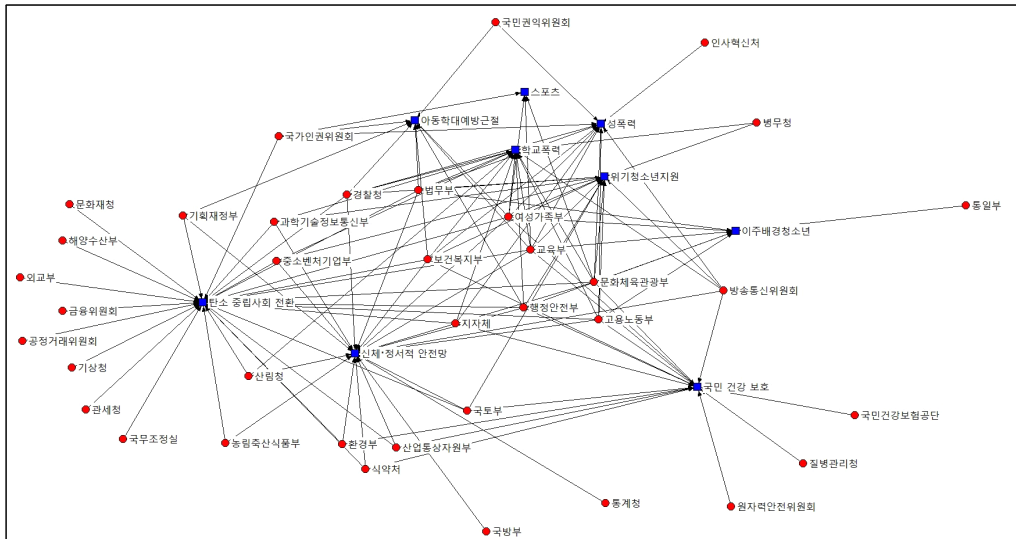
구분	부처	Degree (정도중심성)	Closeness (근접중심성)	Eigenvector (고유벡터중심성)	Betweenness (매개중심성)
1	보건복지부	433	22	0.544	7.445
2	여성가족부	427	22	0.484	7.445
3	교육부	411	22	0.495	7.445
4	행정안전부	280	22	0.317	7.445
5	고용노동부	176	24	0.158	4.394
6	기획재정부	156	28	0.176	2.073
7	국토부	151	22	0.14	7.445
8	문화체육관광부	137	24	0.124	4.251
9	법무부	119	23	0.094	6.181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1	24	0.081	4.251
11	중소벤처기업부	81	27	0.056	0.915
12	국방부	75	29	0.046	0
13	농림축산식품부	73	27	0.058	0.915
14	경찰청	66	30	0.059	1.46
15	산업통상자원부	60	28	0.038	0.333
16	지자체	52	33	0.058	0
17	산림청	27	29	0.015	0
18	외교부	27	29	0.015	0
19	환경부	27	29	0.015	0
20	국세청	26	34	0.023	0
21	금융위원회	19	34	0.017	0
22	국무조정실	16	34	0.013	0
23	식약처	16	34	0.013	0

(2) 사회관계장관회의 안전 분야 안전상정 연결망

안전 분야의 안전은 아동·청소년 보호, 폭력 근절, 생활환경 안전으로 구성되며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보호의 세부안전은 아동학대 예방·근절, 위기 청소년 지원, 이주 배경 청소년 보호로 구성되며, 폭력 근절의 세부안전은 학교폭력근절, 성폭력근절, 스포츠폭력 근절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 안전의 세부안전은 탄소중립사회 전환, 국민 건강 보호, 신체·정서 안전망 구축으로 구성된다. 각 세부과제에

대한 부처별 안전상정 연결망 중심성 분석결과, 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에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이 높게 나타났다. 위 부처 외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교 및 프로스포츠, 국가대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스포츠계의 폭력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지자체의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안전 분야에서 중앙부처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11> 안전 분야 사회정책 관련부처 안전상정 연결망



<표 58> 안전 분야 사회정책 관련부처 안전상정 연결망 중심성(Centrality)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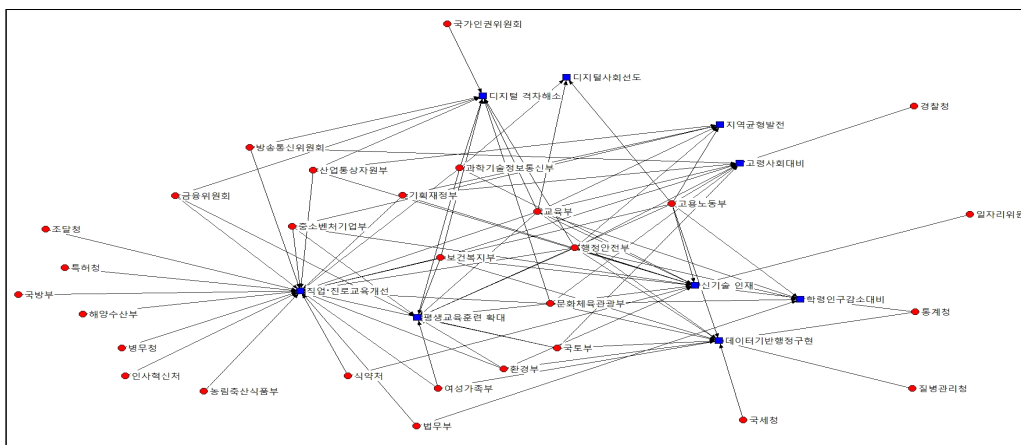
구분	부처	Degree (정도중심성)	Closeness (근접중심성)	Eigenvector (고유벡터중심성)	Betweenness (매개중심성)
1	교육부	1149	36	0.493	17.706
2	여성가족부	1008	36	0.437	17.706
3	보건복지부	951	37	0.376	12.572
4	경찰청	850	40	0.37	6.708
5	법무부	711	39	0.303	11.241
6	행정안전부	652	37	0.227	14.845
7	문화체육관광부	578	36	0.213	17.706

구분	부처	Degree (정도중심성)	Closeness (근접중심성)	Eigenvector (고유벡터중심성)	Betweenness (매개중심성)
8	고용노동부	463	36	0.178	17.706
9	환경부	417	40	0.087	6.312
10	기획재정부	373	42	0.097	3.178
11	방송통신위원회	360	45	0.14	6.797
12	중소벤처기업부	322	42	0.08	2.782
13	지자체	246	39	0.061	10.259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2	42	0.074	2.782
15	농림축산식품부	221	43	0.047	1.584
16	국토부	208	39	0.061	7.843
17	산업통상자원부	208	40	0.042	6.312
18	외교부	153	46	0.026	0
19	국가인권위원회	128	43	0.041	3.686
20	산림청	126	42	0.034	2.782
21	식약처	108	40	0.025	6.312
22	병무청	87	58	0.035	0
23	국민권익위원회	68	59	0.029	0.182
24	인사혁신처	68	61	0.03	0
25	공정거래위원회	53	46	0.009	0
26	관세청	53	46	0.009	0
27	국무조정실	53	46	0.009	0
28	금융위원회	53	46	0.009	0
29	기상청	53	46	0.009	0
30	문화재청	53	46	0.009	0
31	해양수산부	53	46	0.009	0
32	국방부	35	53	0.011	0
33	통계청	35	53	0.011	0
34	국민건강보험공단	20	58	0.006	0
35	원자력안전위원회	20	58	0.006	0
36	질병관리청	20	58	0.006	0
37	통일부	6	66	0.002	0

(3) 사회관계장관회의 혁신 분야 안전상정 연결망

혁신 분야의 안전은 인재양성, 비대면 사회 선도, 인구급변 대응으로 구성되며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인재양성의 세부안전은 신기술 인재양성, 평생교육 훈련 확대, 직업·진로교육 개선으로 구성되며, 비대면 사회 선도의 세부안전은 디지털 사회 선도,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 디지털 격차 해소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인구급변 대응의 세부안전은 고령사회 대비, 학령인구 감소 대비, 지역균형 발전으로 구성된다. 각 세부과제에 대한 부처별 안전상정 연결망 중심성 분석결과, 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SW교육, AI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세부안전에 참여하며 혁신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도 중심성은 세 번째로 높지만 매개 중심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 분야의 다양한 안전에 참여하기보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 및 인재양성 분야에 집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의 경우 낮은 정도 중심성과 비교하면 매개 중심성이 매우 높게 나왔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 및 디지털 사회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들은 다양한 부처와 연계하여 행정적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2> 혁신 분야 사회정책 관련부처 안전상정 연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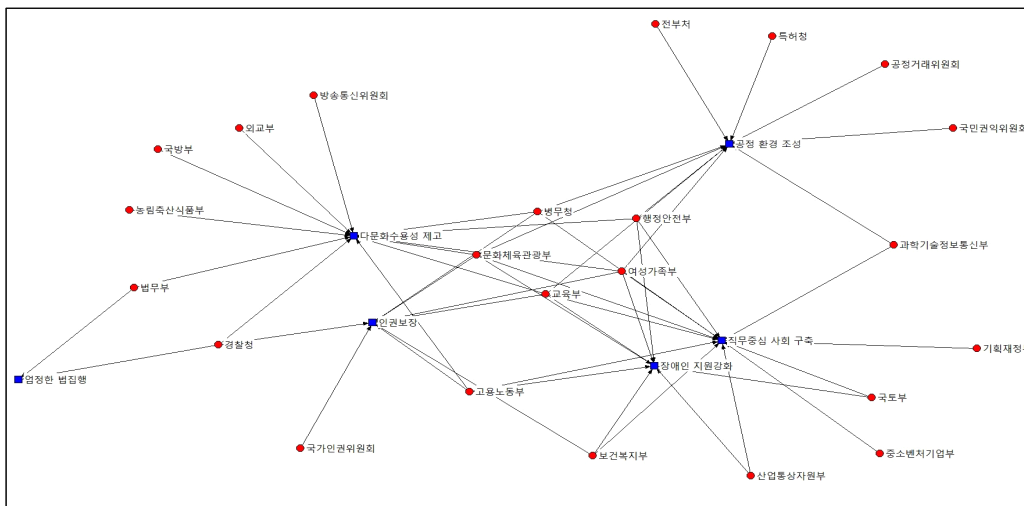
<표 59> 혁신 분야 사회정책 관련부처 안전상정 연결망 중심성(Centrality) 결과

구분	부처	Degree (정도중심성)	Closeness (근접중심성)	Eigenvector (고유벡터중심성)	Betweenness (매개중심성)
1	교육부	1730	28	0.501	11.168
2	고용노동부	1535	29	0.422	8.26
3	중소벤처기업부	1435	32	0.402	1.845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7	31	0.354	4.053
5	산업통상자원부	1052	31	0.302	4.053
6	기획재정부	972	31	0.249	4.03
7	여성가족부	621	31	0.148	4.38
8	행정안전부	539	28	0.129	11.168
9	문화체육관광부	524	28	0.125	11.168
10	보건복지부	518	28	0.146	11.168
11	병무청	392	34	0.093	0
12	조달청	392	34	0.093	0
13	환경부	386	30	0.093	5.742
14	방송통신위원회	333	32	0.077	3.95
15	농림축산식품부	297	34	0.07	0
16	특허청	297	34	0.07	0
17	국토부	271	30	0.059	6.732
18	법무부	205	34	0.048	0
19	국방부	200	34	0.047	0
20	식약처	160	32	0.041	1.845
21	금융위원회	126	33	0.029	1.875
22	일자리위원회	116	44	0.035	0
23	인사혁신처	101	34	0.023	0
24	해양수산부	101	34	0.023	0
25	통계청	91	40	0.023	1.563
26	질병관리청	32	46	0.005	0
27	경찰청	26	48	0.004	0
28	국세청	17	46	0.003	0
29	국가인권위원회	12	48	0.002	0

(4) 사회관계장관회의 통합 분야 안전상정 연결망

사회통합 분야의 안전은 공정 사회 구현과 소수집단 지원으로 구성되며,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공정 사회 구현의 세부안전은 미디어 문해력 제고, 직무중심 사회 구축, 엄정한 법집행으로 구성되며, 소수집단 지원의 세부안전은 다문화 수용성 제고, 장애인 지원 강화, 인권 보장으로 구성된다. 각 세부과제에 대한 부처별 안전상정 연결망 중심성 분석결과, 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에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채용 공정성,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등 직장문화 개선 및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사회 전반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위해 교육부가 중심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중심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심성이 낮은 것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부처의 존재를 고려할 때, 더욱 활발한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사회통합 분야 사회정책 관련부처 안전상정 연결망



<표 60> 사회통합 분야 사회정책 관련부처 안전상정 연결망 중심성(Centrality) 결과

구분	부처	Degree (정도중심성)	Closeness (근접중심성)	Eigenvector (고유벡터중심성)	Betweenness (매개중심성)
1	교육부	111	22	0.504	17.205
2	여성가족부	85	22	0.354	17.205
3	고용노동부	82	26	0.368	7.405
4	행정안전부	76	23	0.312	14.395
5	문화체육관광부	74	22	0.286	17.205
6	보건복지부	64	31	0.34	1.69
7	병무청	52	22	0.192	17.205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6	29	0.184	4
9	산업통상자원부	46	33	0.21	0
10	기획재정부	34	33	0.15	0
11	국토부	30	33	0.135	0
12	경찰청	23	31	0.085	1.69
13	국민권익위원회	22	35	0.068	0
14	중소벤처기업부	18	33	0.075	0
15	법무부	14	33	0.043	0
16	국방부	13	33	0.041	0
17	농림축산식품부	13	33	0.041	0
18	방송통신위원회	13	33	0.041	0
19	외교부	13	33	0.041	0
20	공정거래위원회	12	35	0.034	0
21	특허청	12	35	0.034	0
22	국가인권위원회	9	37	0.042	0

(5) 종합

연결망 분석의 중심성 중 정도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은 연결망의 밀도와 크기에 따라 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고유벡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통하여 각 사회정책 분야별 중심성이 높은 부처를 살펴보면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분야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정책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인

재양성, 교육 훈련, 진로교육,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등 교육이 중요 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포용 분야, 안전 분야, 통합분야의 경우 대부분 세부과제에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안전 인식을 함양하고, 소수자와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등, 각 사회정책 분야에서 교육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1> 종합요약: 사회정책 분야별 고유벡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상위 부처

구분	전체 분야	포용분야	안전분야	혁신분야	통합분야
1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2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보건복지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4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5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7	행정안전부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병무청
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10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2)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추진체계 연결망

앞 절에서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안전을 중심으로 포용, 통합, 안전, 혁신 분야의 관련 부처와 추진체계를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제2장에서 정의한 교육, 안전, 고용·임금, 돌봄, 가족·공동체, 환경, 건강, 행정서비스 개선, 여가, 공정사회 구현과 같은 사회정책 보장영역을 기준으로 관련 부처와 추진체계를 확인하였다¹³⁾.

앞 절에서는 안전에 대한 관련 부처의 추진체계이기 때문에, 안전-참여부처 2 mode 형태의 자료를 구성하고 1 mode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본 분석에서는 영역별 참여부처-참여부처 1 mode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안전-참여부처 데이터의 경우 안전에 참여한 부처들 간의 연결망이기 때문에 부처 간의 방향성이 없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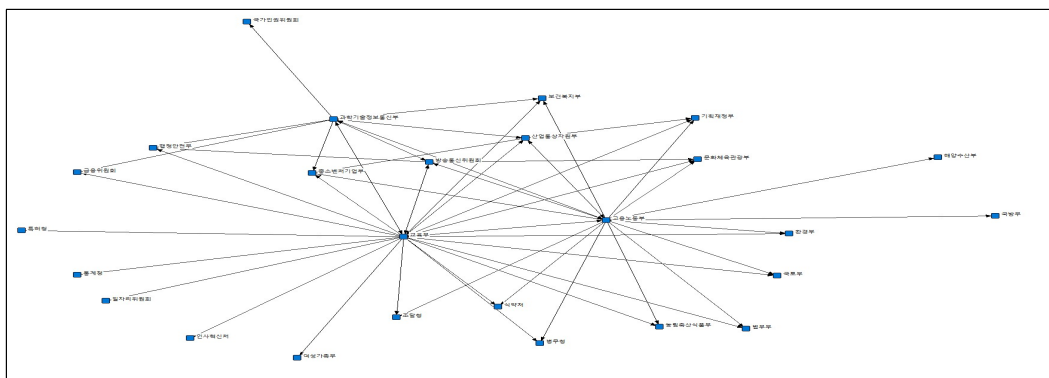
13) 주거 영역과 관련된 안전은 1건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참여부처-참여부처 데이터의 경우 주관부처와 참여부처를 구분하여 방향성이 있는 데이터를 구성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앞 절과 다른 In과 Out이 중심성 분석 결과표에 제시되는데, 일반적으로 In은 그 노드로 오는 방향의 연결 값이고, Out은 그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나가는 방향의 연결 값을 의미한다.¹⁴⁾ 정도 중심성의 경우 영역별 주관부처를 확인하기 위해 내향정도중심성과 내향근접 중심성¹⁵⁾을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였고, 필요에 따라 고유벡터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해석에 활용하였다.

(1) 교육

교육 영역의 추진체계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 14>와 같으며 각 부처의 중심성은 다음 <표 62>와 같다. 우선 내향정도중심성은 교육부 118, 고용노동부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내향근접중심성은 교육부 28, 고용노동부 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의 순서로 나타났다. 교육영역의 경우 포용, 안전, 통합, 혁신 분야에서 추진된 교육프로그램 제공, 교육 훈련 등이 교육의 영역으로 모두 포함되어 교육영역 추진체계 연결망에서 가장 높은 중심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교육과 관련된 부처는 총 26개로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있었다.

<그림 14> 교육 영역 관련 부처 연결망



14) 본 분석에서 사용된 중심성은 내향정도중심성, 외향정도중심성, 내향근접중심성, 외향근접중심성, 내향고유벡터중심성, 외향고유벡터중심성이 있으며, 매개중심성은 방향성이 없다.

15) 내향근접중심성은 다른 노드와의 최단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낮을수록 중심성이 높다.

<표 62> 교육 영역 관련 부처 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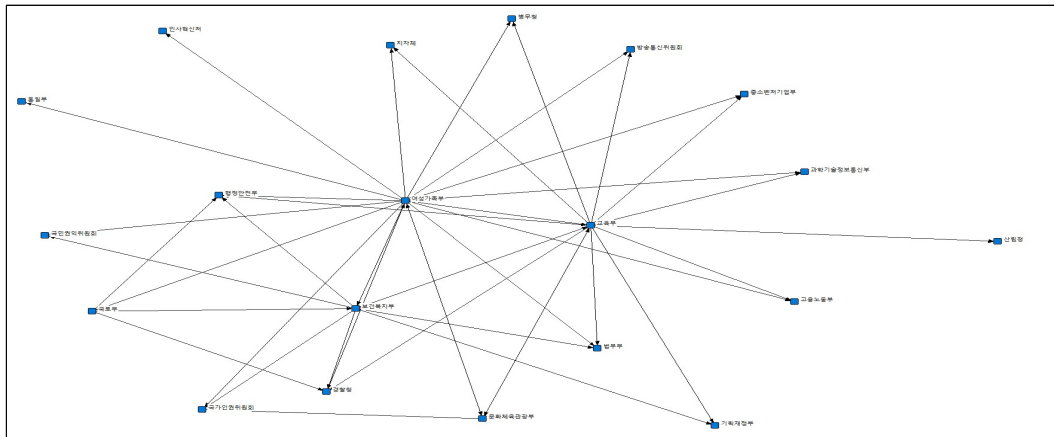
구분	부처	Degree (정도중심성)		Closeness (근접중심성)		Eigenvector (고유벡터중심성)		Betweenness (매개중심성)
		IN	OUT	IN	OUT	IN	OUT	
1	교육부	118	7	28	88	-0.926	0.239	42.167
2	고용노동부	22	20	33	89	-0.277	0.426	16.833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21	41	88	-0.205	0.434	10
4	산업통상자원부	5	15	45	89	-0.118	0.363	0.333
5	방송통신위원회	4	4	48	89	-0.095	0.112	0.667
6	국가인권위원회	0	1	100	89	0	0.036	0
7	국방부	0	1	100	90	0	0.036	0
8	국토부	0	3	100	88	0	0.075	0
9	금융위원회	0	2	100	88	0	0.056	0
10	기획재정부	0	11	100	87	0	0.261	0
11	농림축산식품부	0	2	100	88	0	0.055	0
12	문화체육관광부	0	8	100	87	0	0.165	0
13	법무부	0	3	100	88	0	0.075	0
14	병무청	0	4	100	88	0	0.095	0
15	보건복지부	0	9	100	87	0	0.228	0
16	식약처	0	2	100	88	0	0.055	0
17	여성가족부	0	7	100	89	0	0.14	0
18	인사혁신처	0	1	100	89	0	0.02	0
19	일자리위원회	0	2	100	89	0	0.04	0
20	조달청	0	3	100	88	0	0.091	0
21	중소벤처기업부	0	19	100	86	0	0.421	0
22	통계청	0	1	100	89	0	0.02	0
23	특허청	0	1	100	89	0	0.02	0
24	해양수산부	0	1	100	90	0	0.036	0
25	행정안전부	0	8	100	87	0	0.165	0
26	환경부	0	5	100	88	0	0.115	0

(2) 안전

안전 영역의 추진체계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 15>와 같으며 각 부처의 중심성은 다음 <표 63>과 같다. 우선 내향정도중심성은 여성가족부 67, 교육부 56, 보건복지

부 18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내향근접중심성은 여성가족부 21, 교육부 24, 보건복지부 30으로 높게 나타났다. 안전영역의 안전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노인 학대 예방·근절, 위기 청소년 지원, 성폭력 관련 안전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안전과 관련된 부처는 모두 20개로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 경찰청 등이 있었다.

<그림 15> 안전 영역 관련 부처 연결망



<표 63> 안전 영역 관련 부처 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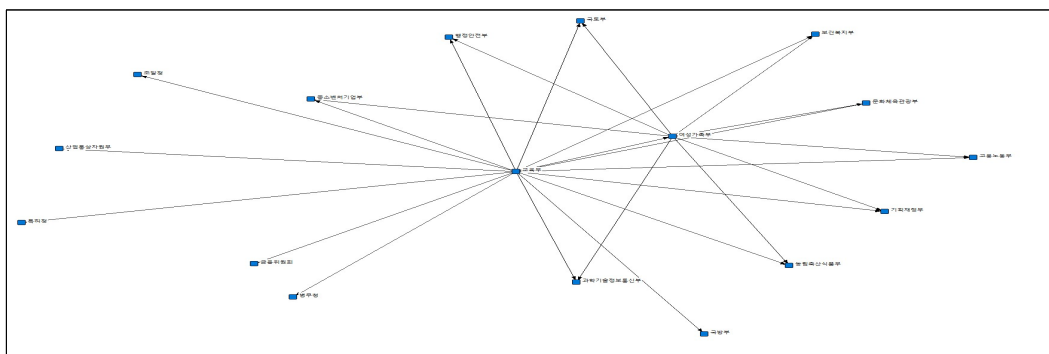
구분	부처	Degree (정도중심성)		Closeness (근접중심성)		Eigenvector (고유벡터중심성)		Betweenness (매개중심성)
		IN	OUT	IN	OUT	IN	OUT	
1	여성가족부	67	14	21	65	-0.685	0.332	24.833
2	교육부	56	17	24	65	-0.664	0.368	17.5
3	보건복지부	18	15	30	65	-0.268	0.326	17.333
4	문화체육관광부	4	12	35	67	-0.134	0.28	0.333
5	국토부	3	1	45	67	-0.019	0.024	0
6	경찰청	0	22	76	62	0	0.489	0
7	고용노동부	0	9	76	65	0	0.202	0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3	76	65	0	0.069	0
9	국가인권위원회	0	3	76	63	0	0.063	0
10	국민권익위원회	0	2	76	64	0	0.044	0
11	기획재정부	0	3	76	64	0	0.068	0

구분	부처	Degree (정도중심성)		Closeness (근접중심성)		Eigenvector (고유벡터중심성)		Betweenness (매개중심성)
		IN	OUT	IN	OUT	IN	OUT	
12	방송통신위원회	0	7	76	65	0	0.165	0
13	법무부	0	18	76	63	0	0.414	0
14	병무청	0	2	76	65	0	0.047	0
15	산림청	0	1	76	66	0	0.025	0
16	인사혁신처	0	2	76	66	0	0.044	0
17	중소벤처기업부	0	2	76	65	0	0.047	0
18	지자체	0	2	76	65	0	0.047	0
19	통일부	0	1	76	66	0	0.022	0
20	행정안전부	0	12	76	62	0	0.256	0

(3) 고용·임금

고용·임금 영역의 추진체계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 16>과 같으며 각 부처의 중심성은 다음 <표 64>와 같다. 우선 내향정도중심성은 교육부 24, 여성가족부 10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내향근접중심성은 교육부 16, 여성가족부 22의 순서로 나타났다. 128개의 안건 중 4건으로 고용을 위한 직접적인 법·체계의 개선이 아닌 고용을 위한 교육지원 및 프로그램제공이 안건 내용으로 고용·노동 영역임에도 교육부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고용·임금과 관련된 부처는 17개로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이 있었다.

<그림 16> 고용·임금영역 관련 부처 연결망



<표 64> 고용·임금 영역 관련 부처 중심성

구분	부처	Degree (정도중심성)		Closeness (근접중심성)		Eigenvector (고유벡터중심성)		Betweenness (매개중심성)
		IN	OUT	IN	OUT	IN	OUT	
1	교육부	24	1	16	46	-0.707	0.11	6
2	여성가족부	10	1	22	46	-0.707	0.11	0
3	고용노동부	0	4	48	44	0	0.442	0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2	48	44	0	0.221	0
5	국방부	0	1	48	45	0	0.11	0
6	국토부	0	2	48	44	0	0.221	0
7	금융위원회	0	1	48	45	0	0.11	0
8	기획재정부	0	3	48	44	0	0.331	0
9	농림축산식품부	0	2	48	44	0	0.221	0
10	문화체육관광부	0	2	48	44	0	0.221	0
11	병무청	0	1	48	45	0	0.11	0
12	보건복지부	0	2	48	44	0	0.221	0
13	산업통상자원부	0	3	48	45	0	0.331	0
14	조달청	0	1	48	45	0	0.11	0
15	중소벤처기업부	0	3	48	44	0	0.331	0
16	특허청	0	2	48	45	0	0.221	0
17	행정안전부	0	3	48	44	0	0.331	0

(4)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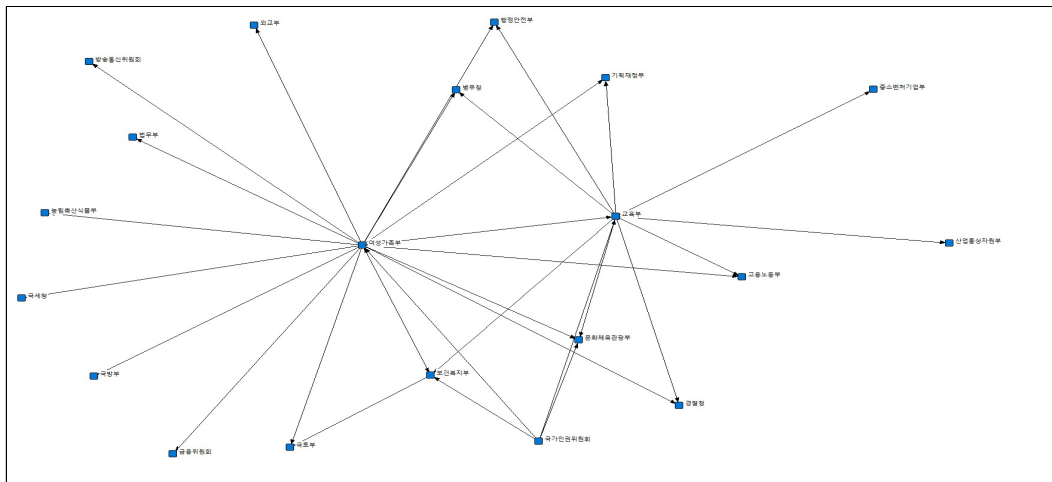
돌봄 영역의 추진체계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 17>과 같으며 각 부처의 중심성은 다음 <표 65>와 같다. 우선, 내향중심성은 보건복지부 22, 교육부, 20, 행정안전부 4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내향근접중심성 역시 보건복지부 16, 교육부 19, 행정안전부 22의 순서로 나타났다. 돌봄 영역은 포용분야의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돌봄 영역과 관련된 부처는 모두 14개로 여성가족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이 있었다.

구분	부처	Degree (정도중심성)		Closeness (근접중심성)		Eigenvector (고유벡터중심성)		Betweenness (매개중심성)
		IN	OUT	IN	OUT	IN	OUT	
1	보건복지부	22	8	16	33	0.6	0.473	18
2	교육부	20	6	19	33	0.746	0.4	10.5
3	행정안전부	4	7	22	34	0.219	0.43	0.5
4	여성가족부	2	8	24	33	0.191	0.491	0
5	경찰청	0	2	39	34	0	0.135	0
6	고용노동부	0	1	39	34	0	0.057	0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2	39	34	0	0.135	0
8	국무조정실	0	1	39	34	0	0.067	0
9	국토부	0	3	39	33	0	0.191	0
10	기획재정부	0	3	39	34	0	0.171	0
11	문화체육관광부	0	4	39	33	0	0.263	0
12	법무부	0	1	39	34	0	0.067	0
13	식약처	0	1	39	34	0	0.067	0
14	지자체	0	1	39	34	0	0.057	0

(5) 가족·공동체

가족·공동체 영역의 추진체계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 18>과 같으며 각 부처의 중심성은 다음 <표 66>과 같다. 우선 내향정도중심성의 경우 여성가족부 26, 교육부 18, 국가인권위원회 4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내향근접중심성은 여성가족부 24, 교육부 30, 국가인원위원회 34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족·공동체의 주요 안건은 한부모 가정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일·가정 양립정책 등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와 관련이 높으며 그로 인해 여성가족부의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가족·공동체와 관련된 부처는 모두 20개로 보건복지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이 있었다.

<그림 18> 가족·공동체 영역 관련 부처 연결망



<표 66> 가족·공동체 영역 관련 부처 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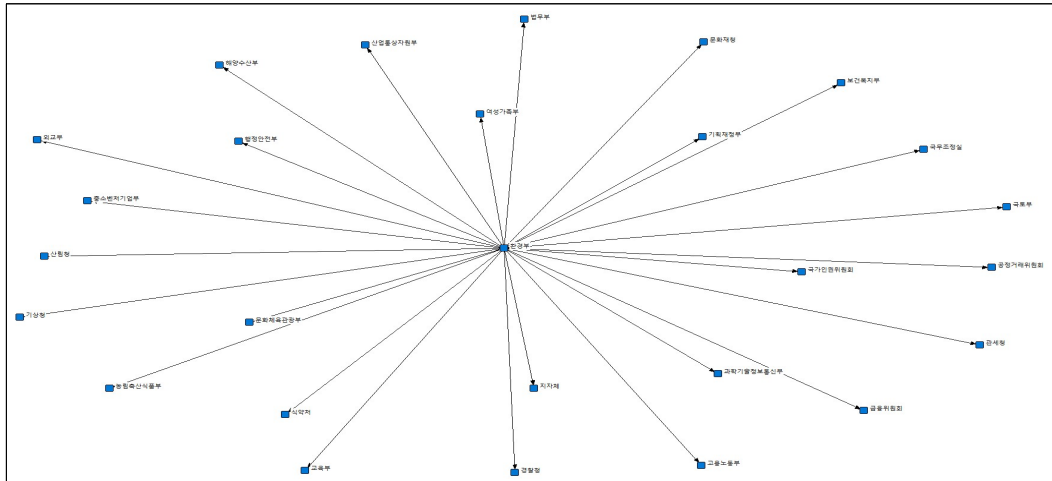
구분	부처	Degree (정도중심성)		Closeness (근접중심성)		Eigenvector (고유벡터중심성)		Betweenness (매개중심성)
		IN	OUT	IN	OUT	IN	OUT	
1	여성가족부	26	4	24	67	0.578	0.255	33.5
2	교육부	18	3	30	68	0.619	0.179	8.5
3	국가인권위원회	4	0	34	76	0.492	0	0
4	보건복지부	2	6	40	67	0.203	0.368	1

구분	부처	Degree (정도중심성)		Closeness (근접중심성)		Eigenvector (고유벡터중심성)		Betweenness (매개중심성)
		IN	OUT	IN	OUT	IN	OUT	
5	경찰청	0	4	76	66	0	0.331	0
6	고용노동부	0	5	76	66	0	0.368	0
7	국방부	0	1	76	67	0	0.09	0
8	국세청	0	1	76	67	0	0.09	0
9	국토부	0	2	76	66	0	0.219	0
10	금융위원회	0	1	76	67	0	0.09	0
11	기획재정부	0	2	76	66	0	0.152	0
12	농림축산식품부	0	1	76	67	0	0.09	0
13	문화체육관광부	0	3	76	65	0	0.152	0
14	방송통신위원회	0	1	76	67	0	0.09	0
15	법무부	0	4	76	67	0	0.358	0
16	병무청	0	2	76	66	0	0.152	0
17	산업통상자원부	0	2	76	68	0	0.126	0
18	외교부	0	1	76	67	0	0.09	0
19	중소벤처기업부	0	1	76	68	0	0.063	0
20	행정안전부	0	6	76	66	0	0.457	0

(6) 환경

환경 영역의 추진체계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 19>와 같으며 각 부처의 중심성은 다음 <표 67>과 같다. 환경 영역의 경우 9개의 안전에 대해 주관부처는 환경부 단 하나였으며, 모든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환경 관련 안전을 살펴보면 탄소 중립, 미세먼지 대책 등 몇 개의 부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으로 외향정도중심성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5, 중소벤처기업부 4로 관련 안전 참여빈도가 높았으며 환경부를 제외한 26개의 부처와 위원회가 모두 환경 관련 안전에 관여하고 있었다.

<그림 19> 환경 영역 관련 부처 연결망



<표 67> 환경 영역 관련 부처 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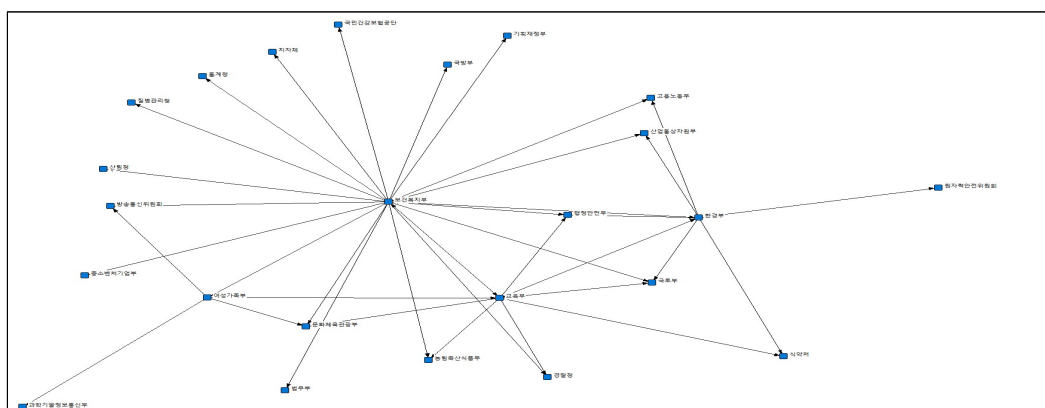
구분	부처	Degree (정도중심성)		Closeness (근접중심성)		Eigenvector (고유벡터중심성)		Betweenness (매개중심성)
		IN	OUT	IN	OUT	IN	OUT	
1	환경부	47	0	26	52	-1	0	0
2	경찰청	0	1	52	51	0	0.092	0
3	고용노동부	0	1	52	51	0	0.092	0
4	공정거래위원회	0	1	52	51	0	0.092	0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1	52	51	0	0.092	0
6	관세청	0	1	52	51	0	0.092	0
7	교육부	0	2	52	51	0	0.183	0
8	국가인권위원회	0	1	52	51	0	0.092	0
9	국무조정실	0	1	52	51	0	0.092	0
10	국토부	0	1	52	51	0	0.092	0
11	금융위원회	0	1	52	51	0	0.092	0
12	기상청	0	1	52	51	0	0.092	0
13	기획재정부	0	5	52	51	0	0.458	0
14	농림축산식품부	0	3	52	51	0	0.275	0
15	문화재청	0	1	52	51	0	0.092	0
16	문화체육관광부	0	2	52	51	0	0.183	0
17	법무부	0	1	52	51	0	0.092	0
18	보건복지부	0	3	52	51	0	0.275	0
19	산림청	0	1	52	51	0	0.092	0

구분	부처	Degree (정도중심성)		Closeness (근접중심성)		Eigenvector (고유벡터중심성)		Betweenness (매개중심성)
		IN	OUT	IN	OUT	IN	OUT	
20	산업통상자원부	0	3	52	51	0	0.275	0
21	식약처	0	1	52	51	0	0.092	0
22	여성가족부	0	1	52	51	0	0.092	0
23	외교부	0	3	52	51	0	0.275	0
24	중소벤처기업부	0	4	52	51	0	0.367	0
25	지자체	0	3	52	51	0	0.275	0
26	해양수산부	0	1	52	51	0	0.092	0
27	행정안전부	0	3	52	51	0	0.275	0

(7) 건강

건강 영역의 추진체계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 20>과 같으며 각 부처의 중심성은 다음 <표 68>과 같다. 우선 내향정도중심성은 보건복지부 27, 교육부 11, 환경부 8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내향근접중심성 역시 보건복지부 26, 교육부 37, 환경부 39의 순서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안전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민 대상 건강 보호, 정신적 안전망 구축, 자살예방 등의 안전이 포함되어 보건복지부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건강 영역 관련 부처는 총 24개로,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이 포함되었다.

<그림 20> 건강 영역 관련 부처 연결망



<표 68> 건강 영역 관련 부처 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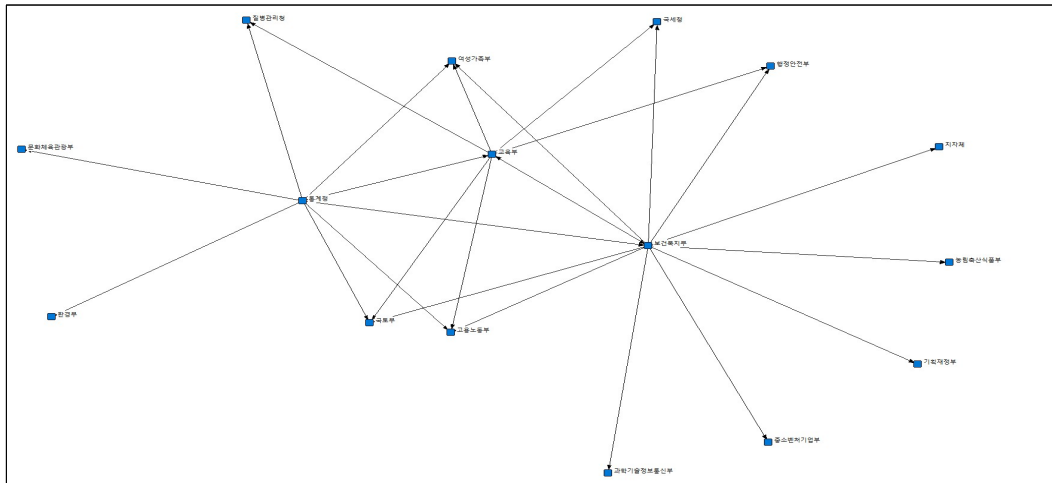
구분	부처	Degree (정도중심성)		Closeness (근접중심성)		Eigenvector (고유벡터중심성)		Betweenness (매개중심성)
		IN	OUT	IN	OUT	IN	OUT	
1	보건복지부	27	3	26	84	-0.699	0.276	33
2	교육부	11	5	37	83	-0.592	0.394	22
3	환경부	8	2	39	84	-0.365	0.189	5.5
4	여성가족부	4	4	54	84	-0.167	0.378	3.5
5	경찰청	0	2	92	82	0	0.189	0
6	고용노동부	0	3	92	83	0	0.209	0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1	92	84	0	0.107	0
8	국민건강보험공단	0	1	92	84	0	0.078	0
9	국방부	0	1	92	84	0	0.078	0
10	국토부	0	4	92	81	0	0.32	0
11	기획재정부	0	1	92	84	0	0.078	0
12	농림축산식품부	0	2	92	82	0	0.189	0
13	문화체육관광부	0	3	92	81	0	0.296	0
14	방송통신위원회	0	3	92	82	0	0.263	0
15	법무부	0	1	92	84	0	0.078	0
16	산림청	0	1	92	84	0	0.078	0
17	산업통상자원부	0	2	92	83	0	0.131	0
18	식약처	0	2	92	82	0	0.165	0
19	원자력안전위원회	0	1	92	84	0	0.053	0
20	중소벤처기업부	0	1	92	84	0	0.078	0
21	지자체	0	1	92	84	0	0.078	0
22	질병관리청	0	1	92	84	0	0.078	0
23	통계청	0	1	92	84	0	0.078	0
24	행정안전부	0	4	92	81	0	0.32	0

(8) 행정서비스 개선

행정서비스 개선 영역의 추진체계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 21>과 같으며 각 부처의 중심성은 다음 <표 69>와 같다. 우선 내향정도중심성은 보건복지부 24, 교육부 8, 통계청 8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내향근접중심성은 역시 보건복지부 21, 교육부 22,

통계청 22의 순서로 나타났다. 행정서비스 개선영역 관련 부처 중 고용노동부의 내향정도중심성은 0, 외향정도중심성은 7로 나타났는데, 안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고졸자 취업, 선취업자 지원을 위한 공공분야 고용체계 개선 및 이를 위한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마련이 포함되어있어 참여부처로서의 고용노동부 중심 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행정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부처는 모두 16개로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국토부가 포함되어있다.

<그림 21> 행정서비스 개선 영역 관련 부처 연결망



<표 69> 행정서비스 개선 영역 관련 부처 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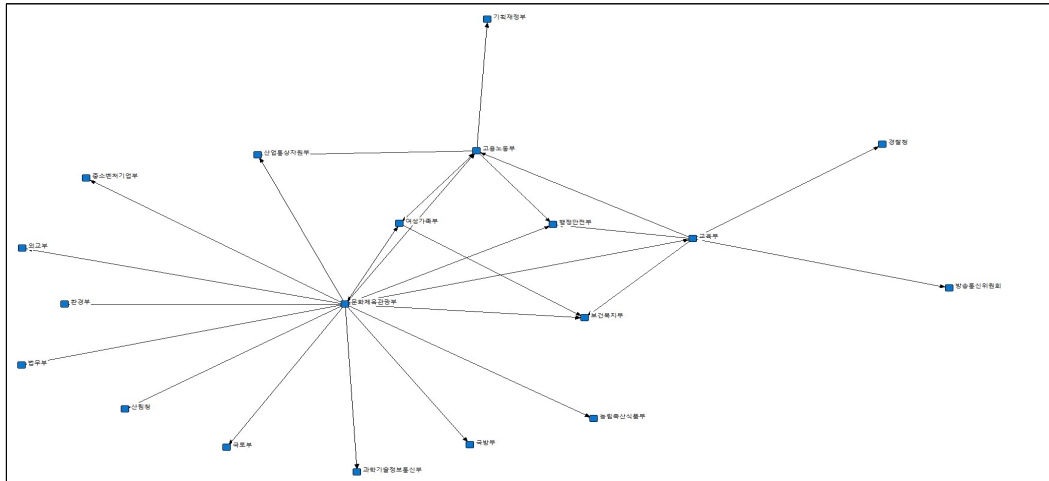
구분	부처	Degree (정도중심성)		Closeness (근접중심성)		Eigenvector (고유벡터중심성)		Betweenness (매개중심성)
		IN	OUT	IN	OUT	IN	OUT	
1	보건복지부	24	2	21	54	0.678	0.178	11
2	교육부	8	4	22	54	0.52	0.286	5
3	통계청	8	1	22	55	0.52	0.124	4
4	고용노동부	0	7	60	51	0	0.565	0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1	60	53	0	0.077	0
6	국세청	0	2	60	52	0	0.202	0
7	국토부	0	4	60	51	0	0.333	0

구분	부처	Degree (정도중심성)		Closeness (근접중심성)		Eigenvector (고유벡터중심성)		Betweenness (매개중심성)
		IN	OUT	IN	OUT	IN	OUT	
8	기획재정부	0	2	60	53	0	0.155	0
9	농림축산식품부	0	2	60	53	0	0.155	0
10	문화체육관광부	0	1	60	54	0	0.054	0
11	여성가족부	0	5	60	51	0	0.411	0
12	중소벤처기업부	0	1	60	53	0	0.077	0
13	지자체	0	1	60	53	0	0.077	0
14	질병관리청	0	2	60	52	0	0.178	0
15	행정안전부	0	4	60	52	0	0.357	0
16	환경부	0	1	60	54	0	0.054	0

(9) 여가

여가 영역의 추진체계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 22>와 같으며 각 부처의 중심성은 다음 <표 70>과 같다. 우선 내향정도중심성은 문화체육관광부 26, 교육부 6, 고용노동부 5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내향근접중심성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21, 교육부 30, 고용노동부 33의 순서로 나타났다. 정도중심성과 비교하여 고용노동부의 매개중심성은 19로 교육부의 매개중심성인 6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매개중심성이 높은 것은 여가 영역 관련 부처 연결망에서 각 부처 간의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의 안전을 예로 들면, 건강가정 기본계획(2018.08)에 관한 안전의 세부내용은 일·쉼·삶의 균형을 포함하는데, 주무 부처가 여성가족부, 참여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이다. 사회연결망 분석의 이론적 기준으로 해석하자면 위 안전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재하는 부처로 이 안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체 연결망으로 확장하면 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빈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34.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고용노동부가 19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여가 영역과 관련된 부처는 모두 19개로 여성가족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이 있다.

<그림 22> 여가 영역 관련 부처 연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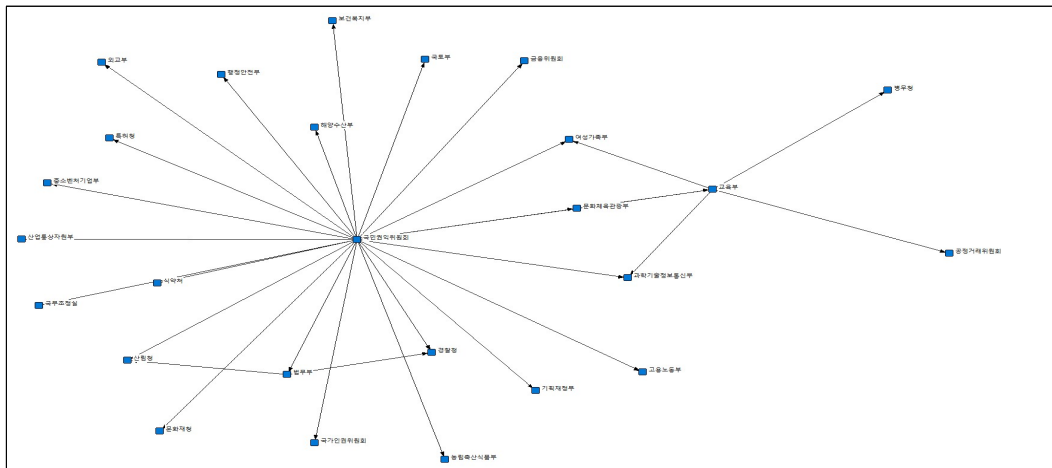
<표 70> 여가 영역 관련 부처 중심성

구분	부처	Degree (정도중심성)		Closeness (근접중심성)		Eigenvector (고유벡터중심성)		Betweenness (매개중심성)
		IN	OUT	IN	OUT	IN	OUT	
1	문화체육관광부	26	2	21	79	0.831	0.24	34.5
2	교육부	6	3	30	81	0.421	0.258	6
3	고용노동부	5	4	33	78	0.342	0.41	19
4	여성가족부	2	4	48	79	0.123	0.405	0.5
5	경찰청	0	1	90	80	0	0.093	0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2	90	78	0	0.172	0
7	국방부	0	3	90	78	0	0.258	0
8	국토부	0	1	90	78	0	0.086	0
9	기획재정부	0	1	90	77	0	0.147	0
10	농림축산식품부	0	1	90	78	0	0.086	0
11	방송통신위원회	0	1	90	80	0	0.093	0
12	법무부	0	2	90	78	0	0.172	0
13	보건복지부	0	3	90	75	0	0.324	0
14	산림청	0	1	90	78	0	0.086	0
15	산업통상자원부	0	3	90	76	0	0.319	0
16	외교부	0	1	90	78	0	0.086	0
17	중소벤처기업부	0	2	90	78	0	0.172	0
18	행정안전부	0	3	90	75	0	0.326	0
19	환경부	0	1	90	78	0	0.086	0

(10) 공정사회 구현

공정사회 구현 영역의 추진체계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 23>과 같으며 각 부처의 중심성은 다음 <표 71>과 같다. 우선 내향정도중심성은 국민권익위원회 47, 교육부 6, 법무부 2의 높은 순서로 나타났고, 내향근접중심성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27, 교육부 44, 법무부 71의 순서로 나타났다. 공정사회 구현 영역 역시 환경 영역과 유사한 관련 부처 연결망을 갖는데,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26개 전 중앙부처와 위원회가 관여된 형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향정도중심성이 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스포츠 분야 성폭력 관련 안전과 공공기관 공모전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마련과 같은 안전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23> 공정사회 구현 영역 관련 부처 연결망



<표 71> 공정사회 구현 영역 관련 부처 중심성

구분	부처	Degree (정도중심성)		Closeness (근접중심성)		Eigenvector (고유벡터중심성)		Betweenness (매개중심성)
		IN	OUT	IN	OUT	IN	OUT	
1	국민권익위원회	47	1	27	73	0.816	0.117	19
2	교육부	6	2	44	73	0.577	0.165	2
3	법무부	2	2	71	72	0	0.165	0

구분	부처	Degree (정도중심성)		Closeness (근접중심성)		Eigenvector (고유벡터중심성)		Betweenness (매개중심성)
		IN	OUT	IN	OUT	IN	OUT	
4	경찰청	0	3	75	70	0	0.282	0
5	고용노동부	0	2	75	72	0	0.165	0
6	공정거래위원회	0	1	75	72	0	0.117	0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3	75	71	0	0.282	0
8	국가인권위원회	0	2	75	72	0	0.165	0
9	국무조정실	0	2	75	72	0	0.165	0
10	국토부	0	2	75	72	0	0.165	0
11	금융위원회	0	2	75	72	0	0.165	0
12	기획재정부	0	2	75	72	0	0.165	0
13	농림축산식품부	0	2	75	72	0	0.165	0
14	문화재청	0	2	75	72	0	0.165	0
15	문화체육관광부	0	4	75	71	0	0.365	0
16	병무청	0	1	75	72	0	0.117	0
17	보건복지부	0	2	75	72	0	0.165	0
18	산림청	0	3	75	70	0	0.282	0
19	산업통상자원부	0	2	75	72	0	0.165	0
20	식약처	0	2	75	72	0	0.165	0
21	여성가족부	0	3	75	71	0	0.282	0
22	외교부	0	2	75	72	0	0.165	0
23	중소벤처기업부	0	2	75	72	0	0.165	0
24	특허청	0	1	75	72	0	0.083	0
25	해양수산부	0	2	75	72	0	0.165	0
26	행정안전부	0	3	75	72	0	0.248	0

(11)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추진체계 비교

본 장에서는 사회정책영역의 추진체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의 포용, 안전, 혁신, 통합과 같은 안전 기준과 제2장에서 새롭게 정의한 사회정책 보장영역을 기준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안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포용분야를 제외한 안전, 혁신, 통합분야에서 교육부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포용분야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다시 교육, 안전, 고용·임금, 돌봄, 가족·공동

체, 건강, 행정서비스 개선, 여가, 주거, 환경, 공정사회 구현의 영역으로 관련 부처의 중심성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사회서비스 영역별 주무 부처와 관련 부처를 비교하였다(안수란 외, 2018).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정책 보장영역은 대부분 정확하게 일치하거나 유사 영역으로 정의하여 비교 가능하였지만, 기존 선행연구의 경우 환경과 공정사회 구현 영역을 포함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었다. 비교 결과는 다음 <표 72>와 같다.

<표 72> 사회관계장관회의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주무 부처 및 관련 부처 비교

영역 구분	사회서비스 영역별(선행연구)		영역 구분	안전 사회연결망 분석	
	주무 부처	관련 부처		주무 부처	관련 부처
교육	교육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통일부	교육	교육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 및 권익보장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안전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 임금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돌봄 (아동, 성인)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돌봄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가족 지원	여성가족부	-	가족, 공동체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건강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건강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서비스 이용 지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행정 서비스 개선	보건복지부	교육부, 통계청, 고용노동부
문화 및 여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여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주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주거	국토부	보건복지부,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	-	-	환경	환경부	전부처
-	-	-	공정 사회 구현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출처: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방안 연구(안수란 외, 2018)

보장영역별 관련 부처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주무 부처의 경우 교육-교육부, 안전-여성가족부, 돌봄-보건복지부, 가족·공동체-여성가족부, 건강-보건복지부, 행정서비스 개선-보건복지부, 여가-문화체육관광부 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고용 영역의 경우 선행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주무 부처였으나 네트워크 분석결과 교육부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영역의 경우 선행연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의 주무 부처였으나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국토부의 중심성이 높아 선행연구와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안전을 기준으로 추진체계를 살펴보았을 때는 교육부의 각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 사회정책 전반적으로 주무 부처로 판단되었으나, 사회정책 보장영역을 기준으로 그 추진체계를 다시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교육과 고용·임금 영역에서만 주무 부처로 나타났다. 다만 관련 부처로 안전, 돌봄, 가족·공동체, 건강, 행정서비스 개선, 여가, 환경, 공정사회 구현 등 주무 부처가 아닌 모든 영역에서는 관련 부처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안전을 기준으로 교육부는 관련 안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및 가이드라인 배포와 같은 방법으로 전 안전에 관여하고 있지만, 사회정책 보장영역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모든 교육 관련 사항이 교육영역으로 분류되어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한국형 新 사회정책 모형

1)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모형 및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교육, 사회복지, 안전, 환경,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총 5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유형 및 세부 정책수단 활용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¹⁶⁾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유형 우선순위의 경우 각 영역별 정책수단 유형(총 4개)을 1순위(3점)부터 3순위(1점)까지 수집한 것이다. 교육 영역을 예로 들면, 1순위는 정보형, 2순위는 조직형, 3순위는 재정형과 같이 각 영역별 정책수단 유형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유형 우선순위를 요약한 결과는 다음의 <표 73>과 같다.

<표 73> 전문가 조사 결과: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유형 우선순위(평균)

구분	정보(N)	권위(A)	재정(T)	조직(O)
교육	2.05	0.61	1.54	1.80
안전	1.43	2.05	1.21	1.29
고용·임금	1.39	1.41	1.98	1.21
돌봄	1.00	0.75	2.23	2.02
가족·공동체	1.25	0.71	1.96	1.96
환경	1.77	1.91	1.16	1.16
건강	2.30	0.54	1.57	1.55
행정서비스 개선	1.59	1.38	0.64	2.39
여가	2.20	0.63	1.95	1.20
공정사회 구현	1.14	2.54	0.84	1.48
주거	1.39	1.52	2.14	0.91
소득불평등	1.61	1.20	2.21	0.89
시민참여	2.52	0.96	0.80	1.66
삶의 만족	2.09	0.46	1.96	1.46

*참조: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

16) 전문가 의견의 경우, 각 전문 영역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전체(다른 영역)에 대한 의견도 수집하였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교육 영역에서는 정보형, 조직형, 재정형, 권위형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안전 영역에서는 권위형, 정보형, 조직형, 재정형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고용·임금 영역에서는 재정형, 권위형, 정보형, 조직형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돌봄 영역에서는 재정형, 조직형, 정보형, 권위형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공동체 영역에서는 재정형·조직형, 정보형, 권위형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 영역에서는 권위형, 정보형, 재정형·조직형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건강 영역에서는 정보형, 재정형, 조직형, 권위형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행정서비스 개선 영역에서는 조직형, 정보형, 권위형, 재정형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여가 영역에서는 정보형, 재정형, 조직형, 권위형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공정사회 구현 영역에서는 권위형, 조직형, 정보형, 재정형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주거 영역에서는 재정형, 권위형, 정보형, 조직형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영역에서는 재정형, 정보형, 권위형, 조직형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시민참여 영역에서는 정보형, 조직형, 권위형, 재정형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삶의 만족 영역에서는 정보형, 재정형, 조직형, 권위형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정보형은 교육 영역, 건강 영역, 여가 영역, 시민참여 영역, 삶의 만족 영역에서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식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권위형은 안전 영역, 환경 영역, 공정사회 구현 영역에서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 불법 행위,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법·제도적 제한 및 통제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형은 고용·임금 영역, 돌봄 영역, 가족·공동체 영역, 주거 영역, 소득불평등 영역에서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장 및 복지의 관점에서 지원금 등과 같은 현금 지원, 생활공간 제공 등과 같은 현물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형은 가족·공동체, 행정서비스 개선에서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사

회혁신 등과 같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더 나아가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거나, 조직신설 등과 같은 조직변화를 통하여 다양하게 변화되는 환경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보장영역별 세부 정책수단 활용 우선순위의 경우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정책수단 유형에 해당하는 세부 정책수단(각 3개)을 1순위(2점) 및 2순위(1점)로 구분하여 수집한 것이다. 교육 영역을 예로 들면, 정보형에서 1순위(정보활용) 및 2순위(정보제공), 권위형에서의 1순위(권한 및 자격부여) 및 2순위(점검 및 평가), 재정형에서의 1순위(현물 지원) 및 2순위(현금지원), 조직형에서의 1순위(기존조직) 및 2순위(조직변화)와 같이 각 영역별 정책수단 유형 내 세부 정책수단 활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보장영역별 세부 정책수단 활용 우선순위를 요약한 결과는 다음의 <표 74>와 같다.

<표 74> 전문가 의견: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세부 정책수단 활용 우선순위(평균)

구분	정보(N)			권위(A)			재정(T)			조직(O)		
	정보 수집	정보 제공	정보 활용	권한·자격	규제·관리	점검·평가	현금 지원	현물 지원	징수	기존 조직	조직 변화	협업
교육	0.66	0.82	1.50	1.27	0.54	1.16	1.38	1.59	0.05	1.13	1.11	0.80
안전	1.20	1.20	0.66	0.45	1.34	1.20	0.63	1.18	1.07	1.14	1.00	0.77
고용·임금	0.86	0.98	1.14	0.82	1.38	0.80	1.52	1.02	0.45	0.88	0.86	1.20
돌봄	0.95	0.98	1.02	1.04	0.82	1.18	1.50	1.38	0.16	1.07	0.96	1.00
가족·공동체	0.96	1.09	0.89	0.93	0.77	1.23	1.46	1.45	0.11	1.09	1.04	0.89
환경	1.41	0.93	0.71	0.41	1.48	1.09	0.41	1.14	1.48	0.95	0.89	1.13
건강	0.73	1.38	0.93	0.95	0.66	1.30	1.16	1.54	0.30	1.57	0.64	0.80
행정서비스 개선	1.20	0.77	1.09	0.52	1.18	1.32	0.91	1.32	0.73	1.16	1.18	0.68
여가	0.82	1.38	0.82	1.13	0.73	1.05	1.46	1.30	0.25	0.98	1.13	0.91
공정사회 구현	0.95	1.18	0.93	0.84	1.27	0.93	0.46	0.93	1.46	1.13	1.07	0.82
주거	1.23	1.00	0.79	0.43	1.32	1.21	1.02	1.34	0.64	0.86	1.13	0.95
소득불평등	1.68	0.71	0.64	0.48	1.30	1.25	1.27	1.11	0.63	0.95	1.16	0.77
시민참여	0.61	1.50	0.93	1.25	0.63	1.13	1.13	1.61	0.29	0.71	1.00	1.27
삶의 만족	0.89	1.14	0.98	0.93	0.68	1.21	1.29	1.48	0.23	0.93	1.07	1.02

*참조: 1순위 2점, 2순위 1점

교육 영역에서는 정보형의 정보활용,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 재정형의 현물지원, 조직형의 기존조직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안전 영역에서는 정보형의 정보수집 및 제공, 권위형의 공적 규제·관리, 재정형의 현물지원, 조직형의 기존조직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고용·임금 영역에서는 정보형의 정보활용, 권위형의 공적 규제·관리, 재정형의 현금지원, 조직형의 협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돌봄 영역에서는 정보형의 정보활용, 권위형의 점검 및 평가, 재정형의 현금지원, 조직형의 기존조직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공동체 영역에서는 정보형의 정보제공, 권위형의 점검 및 평가, 재정형의 현금지원, 조직형의 기존조직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 영역에서는 정보형의 정보수집, 권위형의 공적 규제·관리, 재정형의 징수, 조직형의 협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건강 영역에서는 정보형의 정보제공, 권위형의 점검 및 평가, 재정형의 현물지원, 조직형의 기존조직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행정서비스 개선 영역에서는 정보형의 정보수집, 권위형의 점검 및 평가, 재정형의 현물지원, 조직형의 조직변화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여가 영역에서는 정보형의 정보제공,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 재정형의 현금지원, 조직형의 조직변화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공정사회 구현 영역에서는 정보형의 정보제공, 권위형의 공적 규제·관리, 재정형의 징수, 조직형의 기존조직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주거 영역에서는 정보형의 정보수집, 권위형의 공적 규제·관리, 재정형의 현물지원, 조직형의 조직변화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영역에서는 정보형의 정보수집, 권위형의 공적 규제·관리, 재정형의 현금지원, 조직형의 조직변화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시민참여 영역에서는 정보형의 정보제공, 권위형의 권한 및 자격부여, 재정형의 현물지원, 조직형의 협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 영역에서는 정보형의 정보제공, 권위형의 점검 및 평가, 재정형의 현물지원, 조직형의 조직변화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앞서 제시하였던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의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현황과 전문가 의견으로 제시된 정책수단 유형 및 세부 정책수단 활용 우선순위는 다음의 <표 75>와 같이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17)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안건의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유형 및 세부 정책수단의 우선순위는 빈도를 기준으로

<표 75>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유형 및 세부 정책수단 활용 우선순위(평균) 비교

구분	정책수단 유형 우선순위		세부 정책수단 활용 우선순위							
			정보(N)		권위(A)		재정(T)		조직(O)	
	안전분석	전문가	안전분석	전문가	안전분석	전문가	안전분석	전문가	안전분석	전문가
교육	권위형	정보형	정보활용	정보활용	권한·자격	권한·자격	현물지원	현물지원	협업	기존조직
안전	권위형	권위형	정보활용	정보수집 정보제공	권한·자격	규제·관리	현물지원	현물지원	협업	기존조직
고용, 임금	재정형	재정형	-	정보활용	권한·자격	규제·관리	현물지원	현금지원	기존조직	협업
돌봄	권위형	재정형	정보활용	정보활용	권한·자격 점검·평가	점검·평가	현물지원	현금지원	협업	기존조직
가족, 공동체	권위형	재정형	정보수집	정보제공	권한·자격	점검·평가	현물지원	현금지원	기존조직	기존조직
환경	권위형	권위형	정보수집 정보제공 정보활용	정보수집	권한·자격	규제·관리	현물지원	징수	기존조직	협업
건강	권위형	정보형	정보활용	정보제공	권한·자격	점검·평가	현물지원	현물지원	기존조직 협업	기존조직
행정서비스 개선	권위형	조직형	정보활용	정보수집	권한·자격	점검·평가	현물지원	현물지원	기존조직	조직변화
여가	권위형 재정형	정보형	정보제공	정보제공	권한·자격	권한·자격	현물지원	현금지원	협업	조직변화
공정사회 구현	권위형	권위형	정보수집 정보활용	정보제공	점검·평가	규제·관리	징수	징수	협업	기존조직
주거	권위형 재정형	재정형	정보활용	정보수집	권한·자격	규제·관리	현물지원	현물지원	-	조직변화
소득불평등	-	재정형	-	정보수집	-	규제·관리	-	현금지원	-	조직변화
시민참여	-	정보형	-	정보제공	-	권한·자격	-	현물지원	-	협업
삶의 만족	-	정보형	-	정보제공	-	점검·평가	-	현물지원	-	조직변화

정책수단 유형 우선순위의 경우 교육 영역, 돌봄 영역, 가족·공동체 영역, 건강 영역, 행정서비스 개선 영역, 여가 영역과 같이 총 6개의 영역에서 현행 안전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전 영역, 환경 영역, 공정사회 구현 영역, 주거 영역과 같이 총 5개의 영역에서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 활용 우선순위의 경우 정보형에서는 안전 영역, 가족·공동체 영역, 건강 영역, 행정서비스 개선 영역, 공정사회 구현 영역, 주거 영역과 같이 총 6개의 영역에서 현행 안전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권위

로 선정하였다.

형에서는 안전 영역, 고용·임금 영역, 가족·공동체 영역, 환경 영역, 건강 영역, 행정서비스 개선 영역, 공정사회 구현 영역, 주거 영역과 같이 총 8개의 영역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형에서는 고용·임금 영역, 돌봄 영역, 가족·공동체 영역, 환경 영역, 여가 영역과 같이 총 5개의 영역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조직형에서는 교육 영역, 안전 영역, 고용·임금 영역, 돌봄 영역, 환경 영역, 행정서비스 개선 영역, 여가 영역, 공정사회 구현 영역, 주거 영역과 같이 총 9개의 영역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세부 정책수단이 모두 일치하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정책수단 중에서 1개의 정책수단 불일치는 교육 영역과 같이 총 1개로 나타났으며, 2개의 정책수단 불일치는 돌봄 영역, 건강 영역, 여가 영역과 같이 총 3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3개의 정책수단 불일치는 안전 영역, 가족·공동체 영역, 환경 영역, 행정서비스 개선 영역, 공정사회 구현 영역, 주거 영역과 같이 총 6개로 나타났다. 끝으로 4개의 정책수단 불일치는 고용·임금 영역과 같이 총 1개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정책수단 유형 및 세부 정책수단 활용 우선순위에 대한 현행 안전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의 일치여부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적용하여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 영역부터 접근할 경우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보다 용이할 것이다.

즉, 정책수단 유형 우선순위와 세부 정책수단 활용 우선순위가 모두 비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해당 보장영역은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1순위)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영역, 돌봄 영역, 가족·공동체 영역, 건강 영역, 행정서비스개선 영역, 여가 영역과 같이 총 6개의 보장영역은 보다 우선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의견에서 제시된 정책수단의 적용 가능 여부를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수단 유형 우선순위는 비일치하고, 세부 정책수단 활용 우선순위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해당 보장영역은 그 다음으로 우선적으로 고려(2순위)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수단 유형 우선순위는 일치하고, 세부 정책수단 활용 우선순위는 비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해당 보장영역은 그 다음으로 우선적으로 고려(3순위)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 영역, 고용·임금 영역,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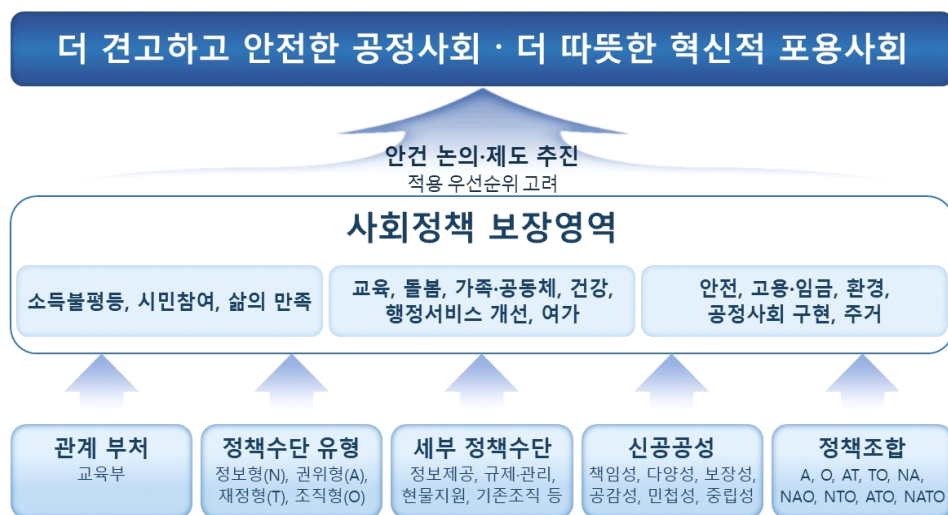
영역, 공정사회구현 영역, 주거 영역과 같이 총 5개의 보장영역이 해당 우선순위(3순위)로 나타났다. 끝으로 정책수단 유형 우선순위와 세부 정책수단 활용 우선순위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해당 보장영역은 그 다음으로 우선적으로 고려(4순위)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득불평등 영역, 시민참여 영역, 삶의 만족 영역과 같이 총 3개의 영역에서는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지지 않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2) 新 사회정책 보장 모형 도출

여기에서는 앞서 논의하였던 내용들을 종합하여 적용 우선순위를 분류하였으며, 각 보장영역별 관계 부처, 정책수단 및 세부 정책수단, 신공공성 가치, 사전검토 가능한 정책 조합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4> 사회정책 보장 모형 개요



사회정책 보장 모형의 개요는 위의 <그림 24>와 같다. 적용 우선순위는 정책수단 유형 및 세부 정책수단 활용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의 일치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모두 일치하지 않을 경우 1순위 적용, 정책수단 유형만 일치할 경우 2순위 적용, 세부 정책수단만 일치할 경우 3순위 적용, 모두 일치할 경우 4순위 적용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소득불평등 영역, 시민참여 영역, 삶의 만족 영역의 경우 우선 고려대상으로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보장영역별 관계 부처의 경우 사회관계장관회의 추진체계 연결망 분석 결과에 제시된 주요 부처를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정책수단 및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전문가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사회관계장관회의 보장영역별 정책수단 현황과 비교하여 일치 및 불일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덧붙여 신공공성 가치의 경우 보장영역별 신공공성 가치 우선순위(중요도)를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끝으로 정책조합 사전검토의 경우 신공공성 가치와 정책수단 조합의 상관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합들을 대상으로 정책수단 유형에 제시된 정책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정책수단 조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교육 영역을 예로 들면, 해당 영역의 신공공성 가치는 공유된 책임성이며, 공유된 책임성과 유의미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NA, NAO, NTO, ATO, NATO 조합 중에서 정보형을 포함하고 있는 NA, NAO, NTO, NATO를 사전검토 가능한 정책조합으로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바탕으로 제시된 사회정책 보장 모형(안)은 다음의 <표 76>과 같다. 먼저, 적용 우선순위의 경우 우선 고려대상(신규, 3개 영역: 소득불평등, 시민참여, 삶의 만족), 1순위(매우 시급, 6개 영역: 교육, 돌봄, 가족·공동체, 건강, 행정서비스 개선, 여가), 3순위(약간 시급, 5개 영역: 안전, 고용·임금, 환경, 공정사회 구현, 주거)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즉, 제도 추진 및 안건 논의 시 이와 같은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하고, 전문가 의견에서 추가적으로 제시된 정책수단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할 경우 운영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각 보장영역별 관계 부처의 경우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부가 사회정책 보장영역에서 주요 부처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며, 향후에도 사회정책 보장영역에서의 교육부의 기능 및 역할이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76> 사회정책 보장 모형(안)

적용 우선순위	보장영역	관계 부처	정책수단 유형		세부 정책수단		신공공성	정책조합 사전검토
			일치	불일치	일치	불일치		
우선 고려대상 (신규제안)	소득불평등			재정형		정보수집 규제·관리 현금지원 조직변화	포용적 공감성	
	시민참여			정보형		정보제공 제한·자격 현물지원 협업	공유된 책임성	NA, NAO, NTO, NATO
	삶의 만족			정보형		정보제공 점검·평가 현물지원 조직변화	공유된 책임성	NA, NAO, NTO, NATO
1순위	교육	교육부, 고용노동부		정보형	정보활용 제한·자격 현물지원	기존조직	공유된 책임성	NA, NAO, NTO, NATO
	돌봄	보건복지부, 교육부		재정형	정보활용 점검·평가	현금지원 기존조직	공유된 책임성	NTO, ATO, NATO
	가족, 공동체	여성가족부, 교육부		재정형	기존조직	정보제공 점검·평가 현금지원	종합적 다양성	
	건강	보건복지부, 교육부		정보형	현물지원 기존조직	정보제공 점검·평가	공유된 책임성	NA, NAO, NTO, NATO
	행정서비스 개선	보건복지부, 교육부		조직형	현물지원	정보수집 점검·평가 조직변화	공유된 책임성	NAO, NTO, ATO, NATO
	여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정보형	정보제공 제한·자격	현금지원 조직변화	공유된 책임성	NA, NAO, NTO, NATO
3순위	안전	여성가족부, 교육부	권위형		현물지원	정보수집 정보제공 규제·관리 기존조직	민첩성	A, O, AT, TO
	고용, 임금	교육부, 여성가족부	재정형			정보활용 규제·관리 현금지원 협업	공유된 책임성	NTO, ATO, NATO
	환경	환경부	권위형		정보수집	규제·관리 징수 협업	인본적 보장성	
	공정사회 구현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권위형		징수	정보제공 규제·관리 기존조직	적극적 중립성	
	주거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재정형		현물지원	정보수집 규제·관리 조직변화	인본적 보장성 종합적 다양성	

정책수단 유형의 경우 교육(정보형), 돌봄(재정형), 가족·공동체(재정형), 건강(정보형), 행정서비스 개선(조직형), 여가(정보형)와 같이 6개 영역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 안전에서의 정책수단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권위형), 고용·임금(재정형), 환경(권위형), 공정사회 구현(권위형), 주거(재정형)와 같이 5개 영역에서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부 정책수단의 경우 4개의 세부 정책수단이 모두 일치하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개의 세부 정책수단이 일치하는 영역은 교육과 같이 1개로 나타났고, 2개의 세부 정책수단이 일치하는 영역은 돌봄, 건강, 여가와 같이 3개로 나타났으며, 1개의 세부 정책수단이 일치하는 영역은 가족·공동체, 행정서비스 개선, 안전, 환경, 공정사회 구현, 주거와 같이 6개로 나타났다. 끝으로 세부 정책수단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영역은 고용·임금과 같이 1개로 나타났다.

신공공성 가치의 경우 공유된 책임성(8개 영역), 종합적 다양성(2개 영역), 인본적 보장성(2개 영역), 포용적 공감성(1개 영역), 민첩성(1개 영역), 적극적 중립성(1개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책에서는 사회수요를 파악하여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인식 개선 및 사회문화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 및 논의 확산과 더불어 책임성의 공유를 통한 참여의 효과성 제고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유된 책임성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전검토 가능한 정책조합의 경우 A, O, AT, TO, NA, NAO, NTO, ATO, NATO와 같이 9개 조합으로 나타났으며, 권위형(A) 또는 조직형(O) 또는 재정형(T)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유된 책임성과 유의미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조합에서 정보형(N)을 포함하고 있는 NA, NAO, NTO, NATO 조합에 대한 사전검토 가능 영역은 시민참여, 삶의 만족, 교육, 건강, 여가와 같이 5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유된 책임성과 유의미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조합에서 재정형(T)을 포함하고 있는 NTO, ATO, NATO 조합에 대한 사전검토 가능 영역은 돌봄, 고용·임금과 같이 2개로 나타났다. 또한 공유된 책임성과 유의미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조합에서 조직형(O)을 포함하고 있는 NAO, NTO, ATO, NATO 조합에 대한 사전검토 가

능 영역은 행정서비스 개선과 같이 1개로 나타났다. 끝으로 민첩성과 유의미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조합에서 권위형(A)을 포함하고 있는 A, O, AT, TO 조합에 대한 사전검토 가능 영역은 안전과 같이 1개로 나타났다.

제4장 한국형 新 사회정책 구현 법제도적 방안

1. 기본 방향

1)한국형 新사회정책 구현 역할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사회관계장관회의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에 제2항과 제4항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부총리로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의 규정에 의하면,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 수석비서관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교육부 차관보가 된다(제5조 구성원 등).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의장: 교육부 차관보)를 두고, 실무조정회의는 1)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실무 협의·조정을 하도록 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한다(제10조 실무조정회의). 본 규정(제10조의2와 3)에 의하면,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장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관계 부처의 장에게 1)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3)관계 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4)관계 부처

의 장은 회의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현황 및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 15.1 사회부총리제 운영 이후 누적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총 112회, 안건 290건을 논의하였다.

<표 77> 사회부총리제 도입 후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및 안건 현황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9.30)	계
회의	15회	13회	10회	13회	18회	22회	21회	112회
	51회				61회(최근3년)			
안건	32건	33건	24건	35건	45건	56건	65건	290건
	124건				166건(최근3년)			

※ ❶ '15.1 사회부총리제 운영 이후 누적 사장회의 총 112회, 안건 290건 논의
 ❷ 최근 3년('19.1.1~'21.11.24.) 사장회의 총 61회, 안건 166건 논의(이전 4년 실적 상회)

<표 78>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및 안건 현황

연도	2017 (5.10~)	2018	2019*	2020	2021(~11.30)	계
회의	7회	13회	18회	22회	21회	81회
안건	17건	35건	45건	56건	65건	218건

* '19.4월 이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월 2회 개최로 확대

분야별 포용·안전·혁신·통합, 4대 가치별 안건 현황은 ' 17.5 ~ ' 21.11 동안 4대 분야별 회의 안건이 높은 수준(182.0%)으로 증가하였다.

<표 79> 2015~2021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현황 분석('21.11.24 기준)

구분	포용	안전	혁신	통합	계
'15.1~'17.3	14	32	16	10	72
'17.5~'21.11	50	71	52	30	203

안전 종류별 현황에서는 기획의제가 170건, 현안의제 71건, 비공개의제 27건, 점검의제 22건으로 총 290건이 회의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표 80> 2015~2021 사회관계장관회의 안전 종류별 현황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기획의제	22	21	14	23	21	37	32	170
현안의제	8	12	10	6	8	10	17	71
비공개제	2	-	-	5	9	7	4	27
점검의제*	-	-	-	1	7	2	12	22
합계	32	33	24	35	45	56	65	290

* 신규과제가 다수 반영된 점검의제는 기획의제로 분류

안전 상정 주관부처 건수 비율 현황을 보면, 교육부가 총 141건으로 48.6%로 가장 높고, 보건복지부 36건으로 12.4%, 여성가족부 25건 8.6%, 환경부 24건 8.3%, 문화체육관광부 19건 6.6%, 행정안전부 13건 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81> 2015~2021 사회관계장관회의 안전 상정 주관부처 현황

안전 주관 부처	상정 건수(건)	비율(%)
교육부	141	48.4
보건복지부	36	12.4
여성가족부	25	8.6
환경부	24	8.3
문화체육관광부	19	6.6
행정안전부	13	4.5
국민권익위원회	7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1.7
고용노동부	5	1.7
경찰청	3	1.0
개인정보위원회	2	0.7
법무부, 산업부, 국토부, 국방부, 방통위, 인권위, BH, 통계청, 식약처, 정책기획위	10 (각 1건)	3.4 (각 약0.34%)
합계	290	100%

사회관계장관회의 안전(총 290건)을 세부 과제별로 체계화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대 분야(포용, 안전, 혁신, 통합)로 구분되며, 포용 분야의 경우 취약계층 돌봄, 사회적기 본권 보장, 가족지원 등으로 분류되며, 안전 분야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 폭력근절, 생

활환경 안전 등으로 분류되고, 혁신 분야의 경우 인재양성, 비대면사회 선도, 인구급변 대응 등으로, 마지막으로 통합 분야의 경우 공정사회 구현과 소수집단 지원 등으로 분류되어 총 11개로 분류된다.

<표 82> 사회관계장관회의 세부 과제별 현황

구분		세부 과제		
포용	취약계층 돌봄	아이돌봄 확대	노인돌봄 체계화	통합돌봄 정착
	사회적기본권 보장	공공부조 확대	사회서비스강화	문화복지 확대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포용	일가정양립	여성고용 확대
안전	아동청소년 보호	아동학대 예방·근절	위기청소년지원	이주배경청소년 보호
	폭력 근절	학교폭력근절	성폭력근절	스포츠폭력근절
	생활환경 안전	탄소중립사회 전환	국민건강보호	신체·정서안전망 구축
혁신	인재양성	신기술 인재 양성	평생교육훈련 확대	직업·진로교육 개선
	비대면사회 선도	디지털사회 선도	데이터기반 행정 구현	디지털 격차 해소
	인구급변 대응	고령사회 대비	학령인구 감소 대비	지역 균형 발전
통합	공정사회 구현	미디어 문해력 제고	직무중심 사회 구축	엄정한 법집행
	소수집단 지원	다문화 수용성 제고	장애인 지원 강화	인권 보장

2022년도에는 교육부를 비롯한 총 22개 사회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공정·혁신·포용 등 4개 분야 52개의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으며, 2022년 사회정책 방향은 1)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축(안전분야), 2) 함께 살아가는 공정 사회 실현(공정분야), 3)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역량 배양(혁신분야), 4)지속가능한 포용사회 구현(포용분야)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2) 사회부총리의 정책조율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교육부 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에 관한 일반인의 기대와 현실 간 간격이 크다는 인식과 사회부총리가 사회정책을 총괄·조정한다고 인식하는 국민은 많지 않으며, 특히, 교육부의 사회정책 조정 기구는 1개 과 19명¹⁸⁾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조율 기

능 4개 과 127명 대비 15%에 불과하다(매일경제, 2020.8.27.). 사회부총리의 정책 조정 구조와 기능이 약한 것은 그간 경제성장정책 우선적 추진과 무관하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제정책의 주관부서로서 위상과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사회부총리는 사회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수단이 없음은 물론 관련 조직과 인력의 절대적 부족이 이러한 사회정책의 주관부서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사회정책 확장을 피할 수 없는데, 올해 보건·복지·고용·교육 등 사회 분야 예산은 국가예산액 512조원의 반을 넘는다. 성장의 질과 지속가능성은 정책의 합리성과 비례한다. 국민 기대에 맞게 조직·예산·기능을 지혜롭게 조정(fine tuning)할 시점임은 틀림 없다는 상황이다. 사회정책 조정의 출발점은 해당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이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정책조정에서 가장 어려운 사안은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관할권’, ‘정책방향’, ‘예산 확보와 배분’ 순으로 나타났고, 부처 간 정책 조정이 어려운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부처의 이기주의’, ‘정책결정 과정 및 방식의 폐쇄성’과 ‘정책조정 담당기구의 역할 미흡’도 함께 지적되었으며, 부처 간 정책조정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국무총리에 의한 정책조정’이며, 다음으로 ‘국무회의에 의한 정책조정’¹⁸⁾, ‘관계장관회의에 의한 정책조정’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관계장관회의와 같은 수평적 정책조정을 선호하는 것은 부처 간 협의회가 필요한 대부분의 사안은 행정부 내 유사중복 기능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개별 부처들의 협의회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정책조정체계 하에서 주요 사안의 결정이 수평적 관계보다는 특정 부처에 의사에 의하여 주도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보

18) `19년 6월 사회부총리의 부처간 사회정책 조정 역할 강화를 위해 교육부 차관보 직위 신설과 사회관계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사회지표 개발·관리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실무인력 7명을 증원하였음(교육부 보도자료, 2019.6.18.)

19) 부처 간 정책조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수준에서 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안은 부처 간 실무적 조정을 거쳐 합의된 내용을 국무(차관)회의에서 의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국무총리에 의한 정책조정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로 부처 간 이해관계와 정책 수혜자의 차이로 수평적 정책조정체계를 통해 정책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고, 따라서 부처 이상 수준의 상급기관에 의한 조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p.130)

고 있고, 따라서 부처 간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단계에서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수직적 정책조정 기능에 의존할 수 있다. 부처 간 정책조정을 위해서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각각 경제 관련 부처들과 사회 관련 부처들에 대한 정책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동시에 경제 분야와 사회분야 간의 정책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국무총리실이 정책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같은 수평적 정책조정체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행정부처 간 수평적 그리고 자발적인 정책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된 정책이나 정책조정의 결과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편성권의 분권화는 예산 편성 담당 부처는 정부 예산의 총규모와 영역별 배분을 담당하고, 관계 장관회의의 협의를 거쳐 해당 분야 부총리는 영역 내 예산 배분을 담당하며, 개별 부처의 장관은 부처에 배분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의미할 것이다. 예산편성권의 분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권을 매개로 하는 정책조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같은 수평적 정책조정체계가 정착되어 활성화되면, 상위 정책조정기제의 수직적 정책조정의 부담이 경감되고, 전문 부처주의에 입각한 상향적 정책협업 조정체계의 구축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권위형 정책수단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떠한 법·제도적 규제를 추진 또는 철폐하게 된다면 해당 규제에 찬성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도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규제 추진 또는 철폐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규제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공론화 기구 등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는 공공갈등에 대한 합의형성적 접근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 기구는 공청회, 설명회 등의 소극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정부와 이해관계자(또는 지역주민) 간 쌍방향적 의사소통에 기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정정화,

2018). 또한 공론화 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공론화 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교수, 연구원, 현장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의제 선정, 숙의 과정, 결과 공표에 이르는 모든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하동현, 2020).

또한 아래의 <표 83>과 같이 앞서 제시하였던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에 대한 추진체계 연결망의 보장영역별 중심성 상위 부처를 고려할 경우, 중심성 상위 부처에 해당되는 부처별 위원회 조합을 각 보장영역별 실무위원회 연합 모형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영역을 예로 들면, 각 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교육위원회(교육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4차산업혁명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간 연합·협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해당 부처의 정책자문위원회 간 정책 협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무위원회 연합 모형은 각 보장영역별 사회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3> 사회관계장관회의 사회정책 보장영역별 중심성 상위 부처

구분	교육	안전	고용·임금	돌봄	가족·공동체	환경	건강	행정서비스 개선	여가	공정사회 구현
1	교육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
2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부	경찰청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환경부	통계청	고용노동부	법무부
4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3) 한국형 新 사회정책 정책조합 모형을 활용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한국형 사회정책 정책조합의 새로운 모형은 기본적으로 신공공성 핵심 공공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정책 보장영역을 전주기적 과정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을 Hood

의 NATO 모형에 근거하여 보장영역별 정책조합 가능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정책과정(예, 회의 안건 도출, 안건협의, 의사결정, 집행, 평가 환류) 초기부터 잠재적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조합 체크리스트를 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에 대한 정책조합을 분석한 결과, 권위형 또는 정보형, 그리고 권위형과 정보형이 결합되어 있는 조합이 총 128개 안건 중 70개(54.7%)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운영에 있어서 권위형 및 정보형 정책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보수집(실태조사 등), 정보제공(홍보 등), 정보활용(교육·훈련,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정책수단과 더불어 권한 및 자격부여, 공직 규제·관리(법·제도적 제한 및 통제 등), 점검 및 평가(모니터링, 성과평가 등)와 관련된 정책수단을 보다 세부적으로 체계화하여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에 제기될 것이다.

4) 한국형 新 사회정책 정책조합 모형 범부처 확산 노력과 성과 도출

교육부는 이러한 한국형 정책조합 모형을 실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적용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범정부적 정책조합 모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확산 노력과 성과를 분석하여 현 정부의 정책조합 모범 사례화 할 필요가 있다. 신공공성 기반의 사회정책 정책조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경제정책 정책조합에의 적용에도 적용될 여지와 논거는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범정부적 정책조합 확산 노력과 그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Dahl, R. A., & Lindblom, C. E. (1953). Politics, economics and welfare: planning and politico-economic systems, resolved into basic processes. New York: Harper & Brothers.
- Doern, G. B., & Phidd, R. W. (1983). Canadian Public Policy: Ideas. Structure, Process, 57.
- Hood, C. (1986). The tools of government (pp. 978-1). Chatham, NJ: Chatham House.
- Hood, C. C., & Margetts, H. Z. (2007). The tools of government in the digital age. Macmilla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 Howlett, M. (1991). Policy instruments, policy styles, and policy implementation: National approaches to theories of instrument choice. Policy studies journal, 19(2), 1-21.
- Howlett, M., Ramesh, M., & Perl, A. (2009). Studying public policy: Policy cycles and policy subsystems (Vol. 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Ipsos (2021). What Worries the World?
- Pitts, D. W. (2010). Organizational diversity and public service performance. Public management and performance: Research directions, 178-206.
- Vedung, E. (2010). Policy instruments: typologies and theories' in Marie-Louise Bemelmans-Videc; Ray C. Rist; Evert Vedung. Carrots sticks and sermons.
- 강수택. (2011). 시민주의 사회정책의 토대로서 인권과 연대. 사회이론, (39), 75-114.
- 김연수, & 강민아. (2016). 정책목적과 정부자원에 따른 정책도구의 선택과 조

- 합: 한국 주민등록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0(2), 29-58.
- 고명철. (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47(2), 1-30.
- 박동. (2007). 고용·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사회정책 패러다임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백완기. (2007). 한국행정과 공공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2), 1-22.
- 오민수, & 김재일. (2009). 정책도구 조합과정 분석틀의 모색.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309-332.
- 유두호, 엄영호, & 윤선일. (2021). 정부의 공정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정부혁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4), 297-319.
- 이제복, & 최상욱. (2018). 공공서비스 인공지능 ML 적용과 공공가치. 정부학연구, 24(1), 3-27.
- 석재은. (2014).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념 정립과 향상 방안: 현행 전략의 한계와 ‘좋은 돌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한국사회복지학, 66(1), 221-249.
- 정정화. (2018).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의 성공조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1), 101-124.
- 최상욱. (2016). 뉴노멀 시대 新공공성 탐색. 정부학연구, 22(2), 5-25.
- 최상욱. (2020). 뉴노멀 코로나 위기관리 거버넌스. 국정관리연구, 15(3), 1-26.
- 최상욱. (2021). 위험사회의 일상화와 정부 역할 그리고 새로운 재난정책연구 가능성과 방향. 한국정책학보, 35(5), 57-75.
- 하동현. (2020).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공론화 단계분석: ‘2018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공론화 사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1), 27-5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개선방안연구 (연구보고서)
- 행정안전부(2020).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 교육부(2022). 생애주기별 융합형 보장정책 모델 개발 과제 제안요청서
- 교육부(2022). 2022년 사회정책 방향 보도자료(2022.1.26.)
- 교육부(2019). 교육부 차관보 신설 관련 보도자료(2019.6.18.
- 동아일보(2021). 소셜미디어 그들은 누구인가? (2021.12.23.일자)
- 매일경제(2020). 사회부총리의 정책조율 역할 강화해야(2020.8.27.일자)
- 보건복지부(2021.1) 건강수명 관련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21.1) 공공병상 관련 보도자료
- 통계청(2021.12). 한국의 사회동향 보도자료
- 한국언론재단(2021). 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조사

연구진

생애주기별 융합형 보장정책 모델 개발

책임연구원	최상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박인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수동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연구보조원	윤치중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비매품/무료
90330

9 791192 629018
ISBN 979-11-92629-01-8